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의 국세청자료 연계 및 활용방안 연구

최현수 이서현 임완섭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와 용역계약(2010.11.25)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의
국세청자료 연계 및 활용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머 리 말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이에 따라 공적자료 우선 적용원칙에 따른 자산조사의 실시 및 각종 복지대상 선정 및 급여, 확인조사 및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안정화 단계에서 일부 공적자료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하여 원자료 기준시점 및 생산주기, 자산조사 시점 및 원자료 제공시점 간 시차, 공적자료의 개념 차이에 따른 정확성 및 신뢰성, 공적자료 우선 적용원칙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한계점 검토 및 지속적인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복지대상자 자산조사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공적자료인 국세청의 각종 소득자료 연계 및 활용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소득자료 활용과 관련된 시차 및 형평성 문제, 일용근로자 및 자영업자 자료 부재 및 소득 개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국세청 자료의 활용과정 상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념 혼란 및 민원으로 인한 불편함 등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사회복지 통합업무지침의 기본적 조사원칙인 ‘공적자료 우선 적용원칙’에 부합할 수 있는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활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 자료 유형별 기본 개념 및 속성, 국세청 자료의 연계 및 활용 상의 현실 적합성을 분석하고, 향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로서 연계 및 활용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보장연구실 최현수 부연구위원 책임 하에 이서현 연구원, 임완섭 전문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연구진의 노고와 함께, 보건복지부 손일룡 급여기준과장과 정순길 사무관, 서민수 사무관, 배수미 주무관 등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용, 복지정책 대상 선정 및 급여 관련 사회복지통합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급여기준과 직원들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또한, 일선 지자체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직접 활용하면서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귀중한 의견을 제공하여 주신 본 연구원의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최종보고서를 검독하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김진수 연구위원과 여유진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목 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2
제2장 국세청 자료 유형별 개념 및 주요내용	19
제1절 종합소득	19
제2절 원천징수	26
제3절 근로소득	36
제4절 일용근로자 소득과약	44
제5절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54
제6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67
제7절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81
제8절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91
제9절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현황신고	105
제10절 부가가치세	112
제3장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국세청 자료 활용사례	119
제1절 국민건강보험	119
제2절 국민연금	132
제3절 근로장려세제	150
제4장 외국의 국세청 자료 활용사례 및 동향	171
제1절 호주	171
제2절 미국	176
제3절 영국	183

제5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전후 국세청 자료에 대한 인식 및 활용실태	207
제6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의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활용 개선방안	224
참고문헌	299

표 목차

〈표 3-1〉 조합방식하의 부과요소별 보험료 구성비	120
〈표 3-2〉 기본보험료 구성비 변화(1988~1997년)	121
〈표 3-3〉 조합 대비 부과요소별 보험료 배분비율 비교	123
〈표 3-4〉 평가소득 요소의 기준구간표	125
〈표 3-5〉 구간별 평가점수	125
〈표 3-6〉 관련 법 변천 내용	126
〈표 3-7〉 현행 직역간 보험료 부과기준 비교표	128
〈표 3-8〉 현행 직장보험료 부담율	129
〈표 3-9〉 현행 직장보험료 보수월액 범위별 월보험료 산정방법	129
〈표 3-10〉 현행 지역보험료 산정방법	131
〈표 3-11〉 현행 부과자료 유형 및 연계시기	132
〈표 3-12〉 입수·활용중인 주요 국세청 소득관련자료	133
〈표 3-13〉 가입자종별 입수 소득자료('08 귀속소득)	134
〈표 3-14〉 적용사업장 규모별 사업장 및 가입자 비중(2010.11) ..	136
〈표 3-15〉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의 변화 추이	140
〈표 3-16〉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중	142
〈표 3-17〉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의 납부예외 사유별 현황(2010.11) ·	142
〈표 3-18〉 '09년 시행령 개정 전후의 소득월액 정기결정방식의 비교	144
〈표 3-1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의 추이	148
〈표 4-1〉 캘리포니아 주의 IEVS	178
〈표 4-2〉 아이다호의 IVES	179
〈표 4-3〉 주요급여별 부정 및 오류수급의 규모	188

그림 목차

[그림 2-1] 소득세 과세체계	20
[그림 2-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입력 흐름도	47
[그림 3-1] 조합방식하의 보험료 부과모형	120
[그림 3-2] 지역가입자에 대한 통합보험료 부과모형	122
[그림 3-3] 지역가입자 통합보험료 부과모형 시 조합방식하의 부과요소 활용	122
[그림 3-4] 부과표준소득에 적합한 지역가입자 통합부과체계 전환 ·	127
[그림 3-5] 현행 지역보험료 부과모형	130
[그림 4-1] DWP와 HMRC의 과다지급 규모	186
[그림 4-2] 현재 주요 실직급여(out-of-work benefits) 에서의 수급조건 수준	191
[그림 4-3] 향후 주요 실직급여(out-of-work benefits) 에서의 수급자격 요건 수준	192

01

K
I
H
A
S
A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이에 따라 공적자료 우선 적용 원칙에 따른 자산조사의 실시 및 각종 급여대상 선정, 확인조사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안정화 단계에서 일부 공적자료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하여 원자료 기준시점 및 생산주기, 자산조사 시점 및 원자료 제공 시점 간의 시차, 공적자료의 개념 차이에 따른 정확성 및 신뢰성, 공적자료 우선 적용 원칙의 현실 적합성 및 보완 필요성에 대한 한계를 안고 있음
- 특히, 이러한 한계와 관련하여 복지정책 대상자의 자산조사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공적자료인 국세청의 각종 소득자료 연계 및 활용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 국세청 소득자료 활용과 관련된 시차 및 형평성 문제, 일용근로자 및 사업소득자의 자료 부재 및 소득 개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국세청 자료 활용과정 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념 혼란 및 민원으로 인한 불편 등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사회복지

통합 업무지침의 기본적 조사원칙인 ‘공적자료 우선 적용원칙’에 부합할 수 있는 연계 및 활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국세청 자료의 기본 개념 및 연계, 활용 상의 현실 적합성을 분석하고, 향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로서 연계 및 활용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에 반영하고자 함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국세청에서 과세 및 근로장려세제 운영을 위하여 조사 및 생산하는 소득·재산 관련 자료 현황 파악
 - － 국세청이 생산하고 있는 소득자료 유형별 개념 및 주요 내용
 - － 국세청 자료 유형별 특성 및 자산조사 시 연계 및 활용을 위한 현실 적합성
- 국내·외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국세청 자료 활용사례 및 동향 검토
 - － 국내 주요 복지정책 분야별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활용사례
 - － 외국의 복지대상자 자산조사 및 사후관리 시 국세청 자료의 활용 현황 및 최근 동향
-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국세청 자료 활용실태 및 문제점
 -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전후 지속되고 있는 국세청 자료 관련 업무 수행 및 활용방식
 - － 국세청 자료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도출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활용실태 및 문제점
 - － 국세청 자료 유형별 연계 및 활용 현황 세부내역 검토를 통하여 현행 국세청 소득자료 중 미연계 자료 및 문제점 도출
- 공적자료 우선 적용원칙에 기반한 국세청 자료 연계 확대 및 활용

개선방안 제시

- 공적자료 우선 적용원칙 등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신청조사 및 사후관리 원칙 및 방향에 대한 검토 및 한계 도출
- 현행 공적자료 구축 기반 및 연계 가능성의 한계를 고려한 공적자료 우선 적용원칙의 보완방향 제시
 - 제도별, 연계자료 유형별 공적자료 우선 적용원칙의 분리 적용
 - 최초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사후관리의 역할 구분
 -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산조사 관련 사항 중 일부 변동 사항에 대한 수급자의 신고의무 강화 및 공적자료 조정에 대한 입증책임 강화
 - 최초 선정 이후 각종 공적자료의 주기적 변동 관리 및 적용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변동사항 신고의무 강화
 - 국세청 자료 등 각종 공적자료의 특성 및 시차를 고려한 부정수급 등 부정적 급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국세청 자료의 개념 및 목적, 특성 및 한계에 기반한 현행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의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활용 개선방안 제시
 - 국세청 자료 유형별(사업자등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복지대상 자산조사 영역별(일용근로자 소득파악, 사업소득자 소득파악 및 근로소득자와 형평성 제고, 부양의무자 판정 등)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활용 개선방안 도출 및 제안

□ 각 장별 연구내용 구성

○ 제2장 국세청 자료 유형별 개념 및 주요내용 분석¹⁾

- 종합소득 일반, 원천징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파악),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1) 2장의 주요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교육자료 등을 참고로 작성하였음.

- 퇴직소득, 양도소득
 -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등
- 제3장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국세청 자료 활용사례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장려세제
- 제4장 외국의 국세청 자료 활용사례 및 최근 동향
- 제5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전후 국세청 자료에 대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식 및 활용실태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전후 자산조사와 관련하여 소득유형 및 국세청 자료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식변화 및 활용실태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현행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국세청 자료 연계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의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활용 개선방안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선행연구 정리 및 각종 국세자료 관련 현황 분석
 - 복지대상자 자산조사 시 국세청 자료 활용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 현지조사
-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및 자문회의
 -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국세청 및 세무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포커스그룹을 구성하여 FGI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체계에서 공적자료 우선적용 원칙에 따른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활용방안 도출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전후 일선 지자체의 복지대상자 선정 관련 업무수행 시, 국세청 자료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자료 부재 및 시차문제, 사업소득 등의 개념 및 과소금액) 분석
- 2차자료 분석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내 국세청 자료 연계 실태에 관한 이차분석

및 모의적용 실시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국세청 자료의 개념 및 특성을 파악하고, 조사시점 및 원자료 제공 시차, 개념적 차이 등의 한계를 반영하여 활용 상의 문제점 해소
- 국세청의 각종 소득자료를 대상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 우선적용 원칙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활용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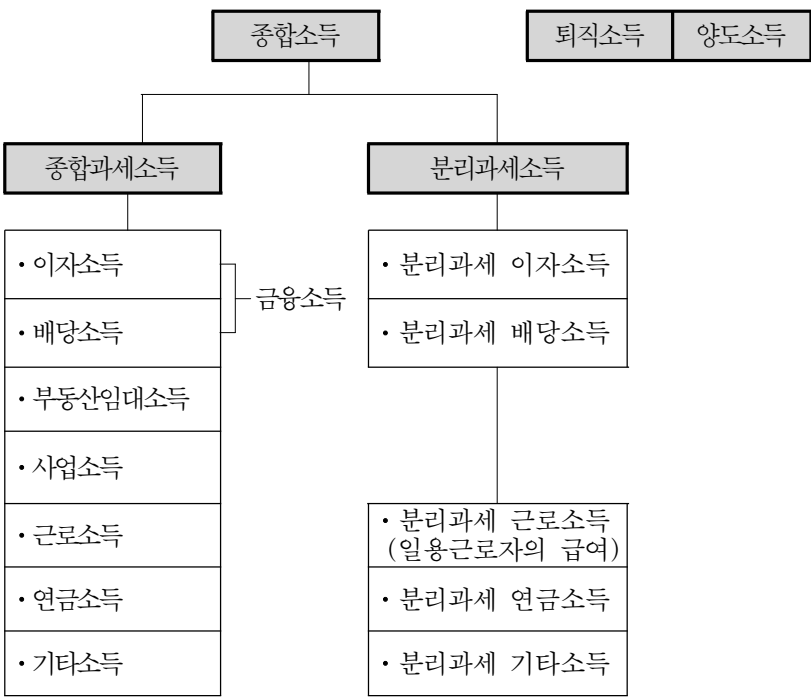
국세청 자료 유형별 개념 및 주요내용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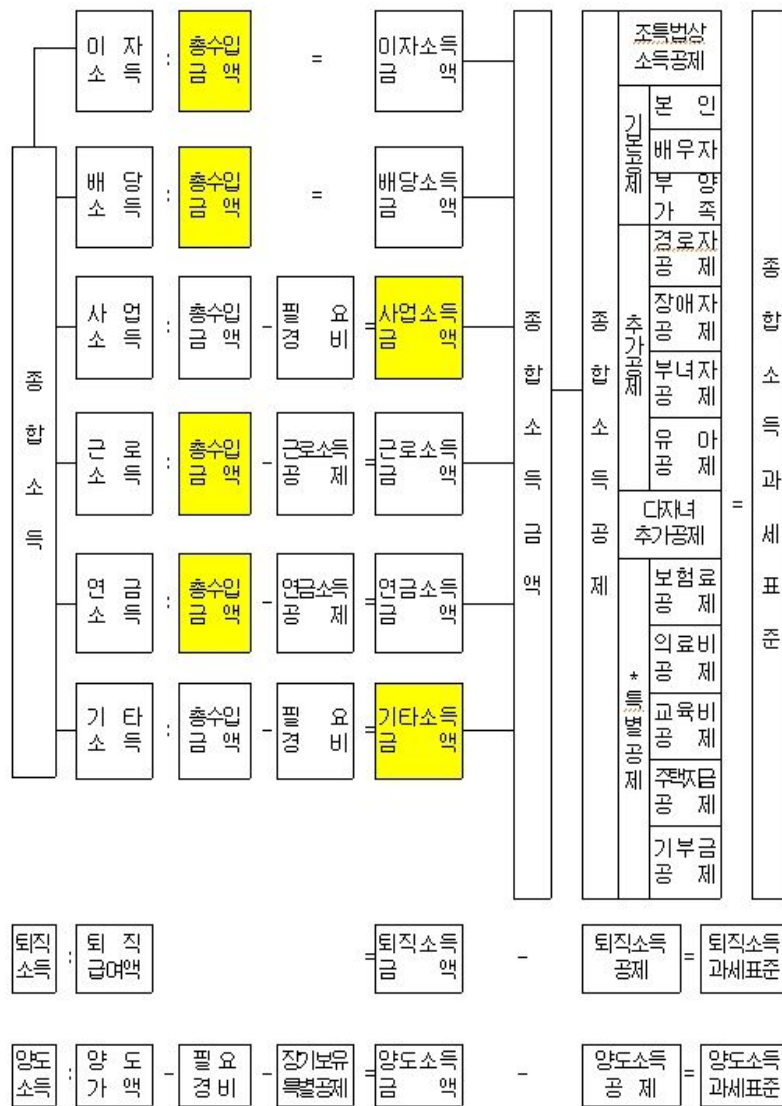
국세청 자료 유형별 개념 및 주요내용

제1 절 종합소득

1. 종합소득 개요



[그림 2-1] 소득세 과세체계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됨
 -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간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며,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 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5. 31까지 납부

3. 장부의 비치·기장

-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함
-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 종 구 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7천 5백만원 미만

주: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는 40%)와 수입 금액의 0.07%(부당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 적용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 징수(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함

4.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 및 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 － 이자·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이 됨
-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
- －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계산
- －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

○ 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 3) 연금소득만 있는 자
- 4)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으로서, 보험모집 또는 방문판매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정함)
-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6)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만 있는 자
-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 8)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 9) 위 1) 부터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 10)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의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음
- 1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에도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소득세법 제156조의5)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 12)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함)·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 －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와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73조 제5항)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적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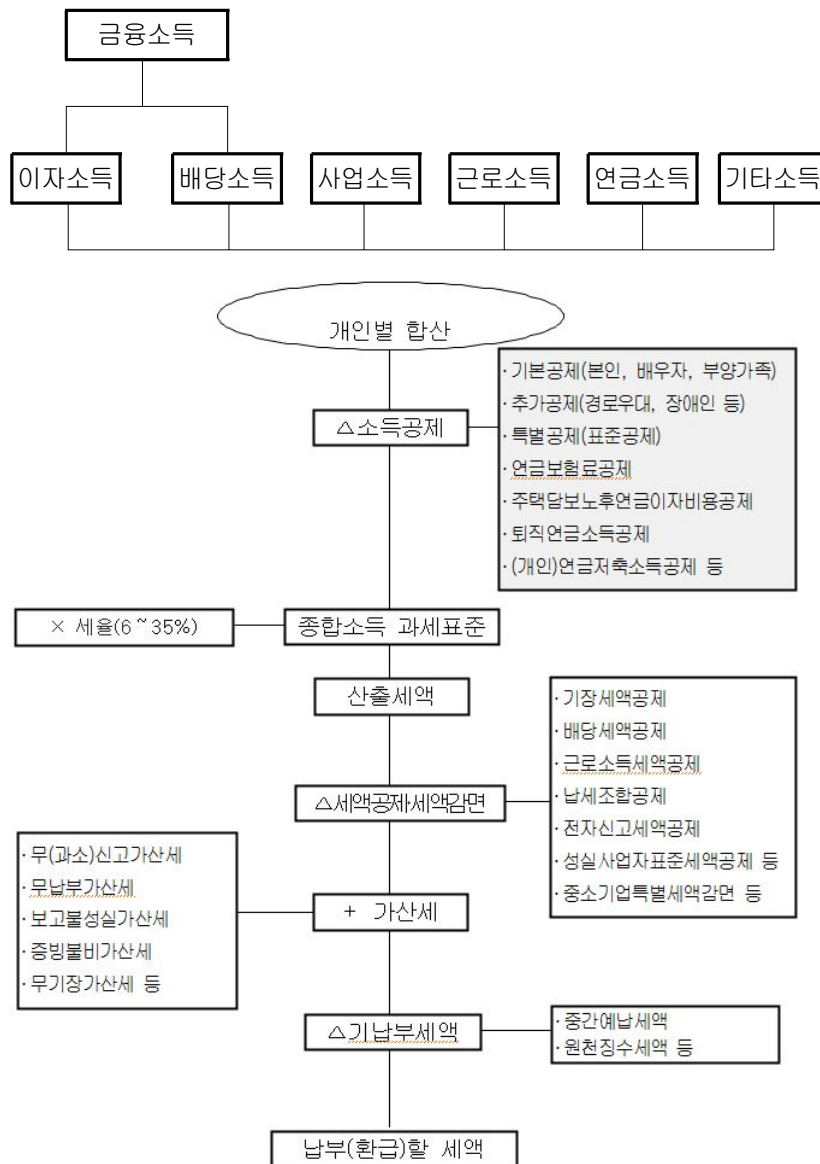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201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5. 세액계산 흐름도



6. 종합소득세율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 세율 (2010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 이하	6%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5%	1,080,000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4%	5,220,000
88,000,000 초과	35%	14,900,000
종합소득세 세율 (2009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 이하	6%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6%	1,200,000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5%	5,340,000
88,000,000 초과	35%	14,140,000

제2절 원천징수

1. 원천징수 개괄

□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임

○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
이 이에 해당

구 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	원천징수 대상 제외 소득
세금 부담자(담세자)		소득자	소득자
세금 납부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자
세금 납부 절차	세액계산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자
	신고서 제출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자
	납부시기	소득 지급시마다 납부 (분납 효과 발생)	신고시기에 납부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 발생)

2.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

3.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가.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

적용 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해당 소득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 배당,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용료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조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 배당,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나. 농어촌 특별세

- 원천징수의무자가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

구 분	대상 소득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근로소득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 분	과세표준	세 액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langle 소득공제 금액을 세액으로 환산 \rangle ① - ② ※ 당해 소득공제액에 대해 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외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과세표준 \times 2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과세표준 \times 10%

□ 신고·납부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 하여 제출>(납부서)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

-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② 납부서

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소득자	국세 원천징수	주민세 특별징수 대상	비 고
개 인	○	○	
내국법인	○	×	법인세 자진 신고시 지방소득세 납부
외국법인	○	○	

□ 특별징수하는 소득할 지방소득세 납세지

구 분	납세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소득세분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

□ 소득할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소득세분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법인세분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조세조약에 의해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²⁾ 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할 지방소득세 계산

- 법인(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0/11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11

라. 납부방법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입서 및 영수필 통지서 작성 사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입서 및 영수필 통지서

□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 무납부 및 미달납부 가산세

2)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카타르, 이란 등을 제외한 국가

4.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방법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방법

-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우편제출 시 10일자 소인이 찍혀 있으면 기한 내 신고로 인정)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

- (납부) 원천징수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 관련 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신고
- 신고방식은 「신고서작성방식」 과 세무회계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신고서 변환방식」 으로 구분
 - － 홈택스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공인인증서 없는 경우에도 가능)

□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가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정보를 확인하고, 거래은행을 선택하여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만 입력하여 전자납부 가능
- 홈택스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소유시 이용 가능

5. 신고 및 납부기한

□ 원천징수

원천징수 구분	법정기한	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	제출대상 서류
일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반기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1월~6월인 경우 7.10까지 7월~12월인 경우 1.10까지	

□ 연말정산

법정기한	제출대상 서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 종류	제출기한	제출대상 서류
근로, 퇴직, 사업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1/4분기 : 4월 말일 2/4분기 : 7월 말일 3/4분기 : 10월 말일 4/4분기 : 2월 말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원천징수 세율 (2010년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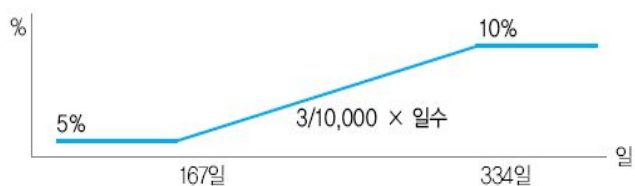
원천징수 대상 소득		세 율	비 고
이자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30/100	
	비영업대금의 이익	25/100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실지명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35/10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90/100	특정채권 20/100 (‘01.1.10이후 15/100)
	그 밖의 이자소득	14/100	
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10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90/100	
	그 밖의 배당소득	14/100	
사업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100	
근로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 분 근로소득	기본세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8/100	
연금	국민연금·직역연금	기본세율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퇴직연금·사적연금	5/100	
기타	복권당첨금 중 3억원 초과분	30/100	3억원이하는 20%
	기타소득(봉사료수입금액을 적용받는 분 제외)	20/100	
퇴직	퇴직소득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사업 (기타)	봉사료 수입금액	5/100	

6.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 가산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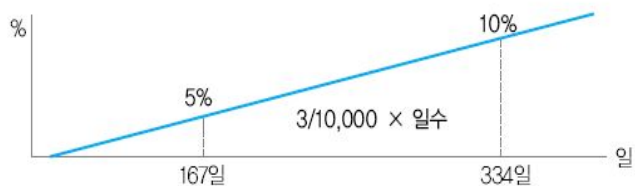
■ 가산세 구조

$$5\% \leq \text{과소} \cdot \text{무납부세액} \times 3/10,000 \times \text{일수} \leq 10\%$$



* [주의] 신고·납부기한 하루만 경과하여도 과소·무납부세액의 5% 부담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times 3/10,000 \times \text{일수}$ 〉



* [참고] 소득세·법인세 등은 납부 기한 경과 일수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나, 원천징수는 가산세의 최저금액이 과소·무납부세액의 5%를 적용하는 이유는?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하기 때문에 5%부터 시작됨

* [지방소득세] 국세와 달리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지방세법 § 179의 3 ③)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 등이 원천징수를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는 국가 등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에 따라 연금소득을 지급하는자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

□ 납세조합 불납가산세

-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해당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매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거나 징수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그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
-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해당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구 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 기한
근로·퇴직·사업	1월 ~ 12월	다음연도 3.10	다음연도 4.10
일용근로소득	1월 ~ 3월	4월말	5월말
	4월 ~ 6월	7월말	8월말
	7월 ~ 9월	10월말	11월말
	10월 ~ 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3월말
그 밖의 소득	1월 ~ 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3월말

□ 신고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다공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근로소득자가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

□ 수정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 10% 감면

제3절 근로소득

1. 근로소득 과세흐름도

과세흐름도



2. 근로소득의 범위

□ 급여 등 (법20, 영38)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여·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금액(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정근수당 등
-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등 금융기관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하여 받는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됨
-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음
 - 월 10만원 한도내의 식대(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보조금(조특법100)
 - 법령·조례에 의하여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 받은 제복, 제모,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등)
- 기술수당·보진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시간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
-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지역, 광구로 등록된지역, 의료취약지구(의료인) 등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

당은 비과세하는 실비변상적 급여임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중 월 100만원 이내 금액(원양어업선박, 국외등 항행선박 또는 국외등 건설현장에서 받는 급여는 월 150만원)은 비과세

-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 과세하나, 동법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 여비는 비과세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급여성 대가

- 기밀비·판공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기타 경제적 이익

-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액
-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그 소득세액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은 제외
- 종업원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와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
성보험의 환급금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
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
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
-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
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임(법21)
- 우리사주조합 관련 근로소득 과세(조특법88의 4)
-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퇴직보험료 등 (영38 ① 12호 단서)
- 출퇴근 차량운임상당액
- 사택제공이익 (영38 ① 6호 단서)
- 근로자가 받는 주택보조금 (조특법100 ①)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경조금
 - －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조금 판단 시 사회통념상 타당하
다고 인정되는 범위
 -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
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조특법15)

□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소득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이익(법20 ③, 조특법88의4 ③)
-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통직20-5)
-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퇴직보험료 등(영38 ① 12호 단서)
- 출퇴근 차량운임상당액
- 사택제공이익(영38 ① 6호 단서)
- 근로자가 받는 주택보조금 (조특법100 ①)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경조금

□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 실비변상적인 급여(영12)
 -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 무보수 위원(학술원·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 승무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료
- 일직·숙직료, 여비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 법령 조례에 의해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특수 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위험수당 등
- 승선수당,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
-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비과세 되는 식사대 등 (영17의2)
 - 출산 보육수당 (법12 4호 더)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법12)

-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단기복무 부사관을 포함한 병장급 이하의 현역병,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받는 급여)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장애급여·유족급여·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 비과세 학자금(대학원 포함)
- 외국정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받는 보훈급여금·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3. 근로소득공제

가. 개괄

- 총급여액 = 연간 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연간 급여액은 1.1~12.31사이에 지급받은 급여 총액(총급여액은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금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 1,500만원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 ~ 3,000만원	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 4,500만원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인적공제

구 분	공제대상자	연령요건	연간 소득금액
근로자 본인	거주자	요건 없음	요건 없음
배우자	거주자의 배우자	요건 없음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50.12.31 이전 출생)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만 20세 이하 (1990.1.1 이후 출생)	100만원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100만원 이하
	생계급여수급자	요건 없음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은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임
- 부양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제외)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나. 추가공제

□ 추가공제

구분	추가공제의 요건	추가공제액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940.12.31 이전 출생)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인당 연 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 아동(2004.1.1 이후 출생)	1인당 연 100만원
출산·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 신고한 입양자	1인당 연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공제 대상 자녀수 2인 50만원, 3인 150만원 4인 250만원, 5인 350만원

다. 연금보험료공제

□ 공제대상 연금보험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기여금 또는

부담금(사용자부담금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연금저축보
입액을 합하여 연 300만원까지 공제가능)

제4절 일용근로자 소득과약

1. 일용근로소득의 개념

□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
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소득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소득임

- 건설공사 종사자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또는 1
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 이를 일용근로자로 보나, 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함.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
여 고용되는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
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항만근로자 포함):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 이를 일용근로자로
봄. 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함.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다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하역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위의 업무 외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시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 총지급액 =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지급액 -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
-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율(8%)
- 원천징수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2. 일용근로자 소득과약 주요내용

가. 소득과약 목적

-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자인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아 일용근로자 소득을 관리하고
- 수집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여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금액을 파악

나. 소득과약 업무범위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확대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실적·성실도 분석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자(상용·일용)의 소득과약
- 기타 저소득 일용근로자 소득과약 관련 사항

3. 일용근로자 소득과약 흐름

□ 근로소득 개념

-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 근로를 제공,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
-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분
 - － 고용기간 3월 ⇒ 민법상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
 - － 일용근로자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 － 통계청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임시 : 1개월~1년 미만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 원천징수제도 개념, 편리성, 문제점, 일용근로자 한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
- 일용직 근로형태 불안정, 고용주 견제·감시능력 미약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기능
 - － 근로자 소득과약, 사업자 인건비 지출증빙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교부·제출시기 및 세액공제
 - － 상용근로소득(일반급여자)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 일용근로소득 :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세액공제: 홈택스 제출건수(소득자수)×300원 공제(한도 연 200만원)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2% (1개월 내 1%)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 : 소득공제, 8%, 55%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 － 홈택스(HTS), 전산매체, 현금영수증 단말기, 수동 서면제출

[그림 2-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입력 흐름도

서면 제출 (16.7%) 전산 매체 (0.1%)	수집기간 (4,7,10,2월) 제출	민원실	세원관리과 (부가, 법인, 소득)	정보화센터	세원관리과 (부가, 법인, 소득)
	수시제출 (7월후 등)	세원관리 과 또는 민원실	접수 즉시 입력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S(웹)에 입력 ▪ 전산매체 전송 *서울·중부 청은 세무서 입력실에서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보관 ▪ TIS(웹)에 서 오류정정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매씩 편철 ▪ 일련번호 표시 		

홈택스 (82.9%)	수집기간 (4,7,10,2월) 접수	전자신고	본청
			<div>⇒</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S(웹)수록

※ 단말기 제출(0.3%) : 단말기회사(VAN)에서 국세청으로 직접 전송(TIS 수록)

4. 일용근로자 소득과약 업무체계

가. 현행 업무추진 체계

- 소득지원(EITC 관련) 부서 ⇨ 일용근로자 소득과약
 -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및 신뢰성 검증업무 중점 추진
- 세원관리(법인/부가/소득) 부서 ⇨ 자료 접수, DB 관리
 - 세원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일용직 자료 접수 및 DB 구축

〈소득과약 업무추진 체계〉

업무구분	소득지원[EITC관련부서]	세원관리[법인, 부가, 소득]
세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적관리 기능 없음 · 일용직 고용업체 현황과약 · 사업자 통합 고용실태과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사업자 세적관리 · 세적 담당과별 각각 담당 · 세적담당자가 원천세 담당
신고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제출안내(접수 비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등 접수·관리
조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과세결정 권한 배제 · 현장확인(비조사형식) 실시 · 과세자료 통보, 조사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과세 권한 부여 · 조사 의뢰분 조사과 처리 · 과세자료 세원관리과 처리
자료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자료 소득과약 활용 · 지급명세서 신뢰성 검증 · TIS(웹)으로 전산정보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시자료 세적담당별 보관 · D/B구축·관리는 원천세과 · TIS(웹)으로 전산정보 조회
	* 전산직 운영요원이 입력 전담, 세원관리부서에서 오류정정	
징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EITC 환급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결정부서(세원·조사)
민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근로자 민원 전담 · 지급명세서미제출신고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관련 민원 처리 · 일용근로자 신청분 제외

나. 일용근로소득 파악 관련 기간별 주요업무

단위업무	기간	주요 업무	추진 관서	비 고
일용근로자 소득파악 및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2.1~ 2.5	○분기별 일용근로자 소득파악 계획 시달	본청	매분기 2,4,7,10월
	2.5~ 2.10	○지급명세서 홍보물(리플릿 등) 제작배부	본청	"
	2.5~ 2.28	○분기별 일용근로자 소득파악 업무 집행 - 일용근로자 고용사업자 현황 파악 - 지급명세서 제도홍보, 제출안내 행정지도	지방청 세무서	"
	2.1~ 2.28	○분기별 지급명세서 제출자료 신고접수 - 세원관리과(법인·부가·소득)에서 담당	세무서	"
	3.1~ 3.31	○분기별 지급명세서 제출자료 전산입력 - 세원관리과(법인·부가·소득)에서 담당	세무서	매분기 3,5,8,11월
	4.1~ 4.30	○분기별 지급명세서 오류정정 전산구축 - 세원관리과(법인·부가·소득)에서 담당	세무서	매분기 4,6,9,12월
	5.1~ 5.1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집실적 분석	본청 지방청 세무서	매분기 5,7,10,1월
지급명세서 미제출자 중점관리	3.1~ 3.31	○지급명세서 미제출 사업자 중점관리 - 미제출 취약업종·사업자 중점관리대상 선정 - 일용직 근로자 고용실태 상시 파악 -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및 미제출 사유 규명	본청 지방청 세무서	매분기 3,5,8,11월
	4.1~ 4.9	○미제출, 불성실 제출 사업자 현장확인	세무서	매년
	4.15	○미제출, 불성실 제출 사업자 현장확인 결과 보고	지방청 세무서	매년
	4.25	○미제출, 불성실 제출 사업자 현장확인 결과 분석	본청	매년

단위업무	기간	주요 업무	추진 관서	비 고
일용근로자 소득과약 및 지급명세서제 출안내	2.1~ 2.5	○분기별 일용근로자 소득과약 계획 시달	본청	매분기 2,4,7,10월
	2.5~ 2.10	○지급명세서 홍보물(리플릿 등) 제작배부	본청	"
	2.5~ 2.28	○분기별 일용근로자 소득과약 업무 집행 - 일용근로자 고용사업자 현황 파악 - 지급명세서 제도홍보, 제출안내 행정지도	지방청 세무서	"
	2.1~ 2.28	○분기별 지급명세서 제출자료 신고접수 - 세원관리과(법인·부가·소득)에서 담당	세무서	"
	3.1~ 3.31	○분기별 지급명세서 제출자료 전산입력 - 세원관리과(법인·부가·소득)에서 담당	세무서	매분기 3,5,8,11월
	4.1~ 4.30	○분기별 지급명세서 오류정정 전산구축 - 세원관리과(법인·부가·소득)에서 담당	세무서	매분기 4,6,9,12월
	5.1~ 5.1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집실적 분석	본청 지방청 세무서	매분기 5,7,10,1월
지급명세서 미제출자 중점관리	3.1~ 3.31	○지급명세서 미제출 사업자 중점관리 - 미제출 취약업종·사업자 중점관리대상 선정 - 일용직 근로자 고용실태 상시 파악 -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및 미제출 사유 규명	본청 지방청 세무서	매분기 3,5,8,11월
	4.1~ 4.9	○미제출, 불성실 제출 사업자 현장확인	세무서	매년
	4.15	○미제출, 불성실 제출 사업자 현장확인 결과 보고	지방청 세무서	매년
	4.25	○미제출, 불성실 제출 사업자 현장확인 결과 분석	본청	매년

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관리

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절차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수정제출분 포함)를 제출(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함)하도록 행정지도 실시

○ 전자제출 안내

- －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안내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 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 1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국세청장(소득지원국장)은 매년 2월말까지 일용근로자 소득과약업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청장에게 시달

- － 지방청장은 본청에서 시달한 신청업무 집행계획을 참조하여 2월 말까지 지방청별 특성에 맞는 소득과약 집행계획 수립·시달하고 세무서별 계획수립의 적정여부를 점검
- －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일용지급명세서 제출확대 및 신뢰성 검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 일정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시행

나. 중점관리대상자 선정

- 국세청장(소득지원국장)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수집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를 분석하여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시달
 - －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용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제출 혐의가 많은 사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
- 중점관리대상자 선정시 반영하는 요건(예시)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일용근로 신고내역은 있으나 일용지급명세서 미제출자
 - － 일용지급명세서를 제출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미제출
 - － 소득세 등 신고서에 급여지급 사실이 있으나 지급명세서 미제출

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관리

- 일반적인 행정지도
 - 고용실태과약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지도 추진
 - － 전년도에 실시한 행정지도 대상업체 중 지급명세서 계속제출자는 가급적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사후관리 위주로 계속관리
 - － 계속 제출자는 현장방문에 의한 직접 행정지도대상에서는 제외하되, 분기별 제출추이 및 제출자료 분석 사후관리
 - － 자료제출 부진시 안내문 발송, 전화 등을 통한 제출 안내
 - － 일용직이 없는 1인·가족경영 사업장으로 확인된 업체는 행정지도 대상에서 제외
 - 소규모 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 행정지도 강화
 - － 일용지급명세서 제출제도의 저변확대 및 항구적 정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및 신규 개업 사업장(법인포함)에 대한 맞춤형 홍보 및 현장밀착 행정지도 실시 강화

- 일용직 고용이 추정되는 업체는 사업장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행정지도 대상에 포함
- 소액자료(연간 10만 원이하) 제출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제출 자료의 질적 수준 제고

□ 취약분야 중점관리

- 급여를 비용으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급명세서 제출을 중단한 사업장 등 취약분야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중점관리 실시
- 대상자 선정유형(예시)
 - 전년도 일용지급명세서 제출자로서 당해연도 미제출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일용근로 신고내역은 있으나 일용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사업자
 - 소득세 등 신고서상 급여지급 계정은 있으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자
 -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세무서 자체선정한 일용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제출 혐의가 많은 사업자
- 대상자 선정방법
 - 세무서 자체선정 분을 제외한 대상자는 본청에서 전산분석하여 일괄 선정한 후 일선 관서에 명단 통보
 - 세무서 통보명단에서 휴·폐업자를 제외하여 대상자 선정
- 중점관리대상자 관리방법
 - 중점관리대상자는 관리부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확정된 중점관리대상자는 본청에서 근로장려세제 시스템에 구축하여 관리
 - 중점관리대상자 관리담당자는 사업장 고용실태 확인 등 행정지도 결과를 근로장려세제 시스템에 입력하여 사후관리
 - 자발적 정상 제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중 상시 관리
 - 「기한 후 제출」 등 제출방법 상세안내 등 1:1 개별지도
 - 임의적 제출회피 업체는 현장확인 조사대상 우선 선정

- 중점관리 할 사항
 - － 사업장 고용현황(일용직 및 상용직 고용인원, 인건비), 고용실태 파악 일자, 관리내용
- 미제출·불성실자 현장 확인
 - 반복적인 개별제출지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제출을 회피하거나 일용지급명세서 제출 실적이 불성실한 업체를 현장 확인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현장확인
 - － 현장 확인에 의한 가산세(2%) 추징을 통해 성실제출 유도
 - － 현장 확인 실시 시기 : 매년 3~4월 중 실시
 - 현장 확인 결과 사후관리
 - － 현지조사에 의해 확인된 미제출·불성실제출자는 가산세를 추징 하도록 주소지(법인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통보

제5절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1.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개괄

가. 부동산 임대소득

- 비과세 부동산임대소득
 -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국외소재 주택 및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 제외)
- 분리과세 소득은 없음

나. 사업소득의 범위

-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함
 -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

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함.
-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 비과세 사업소득

- 농가부업 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구 분	젖소·소	돼지	산양·면양	토끼	닭·오리	양봉
사육두수	각 30마리	500마리	각 300마리	5,000마리	각 15,000마리	100군

- 농가부업 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으로 연 1,8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
- 수도권 외의 읍·면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하여 발생하는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
- 조립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연 6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
- 분리과세 소득은 없음

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의료보전 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 다만, 약사법에 의한 약사가 제공하는 의료보전용역

- －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 －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 －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 －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 이송용역
- －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제외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

의 신고를 한 사업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축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 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조세용역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원천징수 제외되는 금액

마.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함
 - 사업자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할 세액의 계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 금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경우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아. 지급명세서의 제출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급 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소득자에게 연간 지급된 소득금액 또는 수입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자. 사업소득금액 계산 및 경비율 제도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다만, “나”의 경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함.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사업소득금액 계산 및 기준/단순 경비율 적용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소득률 = (1-단순경비율)

－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구성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타가율)을 일반율로 함

－ 자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자가율)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일반율에 일정한 율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자가사업자에게 적용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백분율로 표시함

○ 일반적 적용 예시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의 종목구분(코드번호)별로 적용함.
 - 다만,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에 따름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동업자단체·거래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며, 이 책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수입금액을 의미
-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함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 시 업종구분은 규정에 따름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또는 각 세법령(기본통칙 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text{매입비용} + \text{임차료} + \text{인건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주요경비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 고시’ 참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함
-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함.(단, 2008년 귀속 소득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제외)
- － 아래 업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208조)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 업종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업종 \ 기준수입금액	귀속연도	'07년귀속	'08년 귀속	'09년 귀속
	'06년 수입금액	'07년 수입금액	'08년 수입금액	'08년 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2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800만원	3,600만원	3,600만원	3,6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600만원	2,400만원	2,400만원	2,400만원

－ 적용 예시

-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08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10년 5월('09귀속) 신고 시 '08귀속 기준수입금액이 3천 6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례

- －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장별, 종목구분별(코드번호 단위)로 해당 수입금액에 적용함
- － 공동사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장별 총수입 금액에 적용함
-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94****) 단순경비율(기본율·초과율) 적용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함. 다만,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함(월수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 － 소득금액 계산 예시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서적외판원(940908)의 경우
 - $\{40,000\text{천원} - (40,000\text{천원} \times 75.0\%)\} + \{5,000\text{천원} - (5,000\text{천원} \times 65.0\%)\} = 11,750\text{천원}$
- － 월할 계산 예시 : 2009년 11월 2일에 개업한 서적외판원의 수입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
 - $10,000\text{천원} \times \frac{12}{2} = 60,000\text{천원}$
 - $\{40,000\text{천원} - (40,000\text{천원} \times 75.0\%)\} + \{20,000\text{천원} - (20,000\text{천원} \times 65.0\%)\} = 11,750\text{천원}$

$$\times 65.0\%) \} = 17,000 \text{천원}$$

$$\bullet 17,000 \text{천원} \times \frac{2}{12} = 2,833 \text{천원}$$

○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구분

－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 자가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함(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함)
- 계산 예시: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0임 ($11.6 + 0.4 = 12.0$)

－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함
- 계산 예시: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0임 ($90.3 - 0.3 = 90.0$)

－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축산업수렵업 및 임업(01, 02), 어업(05), 광업(10~1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40~41), 건설업(45), 운수창고 및 통신업(60, 61, 62, 630301~630909(630303은 제외), 64), 금융 및 보험업(65, 66, 67),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701, 703, 711, 712, 713, 73), 인적용역(94), 특정 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업종(522099, 523132, 525200, 741108, 950001)

－ 자가사업자는 실제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다음에 예시한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말함

－ 예시

- 제조업 : 생산설비를 갖추고 제조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
- 판매업 : 상품의 보관과 인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

- 서비스업 : 실제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봄
- 과세기간 중에 타가에서 자가로, 자가에서 타가로 전환된 경우에 자가율 적용 대상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을 자가사업장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함
- 자가 및 타가 사업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자가율을 적용할 대상금액은 사업장별로 실제 발생한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총사업장 면적에 자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함
-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함)
- 장애인적용 단순경비율
 - $\text{단순경비율} + (100\% - \text{단순경비율}) \times 20\%$
-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2자리부터는 절사함
 - 계산례: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 - 90.3) \times 20\% = 92.2$

□ 연말정산 시기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만,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종합소득공제

-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44조의 3

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적용

-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연말정산시까지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 무자에게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 다만, 이전에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함
-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기본공제 중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
-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 종합소득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
 -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사업소득자에게 환급
-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
 -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

제6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금융소득은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에 해당됨

1. 이자소득

가. 이자소득의 범위

-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함(소득세법 제16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 이하 같음)의 이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함
-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이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함.

□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 이자소득 주요 항목

□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함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보며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며 이를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함
-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하며,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
 -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 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보험료)를 뺀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다음요건을 충족하는 것

-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
-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배당금 등)”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봄

다. 비과세 금융소득

구 분	대상소득	관련 법령	비 고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이자	소득세법 §12 1	
장기(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소득세법 시행령 §2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배당	조특법 §13	‘12.12.31까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이자	조특법 §21 ①	거주자와 내국법인 제외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배당	조특법 §22	‘12.12.31이전 사업연도

구 분	대상소득	관련 법령	비 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농업소득 발생분 전액, 농업소득 외의 소득 에서 발생한 소득 중 연 1,200만원 이내)	배당	조특법 §66 ②	'12.12.31까지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과세연도별 1,200만원 이내)	배당	조특법 §67 ②	'12.12.31까지
농업회사법인 출자한 거주자 (농업소득 발생분 전액)	배당	조특법 §68	'12.12.31까지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	—	조특법 §86	소득공제 가능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조특법 §87	소득공제 가능 (2009.12.31 이전가입)
생계형저축	이자·배당	조특법 §88의 2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증권금융 회사에 예탁한 경우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	배당	조특법 §88의 4 ㉠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 인출시 과세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 2 등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 하고 있는 자사지분 중 다음의 요건 을 갖춘 경우의 배당소득 • 근로자가 소액주주일것 •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배당	조특법 §88의 4 ㉠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보유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
조합 등 출자금(1명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배당	조특법 §88의 5	'12.12.31까지
조합 등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	이자	조특법 §89의 3	'12.12.31까지
장기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 (주권상장 이후 3년 이상,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 3천만원 이하 보유)	배당	조특법 §91	'10.12.31까지
공익기부집합투자기금에서 발생한 거주자의 배당소득 중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분	배당	조특법 §91의 8	'10.12.31까지

구 분	대상소득	관련 법령	비 고
장기주식형저축	이자·배당	조특법 §91의 9	소득공제 '09.12.31까지 가입
장기회사채형저축	이자·배당	조특법 §91의 10	'09.12.31까지 가입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 (2012.12.31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으로 해당 미분양주택투자신탁 등별로 투자 금액 1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소득)	배당	조특법 §91의 11	'09.12.31까지 가입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 (2012.12.31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으로 해당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급별 투자금액 1억원까지에서 발생한 소득)	배당	조특법 §91의 12	'10.12.31까지 가입
녹색저축 등 • 녹색투자신탁 등(납입한도 3천만원) • 녹색예금(납입한도 2천만원) • 녹색채권(납입한도 3천만원)	배당 이자 이자	조특법 §91의 13	'12.12.31까지 가입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조특법 §87의 2	'11.12.31까지 가입

라. 금융소득 수입시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	수입시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어 이자소득으로 보는 소득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일반적인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	그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하는 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 연금저축의 이자소득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

보통
예금·
정기
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함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함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

마. 금융소득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지급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동일하나, 일부의 경우에는 달리 정하고 있음
-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금융회사 등이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그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끝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봄
 -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은행을 포함, 이하“은행”)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

의 이자와 할인액으로,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 할인매출 하는 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을 받은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함

2. 배당소득

가. 배당소득의 범위

-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함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擬制配當)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봄

-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함
 - －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함)
 - －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함)
-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함)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함)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함)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함.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함
 - －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함)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봄
-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 배당소득 주요 항목

-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일부 배당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2(2011. 1. 1부터는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함
-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에 해당
- 무상단주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시 과세문제
 -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무상주를 배당함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하여 이를 처분하고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의제배당의 계산은 당해 주식의 처분에 의한 현금지급액과는 관계없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무상단주의 액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는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나. 금융소득 분리과세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 －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소득세가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이 여기에 해당
- 이자·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받는 배당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 － 10년이상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30% 원천징수)
 - － 실지명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35% 원천징수)
 - －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14% 원천징수)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로 과세)
 -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소득
 -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파트관리비·수선충당금 등을 예치하고 받은 이자소득 등(14% 원천징수)
 - － 금융소득으로서 연도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종합과세 기준금액)이하인 경우(14% 원천징수)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 － 상환기간 15년 이상 사회간접자본(SOC)채권 등의 이자(14% 원

천징수)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2010.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5% 원천징수). 단, 주식 보유자가 해당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조 건부과세대상임
 - 2011.12.31까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원천 징수, 2010년 이후 9.5%)
 - 2010.12.31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과 2011.12.31 이전에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 부분의 배당소득(5% 원 천징수)
 - 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초과 보유주식 부분의 배당소득(14% 원천징수)
 - 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로부터 2010.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 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2010년 1억원) 이하 보유주식 부분의 배당소득(5% 원천징수, 2010년 6%)
 - 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2010년 1억원) 초과 보유주식 부분의 배당소득(14% 원천징수)
 - 고수익고위험집합투자기구 등에 2009.12.31까지 가입하여 1억원 이하를 투자하고 지급받는 이자·배당(5% 원천징수)
 -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 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9.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5% 원천징수)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2012.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14% 원천징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소득

(90% 원천징수)

-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한 이자(15%)
 - 1997년~1998년 기간중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고용안정채권,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 소득세법상 비과세 금융소득

- 신탁법(§65)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금융소득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저축계약에 따라 연금으로 받는 것에 한함)
- 2009.12.31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
- 2009.12.31까지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이자·배당(저축가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소득은 제외)
- 2002.12.31까지 가입한 근로자 우대저축의 이자·배당
- 2011.12.31까지 가입한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
-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2007.1.1부터 2012.12.31까지 발생하는 이자
- 2011.12.31까지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자사지분의 배당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법인별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2010.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
- 경과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등 이자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농업소득에서 2012.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
-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배당(2012.12.31.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함)

-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배당소득 중 해당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등의 수익에서 법정·특례·지정기부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2010년까지 비과세하며, 이 경우 기부금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제7절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1. 연금소득

□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함

- 연금법(국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2002.1.1 이후에 납입(또는 근로제공분)을 기초로 받는 연금부터 과세)
- 2002.1.1 이후에 연금을 받더라도 2001.12.31 이전 납입분(또는 근로제공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 그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받는 연금(2005.1.1 이후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보험의 연금부터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2001.1.1 이후 가입하는 연금저축 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부터 과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받는 연금(2006.1.1 이후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기초로 받는 연금부터 과세)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연금(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
- 연계퇴직연금(2010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위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연금소득액 계산

1)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및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text{총수령액} \times \frac{\text{2002.1.1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text{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times \left(1 - \frac{\text{수급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text{2002.1.1 이후 불입기간 동안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right)$$

2) 연금법(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에 따른 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text{총수령액} \times \frac{\text{2002.1.1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text{총기여금 불입월수}}$$

3) 퇴직 공무원이 2002.1.1 이후 재임용(퇴직금 반납하고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연금

$$\text{총수령액} \times \frac{\text{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text{총기여금 불입월수}}$$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연금

$$\text{총수령액} \times \left(1 - \frac{\text{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text{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의 합계액}} \right)$$

□ 비과세 연금소득

-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
-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상이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 연금소득금액

$$\begin{array}{|c|} \hline \text{총연금액} \\ \text{(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및} \\ \text{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연금소득공제}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연금소득금액} \\ \hline \end{array}$$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하며, 공제액은 900만원을 한도로 함.

총 연 금 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 700만원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 1,400만원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연금소득 과세방법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은 매 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우선 원천징수 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 퇴직연금(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5%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후 연금수령자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2. 기타소득

가. 기타소득의 범위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법령에서 규정
- 기타소득의 종류
 -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 다음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거주자가 사업소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 따른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 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성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성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성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사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밖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납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금액 포함)
-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1.1.1부터 시행)
 - －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 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報勞金) 및 기타 금품
-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밖에 다음에 해당 하는 상금과 부상
 - －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 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직장새마을운동 산업재해예방운동 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 중 1인당 15만원 이내의 금액
-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 그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2011.1.1부터 시행)
-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11.1.1부터 시행)

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함),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금 지급일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그 외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 뇌물·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

라.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 금액임

마. 원천징수세율

-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을 적용
 - － 원천징수 시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
 - 이 때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원고료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사. 비과세 기타소득

□ 비과세 기타소득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상금 등
- 「국가보안법」에 따라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등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과 대학의 교직원이 법령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 분리과세 기타소득

-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 － 법령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배당금품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5호)
 - －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및 당연 종합과세 기타소득 외의 기타소득과 당연 종합과세 기타소득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

는 경우에 한함)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 함. 즉, 소득자가 종합소득세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 됨

□ 당연 종합과세 기타소득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제8절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1. 퇴직소득

가. 퇴직소득의 범위

□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함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³⁾)을 포함하며,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봄
-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퇴직함으로써 받는 다음에 해당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 －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3) 1993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퇴직금전환제도(99년 4월 1일 폐지)는 기업이 기적립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재원으로 기금에 납부는 하지만 실무담당자는 근로자로서 근로자는 장래 퇴직시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아 사용주를 통하여 기금에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며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아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일시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함.

수익자로 하는보험(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 퇴직소득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정산액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 해고예고수당 소득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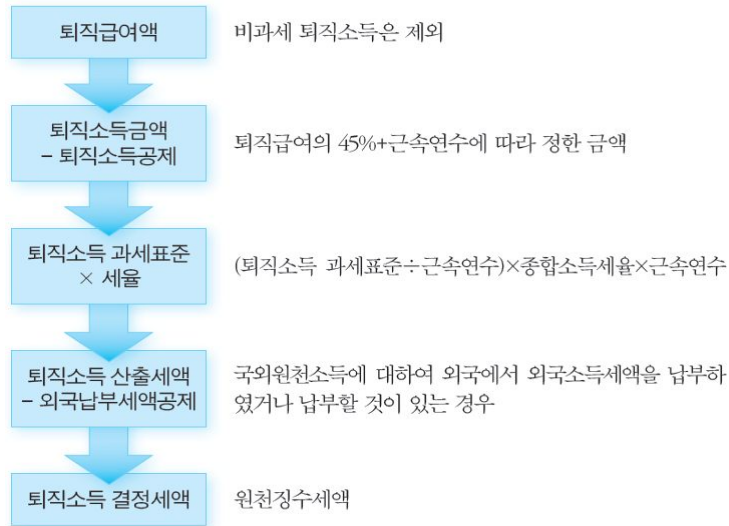
-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봄
 - －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 －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 －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에 한함)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에 한함)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제외한 퇴직소득은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에 한함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 퇴직으로 봄(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 －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 － 법인의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또는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 －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 －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 법인의 임원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 하는 경우만 해당)
 - － 그 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와 근로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장년퇴직한 후 다음 날 당해 사용자의 별정직 사원(축탁)으로 채용된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

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나.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 퇴직소득세 산출 흐름



□ 퇴직급여액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 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 퇴직소득세의 계산

-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과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left(\text{과세표준} \times \frac{1}{\text{근속연수}} \right) \times \text{세율} \times \text{근속연수} = \text{납부세액}$$

2. 양도소득세

가. 양도소득세의 정의

-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임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

나.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함
 - 즉,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임
 - 올해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 연도별·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와 무신고가산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2010년 양도분			2011.1.1 이후양도분
	예정신고 세액공제율	한도액	무신고 가산세율	
·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기타자산(골프회원권 등)	5%	291천원	10%	· 예정신고 세액공제 없음 · 무신고 가산세 20% 적용
· 협의매수·수용 부동산	2년미만 2년이상	한도없음	20%	
			10%	
· 주식·미등기 양도 ·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 지정지역 3주택 이상자	없음	-	20%	

* 지정지역 : 강남·서초·송파구(일반세율+10% 적용)

* 양도소득세 무납부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간 10.95% 적용

□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장·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10%, 20% (또는 40%), 무납부가산세 1일 0.03% 를 추가 부담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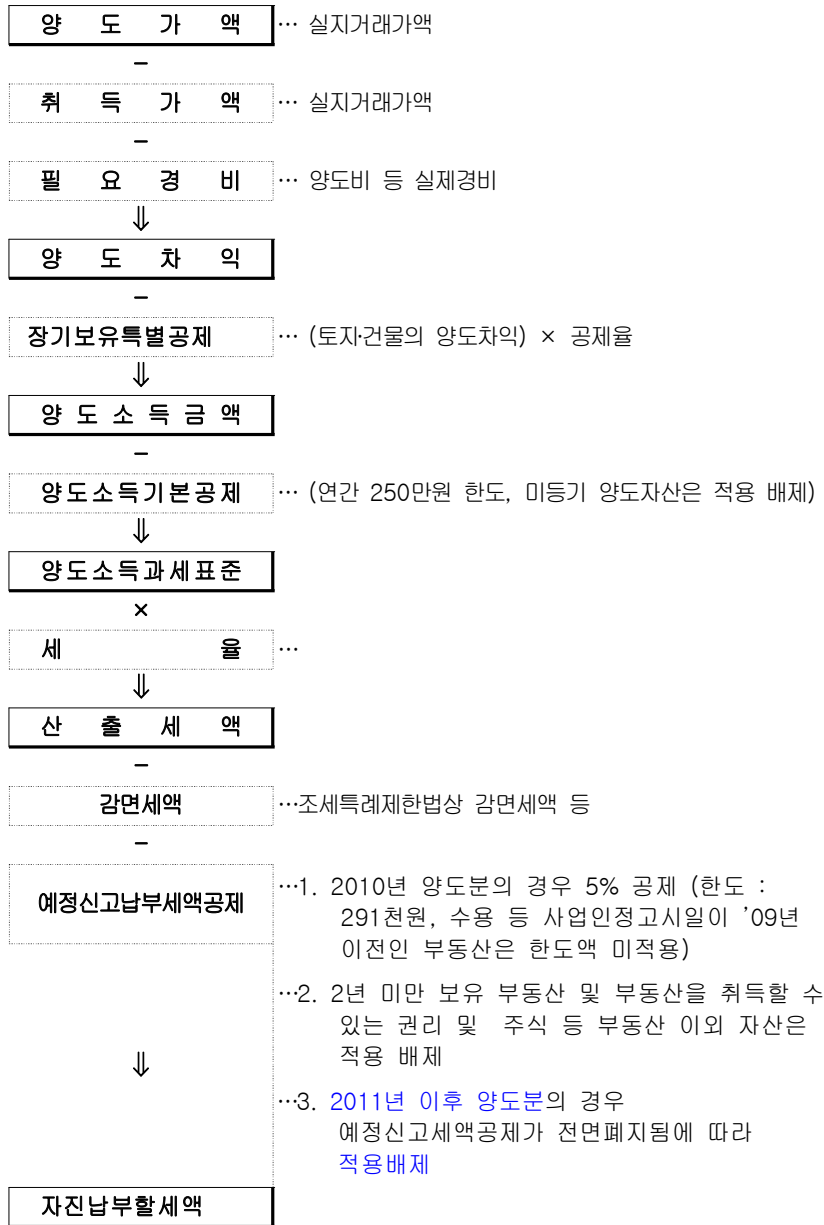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물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음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음
 - －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

□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양도소득세의 흐름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구분		2010. 1. 1. 이후 양도		
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누진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초과	35%	1,490만원
	1년이상 2년미만	40%		
	1년미만	50%		
○ 1세대2주택자의 주택 ○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 누진세율 (6%~35%)		
○ 1세대3주택이상자의 주택 ○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일반지역	2년이상 : 누진세율	
		지정지역	2년이상 : 누진세율+10%	
○ 비사업용토지 등		일반지역	2년이상 : 누진세율	
		지정지역	2년이상 : 누진세율+10%	
○ 미등기양도		70%		

주: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율은 참고1, 참고2를 참조

□ 기타자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관련주식 등, 특정주식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구 분	2010. 1. 1. 이후 양도
보유기간 제한없음	6%~35% 누진세율

□ 주식

구 분			2002.1.1 ~ 현재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발행주식		10%
	대기업 발행주식	소액주주 및 대주주 1년이상 보유	20%
		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중소기업발행주식	10%
상장· 코스닥상장 주식	대주주	대기업발행주식	1년이상 보유 20%
			1년미만 보유 30%
		소액주주 (장내거래)	비과세

□ 양도시기별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

2009.3.16 ~ 2010.12.31. 양도한 경우				
구분	소재지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3주택	지정지역	누진세율 + 10%	40% ¹⁾	50%
	기타지역	누진세율	40%	50%
2주택	모든지역	누진세율	40%	50%

주: 40% →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누진세율+10%와 40% 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2009.1.1 ~ 2009.3.15. 양도				
구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비고
3주택	45%	45%	50%	
2주택	누진세율	40%	50%	

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08.12.31. 이전 양도				
구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비고
3주택	60%	60%	60%	
2주택	50%	50%	50%	

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양도시기별 중과세율 적용 (비사업용토지)

2009.3.16 ~ 2010.12.31. 양도한 경우				
구분	소재지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누진세율 + 10%	40% ¹⁾	50%
	기타지역	누진세율	40%	50%

주: 40% →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누진세율+10%와 40% 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준비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납부서 자동작성 프로그램』 설치 후 작성)

- 신고서에 첨부할 부속서류
 - － 납세자 제출 서류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인경우: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 확인원 등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예 : 중개 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 일괄 확인가능 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신고장소, 세금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 예정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양도소득세 신고 장소
 -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 주소지 :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현 주소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행
 - 2010. 1. 1부터 홈택스서비스
 - － 개인 ⇒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세금신고 (양도세 선택)
 -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과, 세무회계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후 변환하여 전송하는 신고서 변환 전송방식이 있음
 -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되는 장점
 - 매매계약서 사본 등 부속서류는 세무

□ 세금납부

- 양도소득세 납부장소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 국세의 납부방법 안내
 - －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 － 신용카드 납부 (⇒ 500만원까지 납부 가능)
 - －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

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계산

-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이익(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실제 증빙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 실지 양도가액

-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 실지 취득가액

○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원가 상당액
-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등록세 포함)·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취득가액 계산시 포함되는 것

-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 단,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공제
-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

□ 기타 필요경비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실제 증빙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합계액.
- 자본적지출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지출액
 -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이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양도비 등(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소개비)
- 비교: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은행대출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 보유기간은 양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초일산입)
-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
- 비교: 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는 피상속인의 취득일 부터 기산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배우자 등 이월과세)에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적용(미등기제외)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 토지·건물이 아닌 자산
-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
- 미등기 양도자산
- 1세대2(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
- 비사업용토지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자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공제

□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제9절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현황신고

1. 사업자등록

가.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5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

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아·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가능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 개인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영리법인(본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함) 1부
 -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비영리 내국법인(본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사본 1부

□ 내국법인 국내지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등기부에 등재 안된 지점법인은 지점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함)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
-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 정관 사본 1부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교회, 사찰 등 고유번호신청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교단 등의 소속확인서
-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 교단 등의 법인등기부등본(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다. 사업자등록증 교부

□ 사업자등록증 교부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교부함
 - － 다만, 신청내용으로 보아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
 - 이 경우 교부기한이 5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라. 휴·폐업신고

□ 휴·폐업 신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 가능

○ 휴업 및 폐업일의 기준시점

구분	유형별	휴·폐업일
휴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날
	계절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봄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폐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그 6월이 되는 날 (부득이 한 경우 제외)

2. 사업장현황신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복권, 담배, 연탄, 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등)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 신고기한

-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다음 해 2.10.까지이며, 1.1.~2.10.사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2010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10.까지이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종전과 같이 1. 31.까지임

□ 가산세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써,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
- 보고불성실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경우 또는 매출처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100(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10.까지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1.31.까지

제10절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정의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text{부가가치세} = \text{매출세액} - \text{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임
 -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임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함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음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

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총괄납부자,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의 신청을 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 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 세율 (2010년 귀속)			
구 분	과세표준 (업종구분)	세 율	업 종 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모든 업종	10%	-
간이과세자	소매업	10%	15%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20%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음식, 숙박업	10%	30%
	운수 및 통신업	10%	40%

□ 과세대상별 신고내용

사업자구분	기분	법정신고 기한	제출대상서류
일반과세자	1기예정	4. 1 ~ 4. 25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4. 영세율 첨부서류
	1기확정	7. 1 ~ 7. 25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2기예정	10. 1 ~ 10. 25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 13. 현금매출명세서
	2기확정	1. 1 ~ 1. 25	14.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16.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8.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간이과세자	1기확정	7. 1 ~ 7. 25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2기확정	1. 1 ~ 1. 25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6.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8.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른 해당 서류

□ 일반과세자 과세 흐름

매출세액		가 = (1) + (2) + (3) + (4)
(1)	과세분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2)	영세율(수출)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3)	예정신고 누락분	
(4)	대손세액 가감	
매입세액		나 = (5) + (6) + (7) - (8)
(5)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분 + 고정자산 매입분
(6)	예정신고 누락분	
(7)	기타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고금의제매입세액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납부(환급)세액		다 = 가 - 나
경감공제세액		라 = (9) + (10)
(9)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일반 매입분 + 고정자산 매입분
(10)	기타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현금영수 증사업자 세액공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마
예정고지세액		바
가산세액		사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다 - 라 - 마 - 바 + 사

□ 간이과세자 과세흐름

매출세액		가 = (1) + (2) + (3)
(1)	과세분	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100)
(2)	영세율 적용분	
(3)	재고납부세액	
공제세액		나 = (4) + (5) + (6) + (7) + (8)
(4)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5)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농산물등의 가액×3/103 (2009.1.1~2010.12.31.까지는 8/108)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7)	전자신고세액공제	
(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가산세액		다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가 - 나 + 다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국세청 자료 활용사례

제3장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국세청 자료 활용사례

제1 절 국민건강보험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가. 부과체계의 변천과정

1) 조합방식하의 보험료 부과체계(1987~1998.9)

-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은 일본의 의료보험법 체계를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음
 - － 보험료 부과체계도 일본을 모델로 하여 개발되었음
 - 조합당시의 보험료 부과체계
 - － 기본보험료(세대당 및 피보험자당 정액) + 능력비례보험료(소득비례보험료 + 재산비례보험료)
- ※ 일본은 제도시행(1959년)후 40년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어 옴

□ 부과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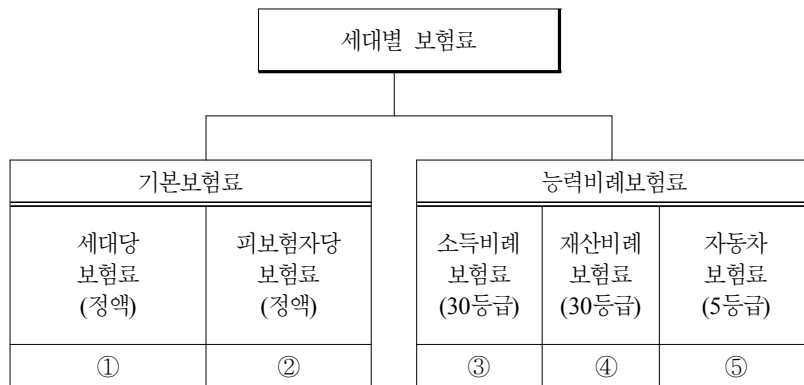
- 보험료산정방식 : ① + ② + ③ + ④ + ⑤
- 소득비례보험료

- 과세소득 있는 세대 : 과세소득금액으로 부과
- 과세소득 없는 세대 : 기타소득금액(신고소득 또는 추정소득)으로 부과

○ 재산비례보험료

- 과세재산 있는 세대 : 과세재산금액으로 부과
- 과세재산 없는 세대 : 전세 또는 월세금액으로 부과
- 자동차 보험료 : 자동차가 있는 세대에 부과
- 227개 지역조합의 기본 부과모형은 유사하였으나, 구체적 모형 및 부과체계는 조합별 정관에 따라 각기 상이하게 운영되었음

[그림 3-1] 조합방식하의 보험료 부과모형



□ 부과요소별 보험료 구성비

〈표 3-1〉 조합방식하의 부과요소별 보험료 구성비

(1998년 기준, 단위 : %)

구 분	기본보험료			능력비례보험료				
	소계	세대당	피보험자당	소계	소득비례보험료		재산비례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기타소득	과세소득		
구성비	31.9	9.2	22.7	68.1	21.8	15.5	25.1	5.7

□ 부과체계의 문제점

○ 지역에 따라 보험료 부담차이

- 같은 부담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조합의 재정력 격차에 따라 상이한 보험료 부담

○ 조합별 보험료 부과요소(기타소득)가 상이

- 추정소득(직업·직종)요소 등 25종 가운데 조합별로 선택하여 다르게 적용
- 조합별로 기본보험료의 부담 차이가 있음
- 기본보험료 구성비 :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줌

〈표 3-2〉 기본보험료 구성비 변화(1988~1997년)

1988년	1991년	1994년	1997년
59%	48%	39%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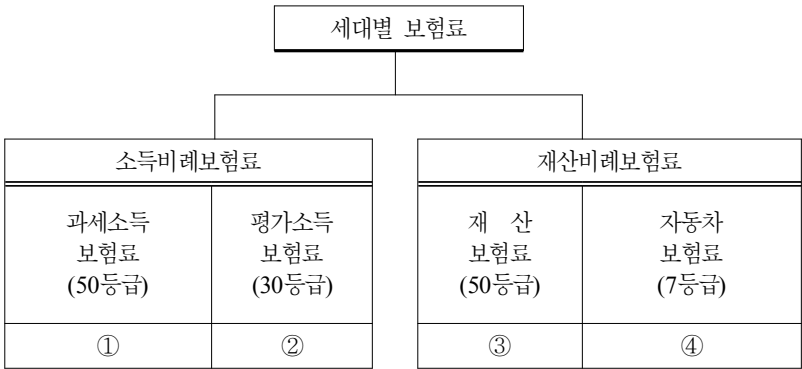
2) 지역가입자에 대한 통합보험료 부과체계(1998.10~2001.12)

- 조합방식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근간으로 개발
- 조합방식의 기타소득 보험료 부과 임의성 배제, 단일부과기준 실현
- 전국민을 같은 기준으로 부과, 부담의 형평성 확보
 -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소득·재산이 같으면 같은 보험료 부담

□ 부과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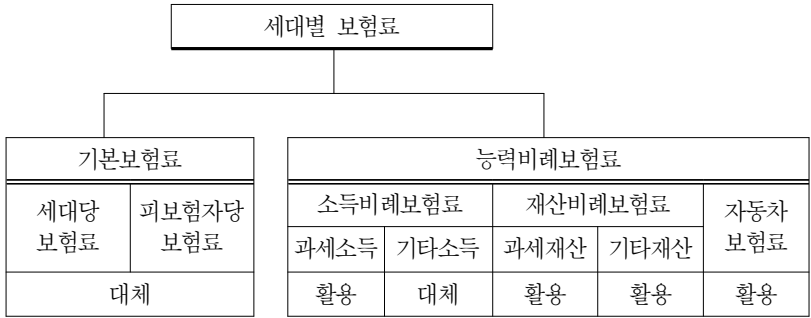
- 보험료산정 방식 : (① 또는 ②) + ③ + ④
 - 과세소득이 있는 세대 : ① + ③ + ④
 - 과세소득이 없는 세대 : ② + ③ + ④
 -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포함

[그림 3-2] 지역가입자에 대한 통합보험료 부과모형



□ 조합방식하의 부과요소 활용

[그림 3-3] 지역가입자 통합보험료 부과모형 시 조합방식하의 부과요소 활용



- 조합방식 당시의 세대 및 피보험자당 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보험료는 국민의료보험법체계상 적용이 불가하여 평가소득보험료에 반영
- 기타소득보험료는 전국차원의 단일부과체계에 부적합하여 평가소득 보험료로 개선

〈표 3-3〉 조합 대비 부과요소별 보험료 배분비율 비교

(단위 : %)

구분	계	기 본 보험료	기타소득 보험료		과세소득 보험료	재 산 보 험 료			
		평가소득보험료				소계	기타	부동산	자동차
		성·연령	재산	자동차					
조합	100	31.9	21.8		15.5	30.8	2	23.1	5.7
통합	100	50			16	34	27	7	
		30	10	10					

-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종전보다 낮아지도록 하면서 227개 지역조합 보험료의 변동폭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함
- 평가소득의 평가요소별 배분 : 조합방식 당시의 기본보험료는 성·연령요소에, 기타소득 보험료는 재산과 자동차요소에 각각 배분

□ 평가소득 보험료

○ 개념 및 의의

- － 평가소득은 소득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세대(전체 세대의 90%)의 경우 당해 세대의 소득(연간 500만원 이하) 및 재산의 정도, 세대원인 지역피보험자의 장애정도, 성·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참여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소득임
- － 평가소득은 보험료 부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의제소득으로써 경제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님
- － 평가소득은 지역피보험자의 재산정도,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현실적인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님(서울 행정법원, 99구 26890)

○ 도입배경

- － 소득자료가 전혀 없는 세대가 전체세대의 70%이며, 과세소득자

료가 있는 세대라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영세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기 곤란한 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 이들 세대에 대한 형평에 맞는 보험료부과체계 개발이 필요하였음

○ 산정방법

평가소득점수산정 : 평가소득점수 + 가산점수

- 평가소득점수 : 성·연령별 평가구간 점수 + 재산구간 점수
+ 자동차 구간점수
- 가산점수 : 5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 50만원당 1점부여

- 소득이 포착되지 않는 계층에 대하여는 일종의 의제소득이라 할 수 있는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함
- 가입자의 성·연령과 세대의 재산·자동차·소득(500만원 이하)으로 평가하며 소득에 대한 대체소득자료임
- 성·연령은 경제활동참가율과 평균소득의 평균지수로 성별 연령 대별로 절대평가한 지수에 대하여 유사구간을 묶어 4개 그룹으로 나누었음
 -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지수: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97
 - 성·연령별수입지수: 통계청, 「가구소비실태보고서」, 1996
- 재산·자동차는 그 정도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눈 후 등급 수에 따라 차별화 된 점수(등급수 × 단위 점수 값)를 부여한 것으로 상대평가한 것임

〈표 3-4〉 평가소득 요소의 기준구간표

구 분		1구간 (기본)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가입자의 성 및 연령별	남성	19세이하	60~64 세	20~29 세	30~49 세	-	-	-
		65세이상		50~9세				
	여성	19세이하	60~64 세	25~29 세	20~24 세	-	-	-
		65세이상		50~59 세	30~49 세			
재산 정도 (만원)		0~300	301~600	601~1,000	1,001~2,000	2,001~5,000	5,001~10,000	10,001 이상
자동차 연간세액		6만4천원 이하	10만원 이하	21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55만원 이하	66만원 이하	66만원 초과

〈표 3-5〉 구간별 평가점수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가입자의 성 및 연령별	남성	1.4	4.8	5.7	6.6	-	-	-
	여성	1.4	3.0	4.3	5.2	-	-	-
재 산 정 도		1.8	3.6	5.4	7.2	9.0	10.9	12.7
자동차 정도		2.0	3.9	5.9	7.9	9.9	11.8	13.8

○ 기 능

- 소득 무자료세대와 소득 유자료세대간의 부과의 형평 제고
- 무자료세대간의 부담능력 차이 반영
- 응익할(기본보험료)적 기능

○ 소득과의 상관관계

- 성·연령 및 장애여부는 현재의 소득기회(가능 또는 잠재능력)로써 소득과 유사한 상관관계를 가짐
- 재산, 자동차 요소는 현재의 소득은 아니나 과거소득의 축적(stock)과 현재의 소득능력이 합성되어 있는 것으로 소득과 상관관계를 가짐

3) 지역가입자에 대한 통합부과체계 개선(2002.1~현재)

-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부과표준소득” 문제
 - － 주요 검토사항 : 소득으로 표현할 것인가, 점수로 표현할 것인가 등
- 통합된 조직에서 직장보험료와의 형평성 문제
 - － 주요 검토사항 : 상한선 문제, 등급체계 문제, 형평계수의 적용 문제 등
- 개정법이 정하는 이원화된 부과체계에서 지역가입자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개선
 - － 주요 검토사항 : 평가소득 기본 1구간 폐지, 재산 및 자동차 이중적용 문제 등

□ 법령의 변화

- 2002년부터 시행된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는 부과표준소득의 구성요소인 소득·재산·생활수준·직업·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지수화 하여 이를 보험료로 환산하는 추정소득의 형태

〈표 3-6〉 관련 법 변천 내용

국민의료보험법 (2001.12.까지적용)	제정국민건강보험법 (1999. 12. 시행전 폐지)	개정국민건강보험법 (2002.1.부터 시행)
소득(평가소득포함) · 재산(제4조 제8호)	소득 : 사업·자산의 운용 및 근로의 제공 등에서 얻은 수입운용 및 근로의 제공등에서 얻은 수입(제64조제2항)	부과표준소득 : 소득·재산·생활수준·직업·경 제활동참가율(제64조제1항)

-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기준 이원화
 - － 지역 : 부과표준소득
 - － 직장 : 표준보수월액(보수/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금품)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체계가 소득(수입) 단일 부과체계로 규정되어 있던 제정국민건강보험법을 부과표준소득기준으로 개정('99.12.31), 2002.1.1.부터는 부과표준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

- 2001년 말까지는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료부과체계를 적용(법 부칙 제10조의2)
- 2002년부터 시행된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는 부과표준소득의 구성요소인 소득·재산·생활수준·직업·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산정방법·기준 기타 필요사항을 정하도록 개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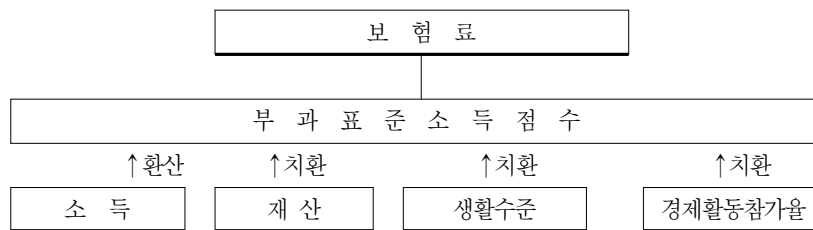
□ 개정 부과체계의 주요 내용

○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부과표준소득에 적합하도록 부과체계를 전환하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설명이 가능한 최적의 부과모형을 개발

- 소득금액으로 표현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특성상 민원에 대한설명력(대항력)이 없음. 따라서, 상대평가 개념의 부과표준소득(점수)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추진

○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 부과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공단 정관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액 확정시 양 집단간 보험료 부담액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 보험료 총액을 양 집단에 공평하게 분담하는 방안 마련

[그림 3-4] 부과표준소득에 적합한 지역가입자 통합부과체계 전환



2.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 및 정산 시 국세청 자료 활용실태

〈표 3-7〉 현행 직역간 보험료 부과기준 비교표

구 분	직 장	지 역
보수의 범위	▪ 근로 대가로 지급받은 근로소득(비과세근로소득 제외)	▪ 소득·재산·생활수준 등으로 득점수를 산정(부담능력)
보험료 결정	▪ 보수월액×보험료율	▪ 부과표준소득(점수)×환산금액
보험료 부담	구 분 가입자 사용자 국가 ▪ 근로자=50% 50% ▪ 공무원=50% - 50% ▪ 교직원=50% 30% 20%	▪ 지역가입자 = 100% ※ 지역보험료는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
납부의무 및 체납처분 등	▪ 근로자... 사용자 ▪ 공무원... 기관의 장 ▪ 교직원... 사립학교의 장	▪ 세대 전원이 연대 납부
특징	▪ 단일부과요소 → 정율적용	▪ 복합부과요소 → 차등적용

□ 직장보험료 부과기준

$$\text{직장보험료} = \text{보수월액} \times \text{보험료율}$$

○ 보수월액 결정

- 전년도 실지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사업장(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종사한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결정
- 적용기간 ...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시행령 제36조 및
제34조

○ 보험료액 산출 ... 보수월액 × 5.64%(2011년도 보험료율)

○ 보험료 부담률

- 건강보험료율 : 5.64%

〈표 3-8〉 현행 직장보험료 부담율

(단위 : %)				
구 분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로자	5.64(100)	2.82(50)	2.82(50)	-
공무원	5.64(100)	2.82(50)	-	2.82(50)
사립학교교직원	5.64(100)	2.82(50)	1.692(30)	1.128(20)

- 가입자부담(50%) 건강보험료 산정 = 보수월액 × 보험료율 (2.82%)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 ÷ 근무월수
- 1인 총 건강보험료(가입자부담 50% + 사용자부담 50%) = 가입자 부담보험료(10월미만 단수 버림) × 2

〈표 3-9〉 현행 직장보험료 보수월액 범위별 월보험료 산정방법

보수월액 범위	보험료율(가입자부담)	월보험료 산정
28만원 미만	2.82%	= 28만원 × 2.82%
28만원이상~6,579만원	2.82%	= 보수월액 × 2.82%
6,579만원 초과	2.82%	= 6,579만원 × 2.82%

○ 보험료 납입고지 및 납부기한

- 납입의무 ... 사용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68조
- 납부기한 ... 다음 달 10일 §법 69조

□ 지역보험료 부과기준

$\text{지역보험료} = \text{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 \times 165.4\text{원}(2011\text{년 적용점수당 금액})$
--

○ 부과체계

-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부과요소별

- 부과요소 :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연령
- 부과모형
 - － 소득금액 연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를 달리 적용

〈표 3-10〉 현행 지역보험료 산정방법

등급구분	산정방법(점수합산)	보험료 결정
① 소득등급별점수(70등급) - 종합소득·농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500만원 이하 ... ②+③+④ • 소득 500만원 초과 ... ①+②+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표준소득 결정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② 재산등급별점수(50등급) - 건물·토지 등 - 전·월세보증금		
③ 자동차등급별점수 - 7등급(28구간)		
④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점수(30등급) - 성·연령·재산·자동차 - 소득금액에 가산점수 (50만원당 1점)		

○ 부과자료 유형 및 연계시기

- 종합소득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2009년도 귀속분) : 국세청
- 연금소득(2010년도 지급확정분) :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공적연금 지급기관
- 재산세 과세자료(2010년도분) : 서울특별시 및 전국 시·군·구
 -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 2010.6.1. 소유기준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함
-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하며 또한, 보험료는 법령상 월별로 부과하며 일할 계산은 하지 않음

〈표 3-11〉 현행 부과자료 유형 및 연계시기

부과자료명		귀속연도	확보시기	연계시기	자료제공기관
종합소득		직전년도 귀 속 분	매년9~10월	매년11월	국세청
농업소득		직전년도 귀 속 분	매년8~9월	"	시·군·구
재 산	주택	당년도분	매년9월	"	지방자치단체별 (시·군·구)
	건축물	"	"	"	
	토지	"	"	"	
자동차등록자료		전월변동	매월초	매월	국토해양부('10.7월-) 특별시, 광역시·도('10.6월)
연 금 소 득	공무원연금	당년도분	매년9월	매년11월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	"	"	"	"
	군인연금	"	"	"	국방부 연금과
	국민연금	"	"	"	국민연금관리공단
	별정우체국	"	"	"	별정우체국 연합회

주: 신규부과자료 일괄연계 ... 매년 11월
 농업소득은 5년간(2006년부터) 과세중단으로 미부과
 연금소득 신규변동자 매월연계

제2절 국민연금

1. 연금보험료 부과 및 정산 시 국세청 자료 활용실태

- 여기서는 국세청 자료가 국민연금의 자격 및 소득관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국민연금이 입수 및 활용중인 국세청 과세자료의 종류
 - 개인소득자료 : 근로소득 및 종합·추계소득자료

- 사업장관련자료: 사업자등록자료 및 사업장 휴·폐업신고자료
 - － 참고로, 국민연금은 효율적인 사업장 및 가입자관리를 위해 위와 같은 국세청자료외에도 건강 및 고용보험자료(사업장 및 개인의 소득관련자료 포함),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망자료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수하여 활용중임.

〈표 3-12〉 입수·활용중인 주요 국세청 소득관련자료

자료종류	입수시기	주요 활용처
사업자장관련자료	매월	사업장관리
근로소득자료	매년 3~4월	사업장가입자 정기소득결정등
종합·추계소득자료*	매년 9~10월	지역가입자 소득조정 등

* 종합소득자료는 부가세 일반과세자 등에, 추계자료는 부가세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소득자료임.

□ 과세자료의 입수시기 및 주요 활용처 등

- 사업자등록자료 및 사업장 휴·폐업신고자료
 - － 입수주기 및 시점 : 매월 초
 - － 주요 활용처 : 미신고사업장의 신고 안내, 휴·폐업사업장의 정리 등 사업장 자격관리에 활용
- 개인소득세자료
 - － 근로소득자료
 - 국세청에 매년 3~4월경 자료제공 요청, 4월경에 입수
 - 자료 크리닝 및 가입자 대사, 전산화 등을 거친 다음
 - 6월경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정기 소득결정 및 사업장·지역가입자의 자격관리 및 소득관리, 기타 불성실 소득신고(미신고+축소신고) 사례 발굴·시정 등에 활용
 - － 종합소득 및 추계소득자료
 - 매년 8월경 국세청에 제공 요청, 3월경에 요청·입수한 근로소득 자료와 함께 연말경 주로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소득조정 등에 활용
 - 전체 지역가입자에 대한 과세자료(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는

10월경에 비로소 모두 입수·취합되고, 국민연금 관리대상자 기초정보와 대사를 거쳐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바 거의 연말경쯤에 가서 지역가입자의 자격관리 및 소득조정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 가능

- 입수건수 : 국민연금공단은 '08년 귀속소득 기준 국세청으로부터 총 2,400만여건의 소득자료를 입수
- 그러나 특히 지역가입자(가입확인대상자 포함)의 경우 입수건수가 총 1200만 건이 넘지만 중복자료 및 과세소득이 신고소득보다 낮은 자료 등이 많고 소득귀속(발생)시점과 자료의 활용시점간의 넓은 시차(1~2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득조정 등에 활용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는 실정임

〈표 3-13〉 가입자종별 입수 소득자료('08 귀속소득)

(단위 : 천건)

구 분	계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계	24,234	12,240	11,994
1차(4.9) - 근로소득	14,566	4,896	9,670
- 원천징수사업	519	474	45
2차(9.21) - 사업소득	6,567	4,698	1,869
3차(10.13) - 추계자료	2,582	2,172	410

주: '지역가입자'에는 아직 가입 혹은 적용제외를 확정할 수 없는 가입확인대상자도 포함
자료: 공단내부자료

2. 자격관리 부문

□ 사업장관리

○ 당연적용사업장

－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의 당연적용사업장이 됨

－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당연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 사업장의 신고의무와 가입처리원칙

- 사용자는 사업장의 성립·휴폐업 등에 관한 사항, 가입대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소득, 자격취득·상실 등)에 대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각종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짐
- 당연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장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자진신고(그에 따른 가입)을 원칙으로 함

○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

-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적자료(건강보험자료, 고용보험자료, 사업자등록증)나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확인·발굴하며,
 - 한번 더 자진신고를 안내하며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직권가입 및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함
- 공단 본부에서는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미신고사업장을 매월 발굴하고, 지사에서도 세무서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가입확인대상 사업장을 수시로 발굴
 - 이때 고발조치 및 그에 대한 벌금의 부과 등 극단적 조치는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익이 없어 이제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당연적용 사업장 수

- 2010년말 기준 100만개를 넘어선 상태
-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이 전체 적용사업장의 63%를 차지

〈표 3-14〉 적용사업장 규모별 사업장 및 가입자 비중(2010.11)

(단위: 개소, 명, %)

규모	5인미만	5-9	10-49	50-99	100-499
사업장	650,458	211,790	143,552	13,297	9,183
비율	(63.2)	(20.6)	(13.9)	(1.3)	(0.9)
가입자	1,472,229	1,365,477	2,685,715	918,348	1,712,555
비율	(14.1)	(13.1)	(25.7)	(8.8)	(16.4)
규모	500-999	1000-2999	3000-4999	5000-9999	10000이상
사업장	777	396	71	41	26
비율	(0.1)	(0.0)	(0.0)	(0.0)	(0.0)
가입자	537,298	640,795	273,893	272,800	565,345
비율	(5.1)	(6.1)	(2.6)	(2.6)	(5.4)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업통계(안), 2011.1.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관리

○ 당연가입자격요건

-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단, 외국인이라도 법에 정한 경우 가입대상)
- 구체적으로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법인의 임원 및 이사를 포함)로서
- 1월 이상의 상시고용 근로자 및 월 6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로자(대학시간강사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업장가입자에 해당)는 당연적용가입자가 됨
- 다만, 18세 미만의 근로자 혹은 월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음

○ 사업장가입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국내거주 및 연령요건(18~60세 미만)을 충족하더라도
-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자 및 특수직역연금의 퇴직연금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자격상실

- 기본적으로 60세 도달, 국적상실 및 해외이주, 사업장가입자 범위

에서 제외되는 사유(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자 등이 될 때)가 발생한 때 등

○ 근로자의 가입자격의 취득·상실신고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장의 사용자가 그 신고의무를 지며
- 사용자는 근로자의 가입자격 취득·상실 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자진 신고하여야 함

○ 가입신고누락 등의 관리원칙

- 매월 입수되는 건강보험·고용보험의 사업장관련 자료,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 등의 공적자료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발굴 관리
-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신고기한 초과 및 미신고 시 자진신고 독려 및 행정조치(직권가입, 고발조치)를 취함
 -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독려나 직권가입 조치까지는 취하지만, 고발조치 및 그에 따른 벌금부과(50만원) 등의 강한 조치는 사용자의 반발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취하지 않음

□ 지역가입자의 자격관리

○ 당연가입요건

-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단, 외국인이라도 법에 정한 경우 가입대상)
-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를 지역당연가입자로 포괄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 지역당연가입자 범주에서 제외되는 자

- 특수지역연금가입자 및 그 퇴직연금등수급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자
- 국민연금의 가입자(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및 퇴직연금·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수급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단,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행방불명자
-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자(국외 장기체류자 등)

○ 자격의 상실

- 위의 지역당연가입 제외자에 해당되는 때
- 사망 등

○ 지역가입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 전적으로 가입자(대리인도 가능)가 신고의무를 지며,
 - 자격취득 및 상실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자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실적으로는 공단은 사전에 가입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가입을 안내하고 적시에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가입대상자의 발굴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 국민연금의 사업장·지역가입자 자료,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 등을 통하여 지역당연 가입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함
- 특히 가입자의 배우자나 보험료납부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 인 자의 경우 소득유무가 당연적용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 그 판단은 주로 국세청 자료(사업자등록자료+과세소득자료),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자료상의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하거나 혹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자로서 연말정산대상자인 보험 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의 경우 관련자료(연말정산자료)를 활용하여 소득활동 유무를 확인하고 있음

○ 가입확인대상자

- 한 시점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18세~60세)와 기가입자자료 등 공적자료를 대사할 경우 사전에 당연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 있음
- 이들은 객관적 공적자료로는 소득유무나 결혼여부 등을 파악할

수 없어 당연가입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여 공단은
'가입확인대상자'로 임시 관리함

- 가입확인대상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가입대상자(지역가입자) 혹은 적용제외자로 분류하게 됨
- 예를 들어, 2010말 기준 가입확인대상자는 170~180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음

○ 가입확인대상자 중 당연가입대상자의 미신고 및 신고기피자 관리

- 사전안내 등을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관리 시와 유사하게 자진신고 재유도, 행정조치(직권가입, 행정조치)를 취하게 됨
- 그러나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고발, 벌금부과 등의 행정조치는 가입자의 반발 및 민원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취하지는 않고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 당연적용사업장수

- 2010.11월말 기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수는 총 100만여개로 제도도입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
- 특히 2003년부터 시작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확대사업 등으로 크게 증가 중

○ 사업장가입자수

- 2003년부터 시작된 사업장적용확대사업(5인 이상 → 1인 이상)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1,000만명을 넘어서고 있음

○ 지역가입자수

- 지역가입자는 '99.4월 도시지역 확대시점에 1,000만명 이상에 달하다가 03년 사업장가입자로 흡수편입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로 인해 1999년 사업장가입자의 두 배에 달하던 지역가입자 규모는 사업장가입자규모의 급속한 증가로 오히려 사업장가입자 규모에 비해 적어진 상태

○ 총가입자수

- 총가입자란 당연적용가입자(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를 합산 가입자 규모를 말하는데,
- 특히 사업장가입자의 지속적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0.11월 기준 1,930만명에 달하고 있음

〈표 3-15〉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의 변화 추이

(단위:개소, 명)

구분 연도	총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88.12	4,432,695	58,583	4,431,039	-	-	-	1,370	286
'92.12	5,021,159	120,374	4,977,441	-	-	-	32,238	11,480
'95.12	7,496,623	152,463	5,541,966	1,890,187	1,890,187	-	48,710	15,760
'96.12	7,829,353	164,205	5,677,631	2,085,568	2,085,568	-	50,514	15,640
'99.12	16,261,889	186,106	5,238,149	10,822,302	2,083,150	8,739,152	32,868	168,570
'00.12	16,209,581	211,983	5,676,138	10,419,173	2,037,722	8,381,451	34,148	80,122
'01.12	16,277,826	250,729	5,951,918	10,180,111	2,048,075	8,132,036	29,982	115,815
'02.12	16,498,932	287,092	6,288,014	10,004,789	2,007,196	7,997,593	26,899	179,230
'03.12	17,181,778	423,032	6,958,794	9,964,234	2,062,011	7,902,223	23,983	234,767
'04.12	17,070,217	573,727	7,580,649	9,412,566	2,009,142	7,403,424	21,752	55,250
'05.12	17,124,449	646,805	7,950,493	9,123,675	1,969,017	7,154,658	26,568	23,713
'06.12	17,739,939	773,862	8,604,823	9,086,368	1,972,784	7,113,584	26,991	21,757
'07.12	18,266,742	856,178	9,149,209	9,063,143	1,976,585	7,086,558	27,242	27,148
'08.12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09.12	18,623,845	979,861	9,866,681	8,679,861	1,925,023	6,754,838	36,368	40,935
'10.11	19,249,405	1,029,591	10,444,455	8,672,574	1,948,755	6,723,819	83,323	49,053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업통계(안), 2011.1.

3. 소득관리 부문

□ 기본원칙

- 자격 취득신고 시 소득의 유무를 자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해당 가입자가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를 짐
- 소득신고여부에 따른 가입자의 분류
 - －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자격취득 시 소득활동의 유무에 따라 소득 신고자와 납부예외자로 분류하여 관리함
 - 이때 ‘납부예외’라 함은 일시적 소득활동의 중단 등으로 보험료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보험료부과를 일시적으로 유예(가입자자격은 유지되나 보험료 부과 즉 고지가 되지 않음)되는 경우를 말함
 - － 가입자는 자격취득 당시 실업·휴직, 휴·폐업, 3월 이상 입원, 기초생활곤란, 학업·군복무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음
 - 그러나 특히 실업의 경우 공식적인 실업인정자료 등 소득활동 여부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관계로 ‘실업 중’(납부예외사유의 76% 차지)이라고 가입대상자가 주장할 경우 불가피하게 납부예외자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로 인해 대규모의 납부예외자(2010.11월 기준 510만명)가 발생 중임(전체가입자 대비 26%, 지역가입자 대비 58.8% 상당)
 - 자연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 기초생활곤란 등 :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재학 등 : 재학, 병역의무, 27세 미만인 자 중 납부이력보유자

〈표 3-16〉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중

(단위:명, %)

구분		계	도시	농어촌
계		8,672,574 (100)	6,723,819	1,948,755
소득신고	인원	3,571,167 (41.2)	2,646,834	924,333
	비율	(100)	(74.1)	(25.9)
납부예외	인원	5,101,407 (58.8)	4,076,985	1,024,422
	비율	(100)	(79.9)	(20.1)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납부예외자가 거의 없어 별도 통계를 내지 않음.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업통계(안), 2011.1.

〈표 3-17〉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의 납부예외 사유별 현황(2010.11)

(단위:명, %)

구분	계	실직	휴직	사업중단	3월이상입원	자연재해	기초생활곤란등	교도소수감등	주소불명	재학등
계	5,101,407	3,851,360	77,190	420,808	7,422	466	273,144	7,504	87,229	376,284
(%)	(100.0)	(75.5)	(1.5)	(8.2)	(0.1)	(0.0)	(5.4)	(0.1)	(1.7)	(7.4)
도시지역	4,076,985	3,075,867	61,127	329,759	4,988	206	214,548	5,512	77,131	307,847
농어촌지역	1,024,422	775,493	16,063	91,049	2,434	260	58,596	1,992	10,098	68,437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업통계(안), 2011.1.

○ 소득신고자의 소득결정 및 적용원칙

－ ‘소득신고자’로 분류되는 사람에 대해

- 공단이 가입자(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자진신고한 소득(액)에 기초하여 기준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 및 급여의 결정에 적용하는 소득)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최초가입 시(납부재개시 포함) 소득의 결정을 ‘수시결정’이라고 하며, 가입중 소득의 결정은 ‘정기결정’이라고 함.

- 수시결정된 소득은 정기결정(매년 6월)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만 적용하고, 정기결정된 소득은 1년간 적용(해당년 7월에서 익년 6월)

- 정기결정은 사실상 사업장가입자에 국한되며, 지역가입자는 거의 수시결정에 의존하고 있음(후술 참조).

□ 사업장가입자의 소득관리

○ 소득의 범위

-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함) : 종합소득
- 근로자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시(수시결정)
 - 이 시점에서는 아직 국세청 자료 등 객관적 소득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해진 기준(아래 box 참조)에 의거하여 사업장(사용자)에서 신고한 소득에 의거하여 공단이 소득월액을 결정
 - 이렇게 결정된 소득은 정기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익년도 6월말) 적용

(가) 월, 주, 그 밖의 일정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나) 일, 시간, 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다) 위 (가), (나)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 가입기간 중 소득결정(정기결정)

- 결정대상 :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 결정방법 : 2009년 이전에는 사업장이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나 2009년의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 <표 3-18>과 같이 결정함
- 즉, 기본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장의 사용자 제외)의 소득은 연말정산자료상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소득결정을 위해 종합소득자료가 필요한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혹은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소득이 최근의 소득과 30% 이상 큰 변동이 있는 경우 등은 사용자의 신고소득에 기초하여 결정

- 최근 국세청 근로소득자료가 잘 정비됨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약 90%는 ‘신고주의’가 아니라 ‘과세근거주의’에 의거하여 소득을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음

〈표 3-18〉 '09년 시행령 개정 전후의 소득월액 정기결정방식의 비교

개정 전	개정 후(2009.2.25 시행)
사업장의 전년도 소득총액 신고에 의하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 : 소득세법 164조에 따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자는 공단이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결정 - 소득총액 신고에 의한 결정 : 개인사업장사용자, 근로소득 미보유자(자료상이자 포함)등은 소득총액신고 의하여 결정

- 소득월액의 산정 :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근무(사업)일수로 나눈 금액의 30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결정
-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 근로자와 사용자간 서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 2009년 시행령 개정으로 일원화. 즉, 해당 연도 7월부터 익년도 6월까지 동일하게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2009.2.25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이전 : 4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 2008년(이원화): 근로자 (4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vs. 개인사업장사용자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 이후 :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 (자발적) 미신고시 혹은 신고기한내 미신고 시 소득결정

- 객관적 소득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자료상의 소득액
- － 법 제122조(조사질문 등)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소득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 자격취득(납부재개)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에게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 가입기간 중(정기결정): 당해 가입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법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
- 불성실 소득신고 여부의 점검
 - － 자격취득자(납부재개자), 사업장의 사용자, 과세자료미보유자 등 신고소득에 기초하여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된 경우 그 소득의 정확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 이에 공단은 매년 근로소득자료 및 종합소득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대사를 통해 특히 ‘과세소득보다 낮게 소득이 신고된 경우’ 등을 중심으로 소득의 정정(소득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 이때 물론 과소신고는 물론 자격신고에서 누락된 사업장근로자도 포착하게 됨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과세소득자료는 소득발생시점과 과세자료 활용시점간의 시차가 적고 소득이 정확하여 소득조정 시 비교적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의 소득관리
 - 소득의 범위
 - － 종합소득 : 근로소득, 농어업 및 산림소득, 사업소득 등 한 개인에게 귀속하는 모든 소득의 합산액
 - 소득의 결정
 - － 사업장근로자와 달리 대부분의 지역가입자는 객관적 소득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개 가입자(혹은 대리인)가 신고한 소득 즉, 신고주의에 기초하여 (공단이) 소득을 결정

- 다만, 가입자가 소득을 신고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업 종별 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규모 및 농지면적 등을 기초로 공단이 미리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제시하거나 통지함으로써 소득신고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 － 자격취득(납부재개) 시(수시결정)
 - 가입자가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은 소득으로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에 기초하여 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 소득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사업장가입자와 유사하게 당년도라고 볼 수 있음
- － 가입기간 중(정기결정)
 - 신고대상자 : 공단이 현장조사 및 확인에 의거하여 종사업종의 변경 등 소득변경사유가 확인하거나 과세자료 등에 따른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기존의 신고된 소득(기준소득월액)과 크게 다르다고 인정되어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가입자
 - 이처럼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사실상 일을 적이고 정기적인 소득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공단이 현장조사나 객관적 소득자료에 의거 현저하게 소득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 가입자(소득신고자)를 중심으로 소득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소득결정의 준거가 되는 소득발생시점은 사업장가입자(전년도 귀속소득)와는 달리 지역가입 소득신고대상자의 경우 ‘당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소득조정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혹은 전전년도 또는 수년전의 소득일 수도 있음
 - 왜냐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입수된 과세소득자료 등에 기초하여 수시로 조정(소득상향조정사업 등)되고 있지만 과세소득자료의 미비(전체 지역가입자의 1/4정도만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과세소득이 신고소득에 비해 많은

경우'는 소득신고자의 10%에 불과함)로 수년간 한번도 소득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

- 소득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공단은 신고권장소득월액을 소득신고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 결정된 소득의 적용기간

-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차기 소득결정(과세자료 등을 통해 신고소득액이 낮은 경우 등이 드러나면)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 소득신고를 통지받은 지역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결정

- 자격취득(납부재개) 시

-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에게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 가입기간 중
- 당해 가입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변동율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

○ 소득신고 거부·기피자에 대한 소득결정

- 소득신고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소득신고를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에 한해 직권결정
- 이때 종사업무와 관련된 최근 소득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자료상의 소득으로 결정하며, 소득관련자료의 미보유시에는 중위수 소득으로 결정함

○ 성실소득신고(신고소득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점검

- 주로 3~4월(근로소득자료)과 9~10월(종합소득자료) 두 번에 걸쳐 입수된 과세소득자료에 기초하여,
- 특히 과세소득이 신고소득에 비해 현저하게 큰 경우에만 소득조정대상자(연간 40만명 정도)로 설정하고 소득상향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지역가입자 대비 과세소

득자료(사업자등록자료 포함) 보유자의 비율이 1/4에 불과하고 과
세소득이 신고소득에 비해 높은 경우가 많지 않아(소득신고자의
약 10%) 실효성이 있는 자격관리 및 소득조정이 어려운 실정임

□ 가입자(소득신고자)의 평균소득월액 현황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소득과약이 용이하여 평균소득이 매년 크게 증
가하고 있으나 소득과약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근 수년간
평균신고소득월액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실정임
 - － 두 집단간 소득격차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음
- 전체 가입자(소득신고자)의 평균소득월액은 그나마 사업장가입자의
증가 및 과약소득수준의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3-19〉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의 추이

(단위: 원, %)

구분 연도별	총평균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도시	농어촌
'99.04	1,095,773	1,439,751	785,159	841,170	628,839
'00.12	1,191,313	1,476,687	920,109	981,984	724,355
'01.12	1,290,706	1,607,129	960,552	1,018,510	773,458
'02.12	1,362,754	1,685,479	1,010,098	1,059,371	844,164
'03.12	1,454,948	1,769,132	1,050,021	1,091,742	914,249
'04.12	1,525,342	1,816,554	1,058,575	1,095,269	947,853
'05.12	1,586,424	1,875,458	1,074,539	1,109,098	972,024
'06.12	1,632,811	1,904,888	1,068,728	1,102,151	972,659
'07.12	1,690,829	1,956,433	1,076,608	1,107,499	987,050
'08.12	1,750,641	2,012,370	1,089,106	1,119,038	1,002,730
'09.12	1,776,824	2,024,080	1,104,313	1,132,685	1,022,735
'10.11	1,800,363	2,047,192	1,078,473	1,103,432	1,007,002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업통계(안), 2011.1.

4. 소결

- 현재 과세소득자료(사업자등록자료 등 포함)는 국민연금의 자격 및 소득
관리 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 특히 근로소득자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종전의 ‘신고주의’에서 ‘과세근거주의’에 의한 직권 소득(정기)결정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 이로써 종전과 달리 사업장(사용자)의 소득 사전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되므로 고객(사용자)의 편의성과 공단행정의 간소화·효율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과세자료가 없는 관계로 자격관리 및 소득결정이 사실상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자격관리 측면에서는 대량의 납부예외자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 소득관리측면에서는 소득발생기준연도가 제각각이고, 불성실 소득여부 조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소득조정이 과세자료보유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인프라의 미흡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약 60%는 납부예외자로 남아 있고, 이들은 장기적으로 미납자와 함께 무연금자로 전락 위험을 안고 있음
 - 지역 소득신고자의 경우도 사실상 신고소득이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의 1/2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낮아 저연금집단으로 추락할 수 있는 등 국민연금의 적정소득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본질이 있음
 - 따라서 가입 및 연금사각지대의 완화를 위해서,
 - － 먼저 현재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있는 근로자(전체 지역가입자의 약 50% 추정; 이용하 2010)를 가능한 소득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도록 사업장가입자로 조기에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 － 아울러 소득파악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세투명성과 보편성 제고 등 과세제도 전반의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3절 근로장려세제

1. 개요

가. 근거법령 및 법적 성격

□ 근로장려세제의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 시행령 제100조의2~제100조의14, 시행규칙 제45조의2~제45조의6

□ 근로장려금의 법적 성격

○ 근로장려금은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에 해당
 - 실무적으로는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한 후 결정세액과 차액을 환급
 - 미국도 EITC 급여를 과다납부한 세액(overpayment)으로 간주

구 분	근로장려세제(조특법)	소득세법
적용단위	가구(부부)	개인
성 격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해당 개념 없음 → 세액공제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경우 없는 것으로 함
적용계층	근로자 가구만 적용	근로자 등 모든 개인 소득자

나. 적용대상

□ 도입 초기에는 소득과약이 가능한 근로자부터 적용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과약이 가능

- 일용근로자의 경우 '06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 자영사업자는 '14년 소득을 기준으로 '1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 예정

다. 적용단위 : 가구단위

□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장려세제 적용

-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 확보
 - － 미국·영국 등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도 가구단위로 운용

2.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

< 개 요 >

- 총소득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 － 총소득이란 사업·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연금·이자·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
- 부양자녀요건
 - 18세 미만 자녀를 1인 이상 부양
 -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주택요건
 -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사람
 -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적용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가구단위로 적용
 -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장려세제 적용

가. 총소득 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일 것

- 형평성 차원에서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한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적용여부 결정
- 연간 총소득 1,700만원은 전국가구 중위소득 3,380만원의 50%에 해당하고, 4인가족 연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과 유사
 - － 근로장려세제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를 반영
 - 2007년 4인가족 최저생계비 : 월 120만 5천원, 연 1,446만원
 - OECD 기준에 따른 상대적 빈곤층(중위소득 50%이하) 수준과 유사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세제의 부양자녀에서 제외하여 간접적으로 세대원의 소득도 고려

□ 합산대상 총소득의 범위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을 합산
 - － 소득금액 합산 : 사업소득, 기타소득
 -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보아 경비 과다 계상을 통한 총소득의 인위적인 조정 방지
 - － 총수입금액 합산 :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만 합산

□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과세제외 연금소득을 포함하여 계산

- － 연금소득 과세방법 개정으로 '02년 이전 불입금으로 인한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4대연금) 등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 소득을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과세대상 연금소득과 동일하므로 총소득에 포함
- －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등은 '01년 이전 불입금으로 인한 연금 등이 해당

나. 부양자녀 요건

1) 부양자녀의 범위

□ 자녀 및 동거입양자

-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부양자녀는 부모가 실제 부양하는 자녀를 말함
- 부양자녀에 포함되는 동거입양자의 범위는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규정
 - －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도 동거입양자에 포함
- 자녀 및 동거 입양자의 설정은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부양자녀 기준(소득세법 제50조)과 유사하게 규정하여 국세행정체계 내에서 근로장려세제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함
 -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부양자녀 인정의 특례

- 부양자녀로 인정하는 손자녀의 범위
 - － 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
 -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 － 부 또는 모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
 -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부양자녀로 인정하는 형제자매의 범위

○ 부모가 없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

-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2) 부양자녀수 및 부양자녀 연령기준

□ 부양자녀수 기준

○ 근로장려세제 시행 초기에는 자녀 1인 이상 부양가구로 한정

－ 2008년 법령개정을 통한 부양자녀 요건 완화(2인 이상 부양 → 1인 이상 부양)로 대상자 확대

□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상 아동연령 기준인 18세 미만으로 설정

－ 대부분의 아동관련 복지제도가 18세 미만을 기준으로 운영

－ 근로기준법상 18세 이상이면 성년근로자로 간주하며,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연령기준 또한 18세 미만임

□ 장애인 부양자녀에 대한 연령 특례

○ 지속적인 부양의 필요성이 있는 장애인 부양자녀에 대해서는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두지 않음

－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양자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3) 부양자녀의 부양요건과 생계요건

□ 부양요건

- 부양자녀에 대한 생활상의 원조를 통해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함
 - －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부양하지 않으면 부양자녀로 보지 않음

□ 생계요건

-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자녀 판정 기준과 같이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친자(양자 포함) 관계에 있으면 생계요건 충족으로 봄
 - －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형제자매, 손자녀)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생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부양자녀의 판정시기

-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 단,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도록 하여 해당 연도에는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 부양자녀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
- 한 부양자녀에 대해 복수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 한 부양자녀에 대해 복수의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신청자격을 결정함

- ① 거주자 사이에 상호 합의하여 정한 자
- ② 당해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다만, 복수의 거주자가 당해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기간이 긴 자)
- ③ ②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많은 자
- ④ ②, ③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다. 주택 요건

□ 무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주택 한 채

- 주택소유는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전원을 기준으로 판정
 - 1세대 판정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 주택요건 판정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 소득세법상 세대 개념 >

- 부부가 그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의미함

□ 주택소유 기준

-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
- 겸용주택 :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

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공유주택 : 하나의 주택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경우로서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라. 재산 요건

□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재산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전원을 기준으로 판정
 - － 1세대 판정기준일 : 주택요건과 동일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 재산의 소유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 － 주택·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관리되는 점을 감안
 - － 단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직전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함

□ 재산의 소유자 판정

- 지방세법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봄
 - －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봄
 -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부상의 소유자
 - 신탁법에 의해 등기·등록된 신탁재산 : 위탁자

□ 재산의 범위

- 주택
 - － 소득세법 99조에 의한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
- 토지·건축물

- 재산평가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한정
- 승용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
 -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생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 재산범위를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
- 전세금(임차보증금)
 - 주택보유자와 주택미보유자 간의 형평성 유지와 전세금·임차보증금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계층의 주요 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재산범위에 포함
- 금융재산
 - 개인별 500만원 이상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저축성보험, 투자신탁 등으로 규정
 - 저축성 예금의 1인당 평균 금액(1,003만원)의 50%수준(500만원)으로 설정
- 골프회원권
- 유가증권 :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유가증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건축·재개발 등의 조합원입주권
 - 재건축·재개발 등의 조합원입주권외의 아파트 분양권 등
 - 토지상환채권
 - 주택상환사채

〈재산가액 평가방법〉

재산의 종류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평 가 방 법
주택	5,000만원 이하 소규모주택	기준시가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 부과대상의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영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시가표준액
전세금	전세금(임차보증금)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개인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인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저축성보험, 투자신탁	금융재산의 잔액
유가증권	개인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인 주식,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주식 - 최종시세가액 ▪ 그 외 주식 - 액면가액
골프회원권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국세청의 기준시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조합원 입주권	기준건물평가액+청산금
	▪ 분양권	소유기준일까지 불입금액
	▪ 토지상환채권	액면가액
	▪ 주택상환사채	액면가액

마.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자
- 외국인
 - 근로장려세제는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하여만 적용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근로장려금의 이중 신청을 방지

4. 근로장려금의 산정

가. 도입모형

□ 모형 형태

- 차상위 계층의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점증-평탄-점감 형태인 미국식 EITC 모형을 채택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근로소득(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



□ 근로장려금 산정

- 점증구간(0~800만원) : 근로소득 × 점증률(15%)
- 평탄구간(800만원~1,200만원) : 120만원(최대급여)
- 점감구간(1,200만원~1,700만원): (1,700만원-근로소득)×점감률(24%)

근로소득 (부부합산)	근로장려금	계산근거
300만원	45만원	300×15%(점증률)
500만원	75만원	500×15%(점증률)
800만원	120만원	120만원(최대급여)
1,000만원	120만원	"
1,200만원	120만원	"
1,400만원	72만원	(1,700만원-1,400만원) × 24%(점감률)
1,500만원	48만원	(1,700만원-1,500만원) × 24%(점감률)

□ 근로소득 구간별 근로장려금 산정률

○ 점증구간

- 상한 근로소득 : 800만원
-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법정 최대근로시간(주당 40시간)을 근로 시 받을 수 있는 연간소득 수준('07년 기준)
- 점증률 : 15%
- 근로자 사회보험료의 2배 수준(14.4%) 등을 고려

○ 평탄구간상한 근로소득 : 1,200만원

- 가구당 평균 근로인원 1.5명이 최저임금으로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간 소득수준(800만원×1.5)
 - 최대급여액 : 120만원(800만원×점증률 15%)
- 점감구간
- 점감률 : 24%
 - 근로소득이 1,200만원부터는 초과금액의 24% 점감률 적용

나.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 원칙적으로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

□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 현행 지급명세서의 제출제도에 비추어 볼 때 비과세소득 유형별 파악이 곤란
- 근로장려금은 소득세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므로 과세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 소득세 체계에 부합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 가족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면 사업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

- 임금 지급자와 수령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신고 내용에 대한 진실성 확인과 검증이 곤란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 근로장려세제는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만 적용
- 비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가사보조원, 자가용 운전원 등)에는 소득과약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

□ 주된 소득자의 결정

-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소득자에게 신청권한을 부여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행정절차를 명확히 함
- 주된 소득자 결정 순서
 -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
 -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 단,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않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주된 소득자로 함

다. 근로장려금 산정 적용예시

<사례 1>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경우

① 남편 근로소득 700만원, 아내 근로소득 0원

부부합산 근로소득 700만원→근로장려금 105만원(700만원 ×15%)

② 남편 근로소득 600만원, 아내 근로소득 400만원

부부합산 근로소득 1,000만원 → 근로장려금 120만원(최대급여액)

③ 남편 소득 800만원, 아내 소득 600만원

부부합산 근로소득 1,400만원 → 근로장려금 72만원 $\{(1,700-1,400\text{만원}) \times 24\%$

<사례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의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연 1,700만원) 이내인 경우에만 근로장려세제 적용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으로 계산

① 근로소득 1,000만원, 사업소득 500만원인 경우

- 총소득이 1,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세제 총소득요건 충족
- 근로소득은 1,0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20만원

② 근로소득 1,500만원, 사업소득 800만원인 경우

- 총소득이 2,3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세제 총소득요건 불충족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님

라. 근로장려금 결정

□ 근로장려금 산정표 활용

- 근로장려금 계산산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근로소득(총급여액) 구간별로 작성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활용하여 근로장려금 결정

5.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등 행정절차

가. 신청절차

□ 신청주의

- 근로장려세제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제도의 일종이므로 일반조세의 환급제도와 같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 및 그 배우자는 주소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함

- 근로장려금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봄('10년 개정)
- 단,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신청시기 : 매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인 5월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봄

□ 첨부서류 제출 및 신청내용 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

- 근로소득 증거자료 : 다음 중 1가지 제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수령통장 사본
- 급여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는 근로소득 입증서류 제출 생략가능

- 재산 증거자료 : 다음 서류 중 해당되는 경우 제출

-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임대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
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
상환사채 사본

나. 근로장려금 지급

□ 결정 및 결정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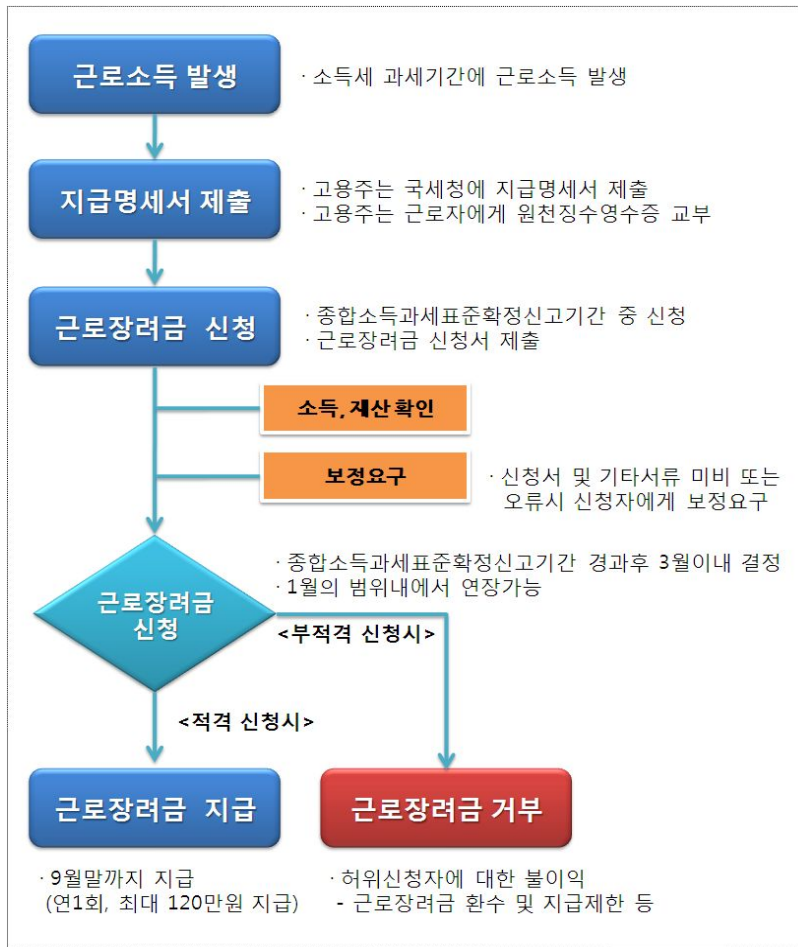
-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원칙적으로 신청기한 경과 후 3월내(8월말까지) 지급액 결정
- 지급결정 후 30일 이내에 급여지급 또는 거부 결정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
- 다만, 3월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장려금의 결정기한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로장려금 결정기한 연장 사유
 - －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 확인·자료요구·조사가 필요한 경우
 -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 확인·자료요구·조사가 필요한 경우
 - －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 지급주기 : 신청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연 1회 직접지급 원칙

□ 지급절차

- 근로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이므로 국세기본법상 환급절차 적용
- 근로장려세제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의 일종으로 일반 조세의 환급절차와 동일하게 운영

<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절차 >



다. 불복 절차

□ 국세기본법상의 불복규정 적용

- 근로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이므로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불복규정을 적용함

□ 불복청구 절차

- 불복방법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불복 처분대상 : 지급거부, 감액지급, 취소, 경정감액 등
- 청구기간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라. 허위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제한

- 고의·중과실 등으로 허위 신청한 경우 : 2년
 - － 예 : 수급요건 허위기재, 결격사유 고의 누락 등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신청한 경우 : 5년
 - － 예 : 소득자료·기타 증빙서류의 위조·변조 등

□ 오류 지급액 환수

- 세법상 취소·경정감액결정을 통한 지급액(상계 또는 환급) 추징
 - － 이자상당액 추징 : 일반 환급세액징수의 경우와 동일하게 설정
 - － 환급일로부터 환급취소 결정일까지 일 0.03%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징수
- 회수절차 : 국세징수법 준용
 -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도록 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제한·추징 이외에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 가능

외국의 국세청 자료 활용사례 및 동향

제4장

외국의 국세청 자료 활용사례 및 동향

제1절 호주

1.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급여 정산방식

□ 주요 급여유형

- baby bonus
- maternity immunisation allowance
- family tax benefit part A
 -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가장 보편적 수단임
- family tax benefit part B :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
- child care benefit
- child care tax rebate

□ Family Tax Benefit Part A

- 등록자격
 - 21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개인의 전체 시간의 35% 이상을 부양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21~24세의 전일제 학생인 자녀가 존재하는 개인
 - 소득조사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호주 거주자, 뉴질랜드 시민, 호주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자
- 급여는 가구의 실제 연간 소득에 기반하여 지급됨. 만일 격주 급

여 지급시에는 가구의 정확한 연간소득의 측정의 정보를 Family Assistance Office에 제공해야 함

□ Family Tax Benefit Part B

－ 자격요건

- 1차소득자의 연간소득이 1차소득 조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장 어린자녀가 16세 이하이며, 그들을 돌보는데 시간의 35%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 본 급여는 추가급여를 포함함

- 추가급여는 오직 지급된 급여의 조정을 한 때의 회계연도 말 이후에 유효함
- 개인 또는 그의 배우자가 납세신고서를 Australian Taxation Office에 제출한 이후에 발생하며,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Family Assistance Office에 알려야 함

□ Child Care Benefit은 Approved care와 registered care로 구성됨

－ Approved care

- long day care, family day care, in home care, outside school care, vacation care, and some occasional care service를 포함
- Family Assistance Office로부터 child care을 직접 받기 위해, 서비스는 정부로부터 승인됨

－ Registered care

- 직업과 관련된 돌봄을 위해 조부모, 친척, 친구, 부모등에 의해 제공됨
- 개인에게 급여제공을 위해 교사나 보호자는 Family Assistance Office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

－ 급여의 금액

- 급여는 가구의 연간소득에 기반하여 지급되며, 저소득가구는 본 급여의 가장 높은 급여율로 받을 수 있음

- 급여는 가구내 아동의 수에 따라 달라짐
- 급여율은 가구 소득이 일정 한계에 도달할 때 까지, 가장 높은 급여율에서 0으로 점감하는 형태임
- 급여지급의 방법
 - 개인은 지급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줄어든(reduced) child care fee의 형태로 child care service로 직접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이는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아동 돌봄의 비용이 덜 드는 것을 의미함. 개인의 급여는 본인이 사용한 아동 돌봄 비용으로부터 공제되며, 개인은 미결제 비용의 차이를 지불하면 됨
 - full child care를 1년 중 지불하고, 회계연도 말에 일시금의 형태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이 경우 child care tax rebate또한 일시불 형태로 받게 됨

2. 급여 수급방법 및 급여 사후정산

- 급여는 실제 연간소득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Family Tax Benefit Part A, Child Care Benefit은 가구의 연간 실제 소득에 기반함
 - Family Tax Benefit Part B는 가구내 낮은 소득자의 연간 실제 소득에 기반하며 소득 조사가 적용됨
- 정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급여 조정 및 사후정산 이 이뤄짐
 - 회계연도(각 년도 7.1~6.30) 말 Australian Taxation Office에 개인과 그의 배우자의 납세신고서를 제출하면, 급여지급액을 가구 실제 연간소득에 맞춰 조정함
 - 만일 가구의 소득이 저평가 되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급여를 신청하면, 초과지급을 받을 수 있음. Family Tax Benefit과 Child Care Benefit은 차후 세금환급이나 회계연도말

급여 보충 시에 포함되어 수급

□ family assistance의 급여수급 방법 선택 옵션

- Choice 1(연 1회 지급받는 방법): 실제소득을 알고 있는 경우,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tax system이나 Family Assistance Office를 통해 요청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본 방식의 장점은 실제 소득을 알고 있으므로, 과다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임
- Choice 2(some now and some later): Fortnight Family Tax Benefit, reduced child care fee는 추정된 연간 가구소득을 통해 지불되므로 과다 지급될 확률이 높음.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격주로 급여를 받고 회계연도 이후에 나머지를 받는 방법이 있음. 또한 1년 동안 zero-rate의 Child Care Benefit을 받고, 실제 소득을 아는 경우 회계연도 말 이후 자격을 받을 수 있음
- Choice 3(be paid fortnightly and as reduced child care fees): 현재 회계연도의 추정된 가구의 연간소득에 기반하여 지급됨. 급여는 개인 혹은 그 배우자가 세금신고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이뤄짐
- 일반적으로 가구 연간 소득의 변동이 심하면 2번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함
- 회계연도 말이 가까울수록 증가하는 급여는 개인이 이미 지급받은 모든 급여가 이미 높음을 의미함. 급여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남아있는 과다지급액은 회계연도 말에 반환될 것임

□ Medicare Safety Net threshold

- Family Tax Benefit을 연간 급여로 받는 경우 새해(1.1)가 시작되기 전까지 낮은 Medicare Safety Net threshold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만일 격주로 받는 경우 Family Tax Benefit Part A에 등록하는 날부터 낮은 Medicare Safety Net threshold의 자격이 주어짐

□ 가족 수당의 초과지급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소득을 과소추정했기 때문

이며, Fortnight Family Tax Benefit, reduced child care fee를 받는 경우 이러한 초과지급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음

- 각 회계연도 시작에 소득에 관한 추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음. 만일 개인이 이러한 추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Family Assistance Office가 평가할 것임
-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의 평가
- 모든 소득의 포함
- 개인이 얻게 될 급여의 수를 고려할 것

□ 각 회계연도 말에 급여의 조정이 이뤄짐

- Australian Taxation Office는 개인의 세금등록번호를 요청할 것이며 이 번호를 개인의 기록을 확인함
- 만일 개인이 과소 급여를 받은 경우 top-up급여를 얻을 수 있음. top-up은 family assistance 잔액이나 tax debt로 상환될 수 있음. 만일 개인이 과대급여를 받은 경우 되돌려 받아야 할 과다지급을 얻게 될 것임
- family assistance의 과다지급액은 top-up, 세금환급과 보충급여를 포함한 개인의 미래의 급여금액으로 수급

□ 납세신고서 제출에 관한 중요한 정보

- 개인 혹은 그의 배우자가 납세신고서를 제출하거나 Family Assistance Office에 납세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야 함(Australian Taxation Office가 제출의무 여부를 알려줌)
- 개인이 Family Tax Benefit Part A and Part B의 연말 보충을 포함한 top-up 지불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은 회계연도 말로부터 2년 내 납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납세신고서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 Family Tax Benefit의 지급이 과다지급 될 수 있음. 이러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 지급받은 회계연도의 말로부터 1년 이내 납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제2절 미국

1. 주정부 IEVS 운영사례

- 모든 정책 분야에서 그렇듯이 전자기술의 발달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사회보장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
-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모니터링 역시 예외가 아님. 특히 TANF와 같이 주정부의 역할이 강한 프로그램의 경우 미국에서는 주별로 다양한 형태로 전자기술을 통해 연관 기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 50개 주의 상황을 모두 제시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주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이용시스템이 IEVS (Income and Eligibility Verification System)임
 - 1982년 40억 달러의 돈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평가가 제시되자 미국은 1984년 Deficit Reduction Act(DEFRA)를 제정하여 주 정부에 대하여 IEVS의 이용을 강제
 - IEVS는 연방정부의 데이터와 주정부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스템
 - 이를 통해 주정부는 클라이언트가 TANF와 같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각 주의 기관들에게 제공한 소득과 같은 재정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이용함
 - 즉, 클라이언트의 소득과 여타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자격부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Kusserow, 1999: 1-5).
 - IEVS는 사회보장 행정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상호 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줌
 - 1991년 OIG의 연구는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가 주정부에 매우 유용하고, 주정부에 대하여 프로그램 실행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해주며, 책임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음
 - 동시에 주정부에 대하여 더 정교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함(Kusserow, 1999).

- 부정수급 등 사회보장 급여의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현재 미국의 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IEVS임
- 하지만 TANF의 내용이 개별 주마다 다양하듯이 IEVS의 이용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캘리포니아 주는 1987년부터 신청자와 수급자로부터 얻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IEVS를 사용
 - 주로 CalWorks, 푸드 스탬프, Medi-Cal, General Assistance(GA)의 수급자격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IEVS에 많은 컴퓨터들을 연결시키고 있음
 - 특이한 점은 IEVS를 신청자와 수급자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점
-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가 신청자를 선별할 때보다 더 광범위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음
 - 처음 신청자를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더 힘들고 복잡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함
 - 아이다호 주 역시 주와 연방 기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
 - 아이다호는 승인을 받은 후 획득한 IEVS 정보를 기초로 사례에 대한 조치(case actions)가 취해지는데, 이 조치는 IEVS 정보를 얻은 후 45일 이내에 완결되어야 함

〈표 4-1〉 캘리포니아 주의 IEVS

IEVS 신청자 시스템 연계		IEVS 수급자 시스템 연계	
필요 정보	데이터 유형/소스	필요 정보	데이터 유형/소스
실업보험, 장애보험, 임금	EDD (Employment Development)	고용주가 EDD에 보고한 임금, 중복급여	Integrated Earnings Clearance/Fraud Detection System(매분기)
사회보장번호 (SSN) 확인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Retirement, Surv-vors and Disability Insurance(RSDI) 수급자 정보	SSA의 Payment Verification System(매월) * SSA의 BENDEX 파일 포함
이주자/이민자 지위확인	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 INS 기록	EED에 보고되지 않은 SSA의 임금 정보. 다른 주, 군대, 연방정부, 자영자의 임금 포함.	Beneficiary Earnings Exchange Record(BEER)(매달)
카운티에서 홈리스에게 제공한 급여 추적	Homeless Assistance Payment Indicator System	사망자의 SSN 사용여부 확인	Deceased Persons Match(6개월 마다) * SSA의 Death Master File 정보로 구성됨.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권의 자산 정보	Franchise Tax Board Asset Match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권의 자산 정보	Franchise Tax Board Asset Match(1년마다)
현저한 과급여 수급자 확인	Overpayment/ Over-insurance Indicator	주외(out-of-state)계정, 이자소득, 배당금, 복권당첨금, 주식, 채권 등 Franchise Tax Board에 보고되지 않은 비근로소득에 대한 정보	Internal Revenue Service(IRS) Asset Match(1년 마다)
30일 이상 형을 산 사람에 대한 정보	Nationwide Prisoner Match	30일 이상 형을 산 사람에 대한 정보 로컬의 교도수운영자 로부터의 수감자 정보 현상범 정보 수감자 정보	Nationwide Prisoner Match(매월) Jail Reporting Systems(매월) Feeling Felon Match(매월) California Youth Authority Match(매월)

자료 : <http://www.cfpa.net/legislation/2003legdocs/IEVSsummary.pdf> 발췌·수정.

- 캘리포니아 주와 아이다호 주의 IEVS에서 보듯이 사회보장의 모니터링에는 고용에 관한 정보(DOE, EDD), 보험 급여에 관한 정보(UIB, DI), 수감자 및 범죄에 관한 정보(Nationwide Prisoner), 자영업자 및 비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한 정보(EDD, BEER, IRS 정보), 사회보장번호(SSN)에 관한 정보, 이민자 지위 정보(INS) 등 다양한 정보가 결합되고 있음
- 두 주에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이터와 데이터 소스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
-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니터링을 위해 검토하는 정보가 유사하다는 점이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연방과 주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나아가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가 IEVS를 통해 결합되고 모니터링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임

〈표 4-2〉 아이다호의 IVES

필요한 정보	데이터 유형/소스
임금	Department of Employment(DOE)의 임금파일 데이터
실업보험 급여(UIB)	아이다호와 다른 주의 UIB 데이터
자영업자 소득	자영업자에대한 BEER의 데이터
RSDI 급여	SSA의 퇴직자 소득 데이터 : Benefit Data Exchange(BENDEX) 이용해 접근.
SSI 급여	SSA의 급여와 자격관련 데이터 사용 : State Data Exchange(SDX)를 이용하여 접근
이자소득	IRS의 비근로소득 데이터
SSN 확인	SSA : NUMIDENT 혹은 SSA-verified Federal 혹은 Federally-assisted benefit program을 이용해 확인
주의 공공부조	주가 실행하는 Medicaid와 SSI의 보완 프로그램(예:AABD)
이민자/이주자 지위	INS 기록

자료: http://www.idahohealth.org/Manuals/Med_Fam_Child_Handbook/Appendix_C.htm

- IEVS가 SSI나 TANF 행정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함
 - 특히 모니터링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할 때, 모니터링 실무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매력적임
- 하지만 IEVS 역시 몇 가지 점에서 한계점을 노출 시키고 있음
 - 첫째, 연방 데이터 베이스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고(*inaccurate*), 중복되는(*duplicative*) 것이 있으며, 시간적으로 오래된 데이터가 많고(*untimely*),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inaccessible*)가 있음
 - 둘째, 연방의 요구가 중요한 점들에서 너무 규범적이고(*prescriptive*), 불명확 하며(*unclear*), 일관성이 없는(*inconsistent*) 문제가 있음
 - 셋째, 많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IEVS에 대한 행정 수행 능력이 낮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주로 부족한 직원과 부적절한 컴퓨터 장비들로 인해 생기는 문제임(Kusserow, 1999).
- 이처럼 미국 IEVS도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장비 문제, 자료의 질과 관련된 문제, 원자료 생산 과정의 부적절한 문제 등 많은 해결과제를 안고 있음
- 물론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점차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나 국세청 자료의 활용에 있어서 원자료의 시차 문제로 인한 적시성의 한계, 과세 목적으로 축적된 자료의 개념 및 특성으로 인한 한계점 등 다양한 제약조건 속에서, 수급자의 소득변동에 대한 적시적절한 성실한 보고의무 부여와 이를 위한 지원시스템 제공, 그리고 국세 자료의 활용을 통한 사후관리의 강화 등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통해 미국에 비해 월등하게 우수한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정착 및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2. 국세청 자료 활용방안 검토사례

: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 논의

□ 선정기준과 절차는 상원의회에서 통과된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하원의회에서 통과된 Affordable Health Care for America Act와 관련된 많은 요소들을 포함함

— 그러나 두 법안 어느 쪽도 Medicaid의 간결한 등록절차 확대가 수급자가 보조금을 받는 것을 도울 수 없음

— 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Medicaid 적용범위의 41% 확대를 예측하였는데, Medicaid의 목표달성의 실패는 개혁의 총체적인 효과를 약화시켰음. 또한 각 법률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합적 보조금 시스템으로는, 수급자는 균열사이로 쉽게 빠지거나, 적용을 받는 것에서 실패하게 됨.

—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정책을 통해 비수급자의 보조금 자격을 극대화 하는 것을 제안함.

- The streamling provisions contained in Section 1413 of the Senate bill: 단일의 신청서와, 개혁하의 모든 보조금 (Medicaid, CHIP, Subsidies in the exchange)을 위한 자격 제도를 요구함. 그리고 이 들은 가능한 한 정부 자료의 기본적인 자격을 위한 한발 나아간 조치를 취하며, 따라서 수급을 받거나 적용범위를 유지하기 전에 수급자가 양식을 완성하는 것의 필요를 줄일 수 있음
- The corrections to that section contained in Senate Amendment 3167: Medicaid의 자격요건 및 등록을 위한 동일한 간결한 절차를 적용하며, 등록은 교환을 위해 계획됨
- A compromise between annual eligibility periods in the Senate bill and "real time" eligibility updates in the House bill: 이 법안은 필수적인 연중 조정을 위한 예외를 만

드는 반면, 일반적 규정으로서 연간 보조 자격을 확립함

□ Section 1413 of the Senate bill

○ Section 1413은 등록과 유지의 증가를 위한 많은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음

— Massachusetts에서는 일반적인 등록시스템이 모든 보조금 프로그램에 적용됨

— 단일의 양식이 모든 프로그램에 이용됨

- 어떠한 방식으로 양식이 작성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보조금을 위한 자격요건은 추가적인 서류작성 완료에 대한 요구 없이 자동적으로 결정됨. 관련 정부기관이 현장의 뒤에서 자격결정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협조함
- 수급자는 지원서를 다 채우지 않아도 보조금을 추구할 수 있음. 각 지원자들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세금정보를 포함한 정부의 정보에 기반한 자격요건을 결정에 대한 요구의 선택사항을 가짐
- 자격요건은 자료에 의해 확립되고 개정됨

— 하원법안은 비슷한 정책을 반영하지 않음. 이 법안에 따라

- 보조의 각 시스템은 -Medicaid 프로그램, subsidy in the exchange- 고유의 지원양식을 가짐. 지원서가 채워지느냐에 관계없이, 요구사항이 없으며, 수급자는 모든 관계된 보조금을 위한 자격요건의 결정을 받을 수 있음. 그 결과, 몇몇의 비보험자들은 다양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강제될 수 있음
- 지원양식을 완성하는 대신에 수급자가 공공 기록의 자료에 기반한 보조금 자격요건을 결정하는 요구를 통한 어떠한 절차도 확립될 수 없음. 그 결과, 몇몇의 수급자는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여분의 양식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음. 그리고 양식의 요구는 프로그램 참여를 줄일 수 있음
- 자격요건 결정, 등록, 유지를 위한 시스템은 수급자들의 부담의 최소화나 자격요건 확립을 위한 데이터 이용을 요구하지 않음

○ 반면, House proposal 정책은 등록을 촉진시킴

- 만일(a) 수급자가 이러한 적용범위서 벗어나지 않거나, (b) 그들이 보조를 위한 자격에는 적합하나 계획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계획이 그 참여에 의해 끝날 때 자격상실인 경우 하원법안은 자동적으로 수급자를 exchange의 보조되는 범위내로 수급자를 둘 것임
- 법률은 보조를 위한 자격이 지원양식 외의 정보에 의해 간주된다는 것을 통해 절차를 확정할 것임. 만일 이러한 메커니즘이 Medicaid, CHIP를 포함하기 위해 확장된다면, 이는 정보에 기반한 모든 보조금을 위한 자격의 요구라는 상원법안의 요구를 유용하게 보완할 수 있을 것임

제3절 영국

1. 영국의 복지개혁 동향

□ 영국은 복지시스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나라로써, 지난 노동당 정부는 근로연계복지 정책의 강화를 통해 근로의욕을 촉진하고 복지 의존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음

- 영국은 1970년대 중반 경기 침체 및 사회보장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복지시스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보수당이 집권한 ‘70년대 말부터 ‘90년 중반까지는 근로의욕 유지 및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근로연계 복지체제를 구축을 추진하였고 ‘97년부터 약 13년 동안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보수당 정부의 복지개혁 정책기조를 수용하여 더욱 근로 중심적인 사회시스템을 지향하는 “활성화”정책을 추진함
- 영국 정부는 ‘일 하는 복지’를 추진하면서 사회보장정책과 고

- 용서비스를 연계한 복지제도의 개혁을 단행함. 이를 통해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가능성을 1차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함
- ‘일 하는 복지’를 추진하는 정부의 노력은 노동당에서 보수당으로 정권교체가 된 이후 더욱 가속화 되고 있음
 - 하지만, 새롭게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지금까지의 복지 시스템 개혁이 개인의 책임성과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저해시키는 기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근로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스템을 더욱 간소화시키는 복지개혁에 착수하였음
 - 이러한 복지개혁들과 함께 현재의 수급조건(conditionality)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거나 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의 경우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이행할 것이 더 강하게 요구되어지며,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급여 감소와 같은 제약을 받게 하는 것임
 - 제도의 복잡성으로 초래되는 부정수급 및 오류수급에 대응하기 위해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단일화 시켜 감시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2. 부정수급 방지 등 사후관리 개요

- 1990년대 중반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급여의 부정수급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 영국정부는 1997년부터 “급여 부정수급 축소를 위한 종합전략”(Comprehensive strategy for reducing benefit fraud)을 착수함
 - 여기에는 소득보조와 구직자수당의 부정수급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도 포함되어 있음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감시전문가들을 교육훈련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부정수급 감시전문가들을 배치하여 전문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 고용연금부(DWP)에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과 부정확한 지급을 방지하는 전략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Fraud and Error Strategy Division을 설치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및 부정확한 사회보장급여의 감소를 위한 전략을 담당
- 2001년에는 'Social Security Fraud Act 2001'을 제정하여 부정수급 감시 전문가들에게 법적인 단속권한을 부여함
 -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분정수급 단속 공무원에게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을 정부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부정수급단속자의 권한을 강화시킴
 - 또한 2001년부터 공식적으로 부정수급의 규모를 추정하여 발표함
- 2002년에는 Proceeds of Crime Act 2002의 제정을 통해 정도가 심한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몰 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정수급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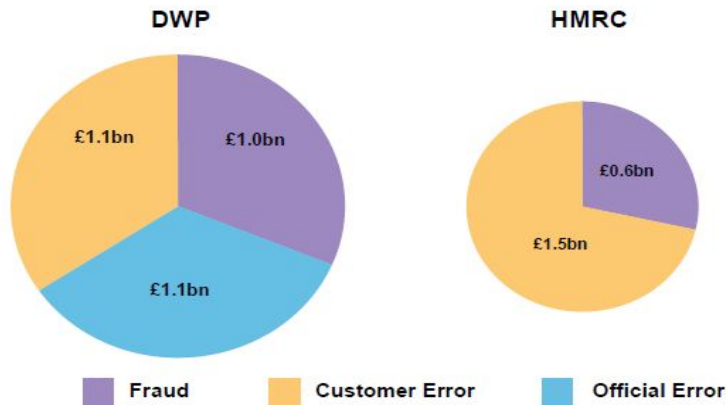
3. 부정수급 및 급여오류 현황 및 문제점

□ 영국의 DWP(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와 HMRC(HM Revenue & Customs)는 각종 급여와 세액공제(Tax credits) 그리고 아동수당(Child Benefit) 등에 연간 약 1,900억 파운드를 지출하고 있음. 최근 파악된 것에 의하면, 총 지출의 3%에 해당하는 52억 파운드가 부정수급과 오류로 인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

- 52억 파운드는 DWP 총지출의 2.1%에 해당하는 31억 파운드, HMRC 지출의 8.9%에 해당하는 21억 파운드로 구성됨⁴⁾.

4) HARC는 2008/09년 DWP는 2009/10년 현황

[그림 4-1] DWP와 HMRC의 과다지급 규모



자료 : DWP(2010), Tackling the benefit and tax credits systems, pp.12, Figure 1

□ 문제점

- 유사하고 중복적인 급여들이 여러 기관에서 제공되는 관계로 급여 청구 과정 역시 복잡하고 혼란스러움
 - － 서비스 이용에 대한 청구자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중앙 및 지방정부 기관에 여러 번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 현재 시스템에서 실수 및 오류, 과다급여(overpayments) 그리고 부정행위(fraud)는 다음의 주요 세 가지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게 됨
 - － 급여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여러 기관들에 의해 취급되어 짐. 이것은 청구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급여 청구 시 자신들의 상황과 여건에 대해 다르게 신고할 수도 있음
 - 급여는 자산조사를 거친게 됨. 이것은 사람들이 신고하는 그들의 소득, 저축, 그리고 다른 곳에서 벌어들이는 기타 소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급자의 실수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증가를 의미함. 즉 과다 지급된 급여와 거짓신고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 수급관련 담당자는 급여 대상자가 어이데 사는지,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 그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를 통해 알아야 함
- DWP의 부정수급 조사서비스와 지방정부는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을 각각 조사하며, HMRC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과제자료에 집중함. 각 조직들은 서로 다른 관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재제조치도 서로 다르게 집행하고 있음

〈표 4-3〉 주요급여별 부정 및 오류수급의 규모

(단위 : 백만 파운드)

	연도	부정수급	신청자 오류	공급자 오류	전체
Jobseeker's Allowance	2005/06	30 (1.4%)	10 (0.5%)	40 (1.9%)	90 (3.9%)
	2006/07	60 (2.6%)	10 (0.4%)	50 (2.0%)	120 (5.0%)
	2007/08	60 (2.8%)	10 (0.2%)	30 (1.2%)	90 (4.2%)
	2008/09	80 (2.8%)	10 (0.2%)	70 (2.4%)	160 (5.4%)
	2009/10	170 (3.6%)	20 (0.4%)	80 (1.8%)	270 (5.8%)
Income Support Lone Parents	2005/06	110 (2.7%)	50 (1.2%)	40 (0.9%)	190 (4.8%)
	2006/07	110 (3.0%)	50 (1.4%)	40 (1.2%)	200 (5.6%)
	2007/08	110 (3.2%)	30 (1.0%)	20 (0.7%)	160 (4.9%)
	2008/09	150 (4.7%)	30 (1.0%)	30 (1.0%)	210 (6.7%)
	2009/10	100 (3.4%)	40 (1.4%)	30 (1.2%)	170 (6.0%)
Income Support Disabled/Others	2005/06	100 (1.8%)	90 (1.7%)	100 (1.8%)	290 (5.3%)
	2006/07	130 (2.3%)	60 (1.0%)	80 (1.5%)	270 (4.9%)
	2007/08	110 (2.0%)	80 (1.4%)	100 (1.7%)	290 (5.1%)
	2008/09	100 (1.8%)	80 (1.3%)	90 (1.7%)	270 (4.8%)
	2009/10	110 (1.9%)	90 (1.6%)	90 (1.5%)	290 (5.1%)
Income Support	2005/06	200 (2.2%)	140 (1.5%)	140 (1.4%)	480 (5.1%)
	2006/07	240 (2.6%)	110 (1.2%)	130 (1.4%)	470 (5.2%)
	2007/08	220 (2.5%)	110 (1.2%)	120 (1.3%)	450 (5.0%)
	2008/09	250 (2.9%)	110 (1.2%)	130 (1.4%)	480 (5.5%)
	2009/10	210 (2.4%)	130 (1.5%)	120 (1.4%)	460 (5.4%)
Pension Credit	2005/06	50 (0.8%)	100 (1.5%)	160 (2.4%)	310 (4.7%)
	2006/07	130 (1.9%)	90 (1.3%)	150 (2.1%)	370 (5.3%)
	2007/08	80 (1.1%)	110 (1.4%)	200 (2.6%)	380 (5.1%)
	2008/09	110 (1.5%)	120 (1.5%)	160 (2.1%)	390 (5.1%)
	2009/10	150 (1.9%)	140 (1.7%)	190 (2.3%)	480 (5.9%)

자료 : DWP(2011), Fraud and Error in the Benefit system : April 2009 to march 2010

4. 최근 개혁방향 및 주요내용

□ 영국정부는 지방자치단체, HMRC, DWP의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된 부정수급 조사서비스 개선을 제안함

○ 이 서비스는 2013년 4월부터 작동하며 기존 급여와 세액공제 위반 사항 뿐만 아니라 Universal Credit의 부정수급을 조사하게 됨. 이로 인해 모든 위반관련 사항들이 고려되며 조사와 제재관련 횡수가 증가하게 되고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임

– 이것은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로 조직상의 변화와 새로운 IT 인프라, 그리고 작업량의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자원 등을 초래하게 될 것임

– 부정수급 감시원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규정은 대략 200명 정도 까지 증가시키는 선에서 합의되었음. 제재의 레짐과 전략에 대한 기타 변화를 독립적으로 고려하여 제재규모가 14% 증가한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변화를 포함하는 경우 21%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제안된 내용은 부정수급 관리 조직들을 하나로 모아 Universal Credit를 전달하는 단일 조직에 설치하는 하는 것임

–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분리된 조직들에서 제재와 기소를 관리 하는 것을 지속하게 하는 것임. 이것은 하나의 조직을 통해 급여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Universal Credit의 도입으로 인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수급조건(conditionality) 강화

○ 복지개혁은 Universal Credit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IFS(Institute for Fiscal Studies) 등 연구 및 외부 기관에서 제안된 대다수의 개혁안에 지적하고 있는 수급조건(conditionality) 역할의 제고 필요

○ 일자리를 구할 수 있거나 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의 경우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이행할 것이 요구되어지며,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급여 감소와 같은 제약을 받게 됨

- 이것을 급여지원의 ‘conditionality’라 함. ‘conditionality’가 부과되는 경우 실업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며, 급여 청구자들은 그들이 받는 지원에 대신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것이고 시스템에 대한 개혁 또한 ‘conditionality’를 명확하게 부여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 방향으로 추진될 것임

○ Universal Credit은 현재 존재하는 급여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급여로 만드는 것이므로 ‘conditionality’의 수준은 받고 있는 급여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급여를 받는 원인에 의해 결정되어 져야 할 것임

- ‘conditionality’ 적용은 각 사람이 처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임. 만약 어떤 사람이 충분하게 일을 하고 자활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면 근로 연계조건(work-related conditions)을 중지시킬 수도 있지만, 근로에 막 진입한 사람들의 경우 급여에 대한 근로연계조건(work-related conditions)을 적용 시키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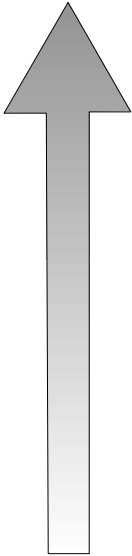
-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을 받는 주당 17시간 일하는 미혼인 사람의 경우 현재 시스템에서는 급여수급에 대한 ‘conditionality’가 적용되지 않음. 향후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대상자들이 그들의 근로시간을 확대하거나 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전일제 근로를 할 때 까지 또는 해당 급여가 중지될 때 까지 ‘conditionality’ 적용을 계속해야 할 것임

- 구직자들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청구자들의 ‘conditionality’는 전일제 근로에 맞추어져 있어서 DWP는 향후 구직자의 특성, 즉 근로능력 정도나 여건에 의해 상대적으로 단시간의 일자리가 요구되는 사람들의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매칭하기 위한 ‘conditionality’를 적용시키고자 하고 있음

- 개인의 여건 변화, 예를 들어 건강의 개선과 같은 변화에 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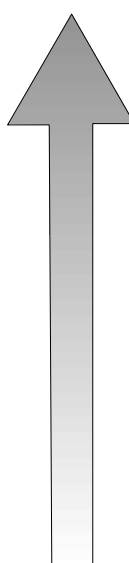
것까지 확대·적용 되어져야 할 것임. 급여 대상자 중 의무를 충족시키는데 못한 사람들의 경우 그들 각각의 개인화된 의무를 이행할 때 까지 그들의 급여를 축소시킬 것이지만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직업 탐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그림 4-2] 현재 주요 실직급여(out-of-work benefits)에서의 수급조건 수준

수준	수급조건	급여청구 대상
	Active job search 급여 수급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취업할 수 있는 여건(Availability for work)이 요구됨	아동이 없는 경우 부부(커플)가 공동으로 청구해야 하는 것을 포함한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 청구자
	keeping in touch 취업중심인터뷰(Work Focused Interviews)의 참석이 요구됨	소득보조(income support)를 청구한 가장 어린 아동이 7살 이하인 한부모, Work Related Activity Group에 해당하는 고용지원수당(ESA) 수령자, 아동이 있는 급여수령자의 배우자
	No conditionality 조건 없음	지원집단(support group)과 보호자(carer)에 해당하는 고용지원수당(ESA) 수령자

자료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Universal Credit: welfare that works」, pp. 25, 2010.11

[그림 4-3] 향후 주요 실직급여(out-of-work benefits)에서의 수급자격 요건 수준

수준	수급조건	급여청구 대상
	Active job search 급여 수급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취업할 수 있는 여건(Availability for work)이 요구됨	아동이 없는 경우 부부(커플)가 공동으로 청구해야 하는 것을 포함한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 청구자
	Work preparation 취업준비를 위한 적정단계를 밟아야 함	5살 이하의 아동을 둔 한부모를 제외한, Work Related Activity Group에 해당하는 고용지원수당(ESA) 수령자
	keeping in touch 취업중심인터뷰(Work Focused Interviews)의 참석이 요구됨	소득보조(income support) 또는 고용지원수당(ESA)를 청구한 1~5세 아동을 둔 한부모 및 급여수령자의 배우자
	No conditionality 조건 없음	지원집단(support group)과 보호자(carer)에 해당하는 고용지원수당(ESA) 수령자, 소득보조(income support) 또는 고용지원수당(ESA)를 청구한 1세 미만아를 둔 한부모

자료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Universal Credit: welfare that works」, pp. 27, 2010.11

□ 전달체계 관련

- 현재, 유사하고 중복적인 급여들이 여러 기관에서 제공되는 관계로 급여 청구 과정 역시 복잡하고 혼란스러움
 - － 서비스 이용에 대한 청구자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중앙 및 지방정부 기관에 여러 번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DWP는 새로운 급여 시스템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며, 청구자들의 소득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별도의 신청서 작성이나 기다림 없이 해당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새로운 전달체계는 관료주의적인 복잡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효율성을 증가시켜 청구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시키면서 행정비용역시 감소시켜야 할 것임. 전달체계 개혁을 통해 청구자들은 더 이상 초과적인 행정서류의 작성 없이 모든 주요한 자격들에 대해 하나의 신청서만 작성할 수 있을 것임
- 전달체계 개혁을 위해서는 주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근로연금부와 국세관세청(HM Revenue & Customs) 그리고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도 매우 중요함
- 향후 급여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 더욱 통합적인 시스템을 전달하기 위해 두 개 영역에 대한 전산 시스템의 구성이 필요함
 - 하나는 ‘청구자들과 접촉했을 때의 기록’, ‘급여 또는 급여 변화에 대한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의 기록’, ‘얼마나 많은 급여를 개인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지를 산출’하는 시스템이고
 - 다른 하나는 근로를 통해 얻은 임금과 같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개인 또는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취합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임. 여기서 수집된 정보들을 급여의 점감률(withdrawal rates)에 대한 적용과 정확한 급여 지불에 활용될 것임
 - 이러한 지불 시스템은 근로연금부 관련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미 사용된 BACS(Banks automated clearing system, 금융거래에 전산화 계획) 기반으로 구성되어질 수 있을 것임
 - 국세청(HM Revenue & Customs)은 자신의 컴퓨터 시스템을 변

화를 관찰하고 있음. 국세청의 새로운 시스템은 고용주가 국세청에 보고하는 고용인들에 대한 급여 등과 정보를 축적하고 있음

- 이러한 시스템은 또한 급여지급 심사에 사용될 수 있는 실시간 소득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임. 실시간 소득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고객이 해당 부처 및 기관에 소득의 변화를 공지할 필요를 제거해 주고 근로 진입 및 실업에 대한 이동과 소득 변동에 대해 더욱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할 것임
- 이것은 최빈곤층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과다급여(overpayments) 및 이에 대한 연속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들 것임

□ 실수 및 과다급여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관련

○ 현재 시스템에서 실수 및 오류, 과다급여(overpayments) 그리고 부정행위(fraud)는 다음의 주요 세 가지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게 됨

- 급여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여러 기관들에 의해 취급되어 짐. 이것은 청구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급여 청구 시 자신들의 상황과 여건에 대해 다르게 신고할 수도 있음
- 급여는 자산조사를 거치게 됨. 이것은 사람들이 신고하는 그들의 소득, 저축, 그리고 다른 곳에서 벌어들이는 기타 소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것은 공급자의 실수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증가를 의미함. 즉 과다 지급된 급여와 거짓신고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또한 비-재정적인 환경들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급여지급을 위해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 그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를 통해 알아야 함

- 더욱 간단한 급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사람들이 급여 청구 할 하나의 급여시스템을 가진다면, 사람들은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다르게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이것은 실수와 과다지급 그리고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게 함
- 실시간 소득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제대로 신고 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신고 된 소득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실수 및 오류 그리고 부정행위의 수준과 과다지급의 높은 수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것임
- 하나의 통로는 또한 비재정적인 고객들의 환경과 연관된 어려움과 부정행위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줄 것임
- 데이터의 지능적인 이용을 통하여, 적절하지 않은 또는 부정행위적인 청구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임. 따라서 새로운 전달체계 시스템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이용하기 쉽도록 더욱 간결해야 할 것이며, 다른 부처가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되어진 동일한 세부사항에 대한 요구는 사라져 급여시스템을 더욱 빠르게 만들 수 있어야 함
-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빨리 그리고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러한 것들이 전제 된다면 개혁으로 인해 감소된 시스템의 복잡성과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실수와 오류, 과다지급과 부정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5.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국세청과 복지부의 연계 개편

□ 문제의 규모

- 정부는 최근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DWP), HM Revenue and Coustoms(HMRC)의 관리하에서 약 1900억 파운드 가량의 세금공제, 아동수당, 급여들을 지급함. 가장 최근 복지

시스템 내에서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연간 손실은 52억 파운드이며 전체 지출의 약 3% 정도임. 31억 파운드는 DWP의 관리하에 있는 급여에서 발생, 21억 파운드는 HMRC 관리하의 급여에서 발생함

- 최근 두 부서 모두에서 부정수급 감소의 진전이 있었으나, 정부는 시스템 내에서 위법적 지불의 수준을 허용하지 않으려함
- 부정수급 방지와 함께, 정부는 이미 세금의 공정한 분배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발표함. 9억 파운드를 새로운 정책을 위한 패키지의 기금마련을 위해 향후 4년 동안 유효하게 할 것이며, 추가적 세수를 통해 2014/15년 까지 연간 70억 파운드로 끌어올릴 계획임. 이러한 조치는 세제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신호가 될 것임

□ 원인의 이해

- 부정수급의 주요한 원인은 다음과 같음
 - 복잡성: 이는 고객과 직원들 모두에게 혼란을 가져오며, 상황에 따른 보고의무 변화의 혼란 때문에 부정을 행할 수 있도록 야기할 수 있음
 - 자산조사: 자산조사 시스템에는 고객이 주는 정보로의 확정이 옳다라는 본래의 어려움이 있음. 두 부서 모두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메커니즘을 발전시키고 있으나, 아직 미흡
 - 현재의 제재 체계의 약점을 인식: 현재의 제재 체계는 잠재적 부정에 대한 강력한 저지를 나타내지 못함. 이는 평상시 너무 늦은 운영 및 체벌이 곧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야기시키는 조사, 고발, 채무회수를 위한 시스템에 의해 복합적이 됨
 - 사회적 규범: 부정수급자의 행동, 가령 복지의 부정수급은 도덕적으로 허용될만 하며, 모든 사람이 이를 행한다는 믿음과 같은 시스템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회적 혹은 개인적 규범에 의해 움직임

- 내부적 제도적 절차: 오류의 중대한 부분은 IT, 훈련 분야의 스태프 부족, 정확한 절차를 위한 초점을 맞춘 적절한 유인책의 부족에 의해 발생됨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재의 조치들

- DWP는 1998년 첫 번째 부정수급 전략을 발표했으며, 이어서 2005년에 업데이트함. 2007년 발표된 오류감소(error reduction) 전략에 의해 시행됨. HMRC의 사기 및 오류(fraud and error)를 동시에 포함하는 첫 번째 전략은 세액공제의 소개 후 3년만인 2006년 발표되었음. 세액공제의 5%로 사기 및 오류 수준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을 반영하여 2008년 업데이트됨
- HMRC의 사기 및 오류에 대한 접근은 지난 18개월 동안 큰 변화가 있었음. 우선, '우선 지급 후 점검(Pay Now And then Check Later)'이 과도한 손실을 이끄는 원인중 하나임. 그때부터, 민간 부문의 접근은 채택되었으며, 이는 고객이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는 것의 세분화 분석을 포함함. 이와 더불어, 부서는 불균형의 손실집단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데이터 분석을 발전시킴
- 이러한 핵심적 분석으로부터, '선 점검, 후 지급(Check First, Then Pay)'의 원칙을 뿌리내릴 수 있었음. 또한 공공부문과 제삼부문의 데이터간 매칭에 영향을 주었음
- 이러한 접근은 광범위 하며, 복잡한 위험 기반 방법의 이용, 고객요구의 비밀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 매칭과 마이닝을 포함함. HMRC 또한 일대다 형식의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시범 운영하였으며, 오류발생을 막기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지속함. 이 결과 작년에는 HMRC의 조정 범위를 123,000에서 백만으로, 수익을 2억5천3백만 파운드에서 7억7천만 파운드로 증가시킴
- DWP는 다양한 조정에 초점을 맞춤. 이는 위험 프로파일링에 기반을 둔 데이터 매칭 시스템의 발전을 포함함

- 이의 내용으로는 실제 혹은 잠재적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광고, 부정수급 조사권한의 증진, 부정수급지들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와 기소, 스태프의 정확성 증진을 위한 제도의 점검, 대중에게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고의 채널을 제공하는 National Benefit Fraud Hotline의 지속적인 운영이 있음

□ 새롭고 근본적인 접근

- 새로운 프로그램은 이전의 전략보다 근본적인 접근임. 최근에 상당한 자원이 이 안전에 투자되었나, 진전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님
- 더욱 근본적인 접근은 부분적으로 가능한데 이는 DWP의 Command Paper 21st Century Welfare에서 개략적으로 만들어진 복지개혁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제안과의 상호작용 때문임
- 이러한 개혁은 복지시스템의 근본적 단순화를 통해 중대한 사기 및 오류의 축소를 이끌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고객의 상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임. 새로운 전략은 예방, 감지, 교정, 처벌, 제재(prevent, detect, correct, punish, deter)라는 5가지 핵심 단어에 기반함

□ 예방(Prevent)

- 새로운 전략은 복지시스템 내로 사기 및 오류의 침투를 막는 것을 확고히 하는 것에 가장 우선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음. 더욱 광범위한 고객 정보의 획득, 민간과 공공부문의 가장 좋은 생산을 가능토록 하는 것들을 통해 데이터 매칭 능력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서 이를 가능케 할 것임
- 최점단의 예방기술의 채택을 확고히 하고, 적절히 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기업을 고용할 것임. 맨 처음으로, DWP는 고객이 요구를 하는 시점에 거의 실시간으로 데이터 매칭을 가능케 할 것임. HMRC는 ‘선 점검, 후 지급’을 위해 요구의 시점으로부터 오류가 없게 진전시킬 것임.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실시간 정보 시스

템에 의해 지원될 것임.

- 데이터 매칭 능력은 새로운 통합된 위험과 정보 유닛에 의해 지원될 것임. 이는 사기, 오류와 부채에 관한 데이터와 지식의 핵심이 될 것임. 또한 가장 좋은 데이터 매칭 기술을 이용할 것임.
- DWP는 HMRC의 'Get it Right First Time' 제도와 비슷한 접근을 채택할 것이며, 이는 고객의 책임강화를 통해 부정확한 지급을 방지할 것임. 특히, 고객은 그들의 상황이 정확하다는 선행적인 확인을 요구받을 것임.
- 마지막으로, 향후 스태프의 지원을 통해 사무적인 오류의 수준을 낮추게 될 것임. DWP는 스태프가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IT fixes를 도입할 것임. 뿐만 아니라, 절차 정확성의 특정한 기준을 얻기 위한 인가시스템을 운영할 것임. 이러한 조치는 훈련이 많이 요구되는 스태프를 식별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표적화된 지원을 가능토록 할 것임.

□ 감지(Detect)

- 복지 시스템 내로 들어가는 사기 및 오류를 방지할 수 없을 때, 가능한 빨리 이를 식별하고 멈출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이러한 감지는 DWP, HMRC, 지방정부의 전체를 통틀어 단일화되고 통합된 사기 조사 서비스를 통해 가능한. 이러한 조치의 한 부분으로, 자원을 집중하고, 조직화, 세액 공제 및 장애관련 사기에 전문화된 집단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함.
- 이 새로운 서비스를 가능케 하기 위해 DWP는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함. 이것을 통해 35% 이상의 부정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제재의 규모 증가가 발생할 것임
- 단일화된 서비스 도입을 이끌기 위해, 각 지방정부와 관련된 사기 및 오류 데이터를 공시하는 것을 통해 지방 정부의 유인책을 증가하려 함
- 이와 함께, DWP는 새로운 조정으로 부정수급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행동 경제학으로 부터의 개념을 이용할 것임. 이동 가능한 지역적 전담팀(mobile regional taskforce)를 만들어 특정한 지역을 목표로 하여 현재의 부정수급 및 잠재적 부정수급에 관한 요구까지 모든 요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시행할 것임

- 이 전담팀의 업무는 지역 미디어 캠페인에 의해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며, 이는 부정수급자들의 적발의 두려움을 증가시킬 것임. 이러한 역할을 함에 있어, HMRC와 지방 정부도 포함 될 것임
- DWP와 HMRC는 범죄에 관한 익명의 정보를 통해 응대하는 독립적 단체인 범죄방지관(Crimestopper)와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것임. 이들은 사기에 대한 주요한 국가적 캠페인의 착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며, 정부는 이들의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임
- DWP는 가치있는 전화에 대한 보상, 관련 정부 제공자에 대한 책임 추구등의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이미 성공적인 사기 관련 상담전화로의 전화를 장려할 것임. 이와 더불어, HRMC와의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임
- 이러한 전략과 더불어, 정부는 부처간 신원사기유닛(Identity Fraud Unit)을 만들어, 증가하고 있는 신원사기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 전문집단을 양성할 것임
-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공공서비스 범위 전체적으로 사기를 막고, 정보를 제공하며 적절한 분석을 가능토록 할 것임

□ 교정(Correct)

- 훈련된 스태프를 통해 현재의 요구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불법적 지급에 대한 예를 찾기 위해 광범위한 사례의 다양한 급여의 교정에 착수할 수 있음. DWP는 시스템 내에서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초점을 맞춘 Error Reduction Centre를 설립할 것임. 이는 정부기관의 행정적 오류 제거 선행의 인식을 갖춘 1,200명의 스태프들로 구성될 것이며, 연간 약 100만건의 오류를 제거할 것임

- DWP와 HMRC 모두 효과적이고 빠르게 채무를 복구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임. 이들은 사기의 채무가 급여로부터 공제 되는 것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최대율을 약 25%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음
- DWP는 또한 Direct Earnings Attachment로 잘 알려진 것 처럼 노동소득으로부터 공제를 요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채무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함. 이와 더불어, DWP는 향후 데이터 매칭을 통해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산의 변제를 가능케 할 것임. 이는 그들의 채무자의 집을 파는 것의 강제도 포함함
- 민간의 채무회수 기업으로부터 미래의 운영에 있어 더욱 근본적인 향상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를 모을 것임. HMRC의 경우 채무 회수를 더욱더 민간 부문인 Debt Collective Agency로 이전하는 계획을 진행중임. 이는 채무회수 능력 증진과 낮은 가치의 부채 추적을 도울 것임. 두 부서 모두 장기적으로는 정부부처간 채무회수 기관을 통해 빠르게 채무를 회수하는 것을 고려할 것임. 중기적으로 이는 PAYE시스템과 부처간 급여 회복을 통한 성공적인 부채 회수의 시범사업을 하려함

□ 처벌(Punish)

- DWP는 복지 부정수급자들을 다루기 위한 더욱 넓은 범위의 강력한 권한을 도입할 것임. 그들의 요구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한 개인에 대해 HMRC와 더불어 처벌로서 즉각적으로 50파운드의 민사상 벌금을 적용할 것이며, 차후 이러한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제지할 것임
- 범죄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부정수급자는 최소의 패널티 없이 벗어날 수 없음. 또한 이러한 부정수급자는 4주 동안의 급여 상실의 대상이 될 것임
- DWP는 또한 평결위원회를 초빙하여 법정에서 행정 장관, 판사 등이 더 강력한 처벌 부여에 대한 견해와 관련된 지침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DWP, HMRC는 급여 공제를 부과하기 위한 ‘One strike’, ‘Two strike’제도를 도입할 것임. 첫 번째 유죄판결후 3개월, 두 번째 판결후 6개월동안의 급여 상실을 부과할 것임. DWP는 3회 적발시 그들의 급여를 최소 3년이상 박탈하는 ‘Three strike’를 도입할 것임
- DWP는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기 미수에 대한 처벌확립을 통해 HMRC가 이미 도입한 더욱 혁신적인 제재로의 접근 또한 구축할 것임
- HRMC는 세금 공제를 위한 제재 체계와의 제휴 및 향상을 목표로 함. 이는 비 재무적인 처벌의 더 나은 이용과 범죄 조사 및 기소를 증가시키기 위한 DWP와의 업무를 포함함

□ 억제(Deter)

- 고객과 잠재 고객이 강력한 규정을 인지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상당한 억제 효과를 가질 것임. DWP와 HMRC는 그러므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수준의 통합된 표적화된 의사소통방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도를 공표할 것임. 이의 일환으로 우리가 부정수급이 만연해있다는 전망을 포함해 급여 사기를 둘러싼 현재의 사회 규범의 붕괴를 목표로 함

□ 전달체계(Delivery)

- 정부는 사기 및 오류에 대한 낭비 지출에 대한 노력을 반영하여, 향후 4년 동안 위의 활동에 4억2천5백만 파운드를 투자할 것임. 이 투자의 결과로, 매년 1/4, 또는 14억 파운드의 부정수급에 대한 초과지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성공적으로 정확하게 고객의 수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정보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음. DWP 연간 1억 파운드, HMRC에 3억 파운드의 절감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 이러한 절감과 더불어, 이러한 전략은 고객과 이익 시스템의 보안

및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의 강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이러한 전략과 더불어, 두 부서에서는 내부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임. 이는 부정수급의 원인 분석의 강화, 측정 시스템이 표준에 부합하는 것의 확고히 함. 예방으로의 초점에 대한 조정강화를 위한 메커니즘, 투자에 대한 수익의 효율적인 조치와 일관성의 발전을 포함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전후
국세청 자료에 대한 인식 및 활용실태

제5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전후 국세청 자료에 대한 인식 및 활용실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표되는 선별적 유형의 복지정책 운영에 있어 급여체계와 자산조사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기본원리 가운데 자산조사 및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보충급여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음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는 급여체계 구조의 핵심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보충급여 방식이며, 이는 자산조사의 원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보충급여 방식은 최저생활 보장에 있어 개별가구의 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겠다는 정신을 담고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이기심과 배치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야기하는 원인임
 - 첫째, 보충급여 방식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일하는 수급자와 일하지 않는 수급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함
 - 둘째, 보충급여 방식은 소득과약을 어렵게 만들어 수급자간 및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급에서 배제된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거나 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되고 사회연대감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셋째, 보충급여 방식은 효율적 자활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보충급여로 인하여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들이 자활사업 참여를 기피하도록 함
- 이와 같은 보충급여의 원리와 자산조사 수행의 적정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표되는 선별적 복지정책 운영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음
- 선별적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조세부담에 의해 마련된 재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급여의 제공이 반드시 가장 필요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적정수준의 급여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임
-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산조사체계의 효율화 및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체계의 구축은 핵심적인 요소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2000년부터 기초노령연금 등 준 보편적 복지정책 도입 및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지난 10년(2000~2009) 동안에는, 자산조사 범위 및 평가기준과 자산조사 업무수행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 없이 일선 지자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이러한 자산조사 업무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원칙적으로 지난 10년 동안에도 자산조사는 전산조회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복지행정시스템 상 소득자료 및 정보연계 수준과 지침에 제시된 애매모호한 소득파악의 범위 및 평가기준 하에서 근본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각종 제도가 요구하는 만큼 완벽한 수준으로 자산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은 누구나 동의하였음
- 그렇지만, 오류나 실수로 인하여 수급자를 잘못 선정하거나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할 경우 민원과 책임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산조사 관련 업무 비중은 지나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이에 따라, 선별적 복지급여 제공이 꼭 필요한 대상자를 판별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지만, 자산조사 수행이 주 업무가 되어버린 상황에 대한 비판과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자산조사가 아니라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전문가라는 점이 강조되었음

□ 이와 같은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복지행정의 정보화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 및 급여이력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이 추진되었으며,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선별적인 유형의 복지정책과 기초노령연금, 보육료지원 등 준 보편적 유형의 복지정책에 대한 자산조사 원칙과 방법이 마련되었음

-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 행정자료 연계 범위 및 종류는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공적자료 우선 적용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수급자의 편의 및 일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자산조사 업무 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연계 및 활용 중인 인적정보,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 가운데 본 연구의 주요대상인 국세청에 의해 생산 및 연계 제공되는 공적자료에 대한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인식 및 활용 수준은 그리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세청 자료는 조세행정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 측면에 있어 소득 파악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인식됨
- 반면에, 국세청의 소득파악 자료는 일차적으로 과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세법 상 소득유형별로 일정한 주기에 따라 구축됨
 - 이에 따라, 복지행정 측면에서 자산조사에 활용하기 위한 소득 개념과 과세를 위한 소득 개념 상의 불일치가 나타나기도 하며, 국세청 자료의 시차 문제는 그 속성에 의한 것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대하는 경향이 존재하나, 원자료 생산 및 구축과 관련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세청 자료의 연계 및 활용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근로활동과 관련된 소득과약 측면에서 2008년 시행된 근로장려세제 도입 이전까지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소득과약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였으나,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을 계기로 지난 5년간 근로자에 대한 소득과약 및 소득자료 구축은 상당히 개선되어 복지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졌음
 - 그러나, 국세청 자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연계되지 못하거나 잘못 연계되고 있는 원자료에 대한 연계범위 및 방식의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임
- 여기서는 제2장에서 살펴본 국세청 자료의 유형별 개념 및 목적, 특성 및 한계점에 기초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의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제시하기에 앞서,
 - 일선 지자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각종 복지정책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실시한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설문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전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세청 자료에 대한 인식 및 자산조사 과정에서 활용 실태를 살펴봄
 - 주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게 되는 소득 항목에 대한 자산조사 과정에서 원자료의 문제점과 신뢰수준에 대한 인식, 구체적인 활용실태와 문제점을 깊이 있게 파악하여 전달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여 개선방안 반영하고자 함
-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른 공적자료 연계 범위 확대 및 공적자료 우선 적용원칙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 먼저, 복지정책 집행의 효율화 및 전문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중복, 부정수급 방지 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각각 관리되던 시스템을 복지대상자에 대해 통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이 방지됨...

...복지정보 전산화를 통해 공무원의 재량보다 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우선 및 자동 적용에 따라 부정방지에 효과적인 것 같으며 편리함...

...다양한 공적자료 확보로 인해 복지대상자 선정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됨...

— 또한, 업무지원 시스템으로서 행정 편의성이 제고됨에 따라 복지 대상자의 체감도 변화(제출 서류 감소 및 복지서비스 일괄 연계 신청 등) 측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함

...사업별로 유사하고 중복된 서식을 통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별로 자산조사 방법을 통일하였고 공적자료의 연계 확대로 민원인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도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됨...

...조사관련 공적자료에 대한 계산 및 입력 시간이 많이 감소하였고, 알림기능으로 각종 변동사항에 대한 적용 및 조사 누락 방지가 가능해짐...

...사업별로 자산조사 방법을 통일하여, 한 번 조사를 하면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고, 누락 서비스 신청안내 및 연령변경이나 선정기준 변경의 경우에도 기준 적합 시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신청하는 복지수요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되었음. 보육료나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공적자료 활용으로 인해 구비서류가 간소화되었고 한번 신청을 하면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게 되어 방문이 줄어들어 편리해짐...

...수급신청이 간단해졌는데, 예전처럼 까다롭게 상담하지 않으며 서류만 갖추 어지면 신청이 가능하고, 조회가능한 공적자료가 많아지고 신속해져 복지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부정수급의 우려도 커진 것이 사실임...

□ 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 및 공적 행정자료 우선 적용원칙에 따

른 자산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등 임금근로 및 자영업에 대한 소득 파악에 다소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적 행정자료 우선 적용원칙과 더불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강화 및 이를 위한 행정 편의 제고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부양의무자 조사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가 관계단절 등과 같은 타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이러한 경우, 복지급여 신청자가 자신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자신의 신청과 동의서만으로도 부양의무자의 자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복지정책의 유형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유형과 나머지 제도 유형으로 구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매월, 그 외의 통합업무는 분기별 조사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공적 행정자료만으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신의 성실한 변동신고와 정확한 근거의 조화를 통해 소득에 대한 계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으로 인해 공적자료에 대한 적용은 담당자 입장에서 수월하게 되어 있으나,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적용이 상시고용자 중 임금체납으로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였지만 공적자료로 인하여 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와 같이 현실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할 수 없으므로 민원인과의 마찰이 발생함...

...공적 행정자료의 자동반영 시, 이전에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까지 미적용으로 인한 부적정 급여로 보게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가급적 변동시기에 맞춰 제 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공적 행정자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의문임...

— 특히, 지난 10년간 전담조직 및 인력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과소 또는 과다급여 등

부적정 급여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엄격한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음

...급여지급에 있어서는 중복급여가 방지되는 등 투명성이 강화되었으나, 공적
행정자료가 수시로 오거나, 정확하게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통망으로만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에는 아직 멀었음...

...공적 행정자료에만 의존하게 되어 드러나지 않는 실제소득을 간과할 경우가
있으며, 수급자 역시 공적 행정자료에만 조회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장하여 부정수급자 발생을 오히려 높일 수 있음...

...현재 신규책정 시 신청서류와 간단한 초기상담 결과를 입력하고, 통합조사팀
에서는 입력된 자료와 상담을 보고 공적자료만 적용하여 수급자를 책정하는 경우
에는 가정방문이나 최소한의 전화 상담 등도 없이 공적 행정자료만 가지고 수급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이러한 상황에서 부정수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후관리에 대한 강조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함...

...읍면동에서는 주로 신청만 받고 통합조사팀에서 공적자료만을 반영해 실질
적인 조사 없이 수급자를 책정할 경우 거주여부나 사실혼 관계, 소득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 약화 등으로 부정수급의 우려가 큼...

...소득신고서 작성 기피자나 허위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이 없음...

□ 다음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연계되어 자산조사에 활용되고 있는
소득유형별 국세청 자료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구체적인 인식
및 활용실태를 FGI의 언급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이 국세청 자료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시차
문제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의 복지대상자의 선정 및 급여조정
등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한계 상황임
-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실제 활용에 있어 곤란함을 경험하여
적용하지 못하거나 민원에 직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공적 행정자료 중 정확성과 시차 문제로 자료 적용시점이 늦는 자료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함. 국세청 자료는 약 2년 전의 자료가 제공 및 조회되므로, 최근 현황과 상이한 자료가 대부분으로 재확인 필요한데다, 민원인의 일방적 주장 등으로 인해 재확인도 쉽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신뢰성이 낮음...

...사업장의 폐업현황도 다소 시차를 두고 업데이트 되고 있음. 공적자료 연계, 제공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고, 정확성, 시간적 접근성(실시간 확인)이 증대되어야 하나, 현행 국세청 자료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일용근로자, 실직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및 공적 행정자료 적용 원칙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복지대상자 정보를 통합구축 관리하여 복지대상자 지원 및 수급자의 관리는 용이하여졌으나 국세청 자료와 같이 시차가 존재하거나 금액 수준에서 지나치게 차이가 발생하여 부정확한 자료의 경우 보완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치다보면 업무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있음...

...현재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만이라도 최신성, 정확성을 담보해서 보내주었으면 좋겠는데, 국세청 자료는 대개 2년 전 자료라서 대부분 소용없으며 자료를 수정하여 입력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

...현재 상시근로소득은 정확도가 높으나 국세청 자료는 부정확한 자료가 많아 애로가 많음...

...국세청 자료는 전년도 또는 2년전 자료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 시 참고만 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국세청 자료를 연계 및 활용한 자산조사에 있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항목 이면서도 현 상황의 인식 및 실태는 그렇지 못함
- 반면,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여타 소득 및 재산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높아 보충성 원리에 따른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급여수준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며, 보

육료 지원과 같이 상시 및 일용근로소득자, 그리고 사업소득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경우 중요한 요소임

-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적으로 지니고 있는 보충성 원리는 수급자의 성실한 소득신고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이를 유인하기 위한 노력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과 탈 빈곤 촉진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측면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의 변화는 중요한 항목임
-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불신이 존재하며, 기본적으로 국가 행정 체계에 있어 소득파악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국세청에 있음을 의미할지라도 국세청 자료의 시차 문제 등 공적 행정자료로서 한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실제 활용 상 문제점은 복지정책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있어 선결되어야 할 장애요인임

...일용직, 자영업에 대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일용직, 자영업에 대한 소득조사 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 적용도 제도화되었으면 좋겠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일용직의 경우 최저소득 수준을 정하여 그 이하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화 하는 등 임시·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저소득층 중 많은 대상자가 조회되지 않는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소득신고 하더라도 정확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조세행정을 담당하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도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는 업무를 복지담당자가 소득파악을 하게 하는 것은 전문성적인 면에서도 훨씬 떨어지는 면이 있음...

...또한 일용근로자, 사업자 등에 대한 소득산정기준 및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산정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민원인과의 마찰을 야기시킴. 담당자에게 무조건적인 권한을 주어 민원제기를 못하도록 강력한 규정을 만들든지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등 담

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조사항목을 완전 없애야함. 그리고 사업자,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만을 적용하도록 해야 함...

...일용직의 경우 조화되는 공적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인 신고에 의해 적용되는 비중이 커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파악하기 어려움...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거나 추정소득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성실히 신고하는 대상자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일을 안 하다가 하게 되어서 소득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소득자료는 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로부터 바로 제공되는 게 아니고, 수급자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움...

...수급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임의가입) 및 건강보험 자격이 취득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모르고 있다가 이듬해에 국세청 연간 근로소득 자료에 의해 파악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기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게 될 수 있음...

— 한편, 사업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과세, 사회보험료 징수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정책의 운영에 있어 신뢰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제도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서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의 경우 국세청자료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자료임. 몇 억짜리 집에 살면서 국세청 자료는 몇 십만원으로 소득이 집계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겪고 있는 상시근로소득자를 위해 반드시 객관적인 자영업자들 소득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좀 더 현실적인 자료가 필요함...

...영업신고만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그들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된다. 사업여부, 업종, 규모 소득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시근로자를 유리지갑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나 보육료 지원제도 등 각종 복지정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

자산조사를 하면서 국세청 자료 중 사업소득은 신뢰할 수 없다. 아마도 다른 담당자 역시 거의 사용안 할 것이다. 보고된 소득도 믿을 수 없어 단순히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 없다 정도만 파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자료들은 소득 파악의 근간으로 매우 중요하며 과거의 자료를 조회함으로써 현재 근로활동 및 소득수준을 파악하는데 간접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해 조회할 수 있는 자료로라도 연계 및 제공되어야 함...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수급을 신청하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노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기초보장 수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소득이 잘 드러나는 상시근로자인지, 소득자료가 미비한 임시 및 일용근로자인지, 소득파악이 잘 되지 않는 자영사업자인지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 있어서도 이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

- 따라서, 국세청의 소득파악 로드맵과 함께 국가의 전반적인 행정 체계에 있어서 자영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정책에서 이를 고려하여 어떻게 사업소득으로 인해 나타나는 수급자와 비수급자, 그리고 수급자 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모색해야 함
- 특히,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는 수급자와 현재 소득파악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효율화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수급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급여수준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 아님
 - 정확한 근거에 따라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다른 영역의 복지정책을 통해 필요한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 전후 공적 행정 자료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식과 활용실태와 관련된 FGI의 결

과는, 상시근로소득과 달리 현재 공적자료에 의하여 연계되는 일용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 관련 자료가 국세청 자료 중심으로 연계 및 활용되고 있으나 국세청 자료의 개념 및 속성 상 발생하는 시차 문제가 존재하며, 사업소득 개념이 과세를 위한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거나 경비율 적용)이므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상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 수준에 대한 인식과 실제 적용 측면에서 모두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사업소득 등 국세청 자료가 지닌 속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 행정자료 우선 적용원칙과의 괴리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득과악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세목적에 의해 생산 및 구축되고 있는 국세청 자료의 고유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것이므로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부분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공정사회의 이슈와 관련하여 소득과악의 점진적 개선 및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국세청 자료의 개념 및 속성에 기반을 두고 각종 복지정책의 선별성 및 보편성 정도와 수급대상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자산조사를 위한 공적 행정자료로서 국세청 자료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한 원칙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일용근로자의 소득과 같이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6년 세법 개정을 통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제 제출 의무의 강화와 같이 제도적 변화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의 근로소득 과악을 위한 현장관리 노력으로 인해 개선 및 변화된 정책 환경에 대해서는, 복지행정 인프라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국세청 자료의 연계 및 활용범위 확대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자산조사 원칙 하에서 이러한 공적 행정자료의

정확성은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복지정책의 신뢰성과 복지재정 집행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공적자료의 정확성 문제는 비단 이러한 자료를 구축하고 복지정책 집행에 활용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자료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정부부처 및 각종 공공기관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지라도 원자료의 정확성 및 공적 행정 자료 간 정합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복지정책의 특성 및 운영 상황에 적합하게 공적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 요컨대, 국세청 자료와 같이 공적 행정자료 우선 적용원칙을 무조건 적용하기에 다소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소득과 재산항목별 원자료의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연계된 공적자료를 어떤 수준까지 활용할 것인지, 신청조사와 확인조사, 그리고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또는 급여 정산 및 보장비용 징수 등 환수조치에 있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더 나아가 공적 행정자료의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적시에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신고의무를 어디까지 부여하고 그 결과를 어떤 범위까지 인정하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얼마나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의 재정립 문제로 귀착됨

-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공적 행정자료 우선 적용 원칙과 최초 신청자 및 수급자의 성실한 (변동)신고의무의 조화, 그리고 이에 대한 신뢰 및 적용수준의 결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시행원칙 수립 간 균형과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선순환 구조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모니터링 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조사원칙 및 구체적 수행방안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의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활용 개선방안

제6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의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활용 개선방안

□ 국세청 자료는 조세행정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 측면에 있어 소득파악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국세청의 소득파악 자료는 일차적으로 과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세법 상 소득유형별로 일정한 주기에 따라 구축됨
 - 이에 따라, 복지행정 측면에서 자산조사에 활용하기 위한 소득 개념과 과세를 위한 소득 개념 상 불일치가 존재함
 - 특히, 국세청 자료의 생산 및 제공시점과 활용시점 간 시차의 문제는 고유한 속성에 의한 것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는 경향이 존재함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 원자료의 개념 및 속성, 그리고 기본적인 생산주기, 나아가 외국의 복지정책 운영 시 자산 조사 및 급여조정, 사후관리 과정에서의 국세청 자료 활용사례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음
 - 국세청의 원자료 생산 및 구축과 관련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적 행정자료 우선 적용원칙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의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활용 원칙과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임

□ 먼저, 앞서 FGI를 통해 살펴본 현행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활용실태를 바탕으로, 국세청 자료 유형별 연계 및 활용 현황 세부내역 검토를 통해 미연계 자료 및 연계방식(주기 및 대상)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와 관련된 연계범위를 확대하여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근로활동과 관련된 소득과약 측면에서 2008년 시행된 근로장려세제 도입 이전까지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소득과약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였으나,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세법 개정 등 근로자 및 자영업자 소득과약 인프라 개선과정에서 지난 5년간 근로자에 대한 소득과약 및 소득 자료 구축 수준은 약 72%에서 90% 수준까지 개선됨
- 이에 따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국세통합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국세 자료를 복지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및 가능성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국세청 자료의 개념 및 속성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으로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부터 연계되지 못하였거나 잘못 연계되고 있는 원자료에 대한 연계 범위 확대 및 활용방식의 개선은 중요한 과제임

□ 다음으로, 국세청 자료의 개념 및 특성, 한계에 기반하여 현행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의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활용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 여기서는 국세청 자료의 유형(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과 복지대상자에 대한 자산조사 영역(일용근로자 소득과약, 사업소득자 소득과약 및 근로소득자와 형평성 제고, 부양의무자 판정 등)에 따라 국세청 자료의 연계 및 활용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공적자료 적용원칙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을 통한 국세청 자료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공적자료 우선 적용원칙 등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사후관리 원칙 및 방향에 대한 재검토
- 현행 공적자료 구축 기반 및 연계 가능성의 한계를 고려한 공적자료 우선 적용원칙의 보완방향 제시
 - 복지정책 유형별(선별적 vs. 보편적),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연계자료 주기 및 유형별 공적자료 우선 적용원칙의 분리 적용
 - 신규 수급신청 조사 - 확인조사 - 사후관리 개념 정의 및 역할 분담 등 자산조사 프로세스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산조사 관련 사항 중 변동사항에 대한 수급자의 신고의무 및 공적자료 조정 관련 입증책임 강화
 - 최초 선정 이후 각종 공적자료의 주기적 변동 관리 및 적용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급자의 변동사항 신고의무 강화
 - 국세청 자료 등 각종 공적자료의 특성 및 시차를 고려한 과다 및 과소급여, 부정수급 등 부적정 급여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실질적 운영

□ 본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에 해당하는 6장에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활용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주요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한 자산조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 영역별 개선과제와 국세청의 소득유형별 자료 내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1) 일용근로자 소득과 개선 위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관련 정보 연계 확대 및 활용방안
- (2) 자영업자 소득과 개선 위한 사업소득 및 사업지등록 관련 정보 연계 확대 및 활용방안
- (3) 부양 관계 및 지출실태 확인을 위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 연계 확대 및 활용방안
- (4)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및 탈 수급 촉진을 위한 근로 장려금 산정 및 지급 관련 정보 연계 및 활용방안
- (5) 공적 행정자료 적용원칙의 재검토 및 보완을 통한 국세청 자료 활용방안 : 공적 행정자료 적용 vs. 신청 및 변동신고 의무 강화 vs. 부정적 급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1. 일용근로자 소득과 개선 위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관련 정보 연계 확대 및 활용방안

□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정의

-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하고 있음
 - 국세청 자료 중 총수입금액(총 급여 또는 총 지급액)의 경우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개념임
 - ☞ 현행 국세청 자료의 연계 시 비과세소득에 대한 별도의 연계 및 활용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의미
-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일용근로자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 통계청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 임시 : 1개월~1년 미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 일용근로자 소득과약의 특성 및 현행 지침 상 조사방법

-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시점별, 계절별로 근로활동 및 소득수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에 대한 정확한 소득과약이 어려움
 - 불안정한 근로형태로 인해, 고용주에 대한 견제·감시능력 미약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 중에는 이처럼 소득과약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일용근로자나 취약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근로소득과약은 더욱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지침에서는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 행정자료(국세청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결과를 반영하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하거나
 -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신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제출 시 제한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파악되지 않거나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일용근로소득 관련 현행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활용의 문제점

- 현재 일용근로소득 관련 국세청 자료의 연계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이후 구축되고 있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정보가

연계 및 제공되는 것으로는 되어 있으나,

- 신규 신청자에 대한 조사 시 최초 연계 및 제공된 이후 매년 9~10월 경 1년을 주기로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변동성이 매우 높은 일용근로소득 정보를 1년 주기로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근로장려세제에 의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대한 급여액 확정 후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한적으로 연계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현행 법령(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근로장려세제의 신청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 연계가 가능한 최단 주기로 국세청 자료를 연계하여 최초 신청조사 이후의 소득변동에 따른 급여조정 등 확인조사에 적시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선정 및 근로장려금 지급정보와의 연동에 의한 자료 연계로 인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참고> 기초보장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상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07.12.31 개정) ○ 즉, 현금급여를 구성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현물급여 중 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제한 |
|---|

- 이는 현재 사업자에 대해 분기 단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장을 적극 관리하는 등 일용근로자의 소득과악 개선을 위한 국세청의 정책적 노력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연계 범위 및 주기를 반드시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이 결정된 2006년 전까지 국세청은,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징세 실익이 없다는 논리에 따라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관련된 지급명세서(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지 않았었음
- 그러나, 2006년 세법 개정에 의해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분기 단위로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한 이후 최근까지 근로장려세제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함에 따라 크게 개선된 상황임
- 향후 국세청의 소득파악 책임강화와 개선에 따라 상시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파악되는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자료의 연계성을 통해 이를 준거로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조정 시에 시차를 최소화 하여 제공된 자료를 활용해야 함

□ 일용근로소득 파악 및 정보 구축과 관련된 정책적 환경 변화

○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파악 인프라 개선

- '05년 8월 도입 결정으로 당초 '07년 1월부터 시행('08년 최초 급여지급) 예정이었으나, '06년 입법과정에서 1년간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08년 1월 시행('09년 최초 급여지급)
- 근로장려세제 도입 결정 이후, '05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요 정책 대상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여 '06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였음
- 특히, 근로활동과 관련된 소득파악 측면에서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전까지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였으나,
-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세법개정 등 근로자 및 자영 사업자 소득파악 인프라 개선과정에서 근로장려세제 운영을 위한 인력확충, 일선 세무서에 근로장려세제 운영 및 정착을 위한 소득 관리 전담팀 등을 통해 소득파악률(근로자 소득자료 보유비율) 제고

☞ 2005년 약 72%에서 최근 약 90% 수준으로 개선

- 2008년 세법 개정을 통한 200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으로 소득과약을 지속적으로 제고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조서) 제출의무

-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과약을 위해, 사업자는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또한,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 연 200만원 한도이며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연 300만원 한도)을 세액공제 받음

- 제출대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

- 제출내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을 통하여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 및 주요내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input type="checkbox"/> 소득자 보관용 <input type="checkbox"/> 지급자 보관용)				외국인 여부 (예, 아니오)	
정 수 의무자 (지급자)	① 상호(법인명)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⑥ 전화번호		
소득자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 소		⑩ 전화번호		
⑪ 귀속 연도	년	⑫ 지급분기	<input type="checkbox"/> 1/4분기(1월~3월) <input type="checkbox"/> 2/4분기(4월~6월) <input type="checkbox"/> 3/4분기(7월~9월) <input type="checkbox"/> 4/4분기(10월~12월)		
⑬ 지급월	귀 속	⑭ 총지급액 (과세소득)	⑮ 비과세 소득	원천징수세액 ⑯ 소득세 ⑰ 지방소득세	
월					
월					
월					

- 귀속연도 :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
 - 지급분기 : 급여를 지급한 분기에 ☒ 표시
 - 지급월 : 급여를 지급한 해당 월
 - 근무월 : 급여를 지급한 월에 해당하는 근무한 월(근로 제공월)
 - 근무일수 :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
- ※ 예를 들어, 3월에 근로를 15일 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 분기는 2/4분기 ☒ 표시하고, 지급월 4월, 근무월 3월, 근무일수 15일 기록
- 총 지급액 (과세소득)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으로서 비과세소득 제외
 - 비과세소득 :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월별(지급월·근무월)합계금액
 - 소득세 : 일용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기록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제출시점

- 1~3월 지급분 (4월말까지) / 4~6월 지급분 (7월말까지) / 7~9월 지급분 (10월말까지) / 10~12월 지급분 (다음연도 2월말까지)
-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12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말까지 반드시 제출
- 자료의 한계 : 상시 근로소득자 또는 일부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결과와 달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는 사업주가 제출한 것에 대하여 일용근로자 자신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 구축 현황
 - 2009년도 귀속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구축 현황은 사업자 99만, 일용근로자 756만명, 총 지급액 45.2조
 - 제출 사업자 수, 제출 인원(일용근로자), 총 지급액 매년 증가
 - 사업자 (24만→99만), 일용근로자 (420만명→756만명)
 - '06년(최초시행) 대비 사업자 4배, 일용근로자 1.8배 증가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제출업체 (증가율)	24만 (-)	53만 (220.8%)	84만 (158.5%)	99만 (118.1%)
제출인원 (증가율)	420만명 (-)	663만명 (157.9%)	738만명 (111.3%)	756 (102.4%)
총 지급액	19.7조	39.8조	43.8조	45.2조

- 상시 및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제외한 순수 일용근로자 소득자료 제출 규모 증가
 - '06년 309만명, '07년 475만명, '08년 527만명, '09년 545만명

－ 소득수준, 성별, 연령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인원 현황

구분	2008년 귀속분 일용근로소득		2009년 귀속분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인원(명)	총 지급액 (백만원)	지급조서 제출인원(명)	총 지급액 (백만원)
(총 지급액 구간)	7,380,691	43,872,705	7,558,913	45,193,743
1백만 미만	1,930,864	783,103	1,978,139	768,424
1백만 이상	1,808,727	3,374,172	1,785,327	3,344,271
3백만 이상	1,031,116	4,026,079	1,031,524	4,023,768
5백만 이상	866,231	5,495,689	940,220	5,935,096
8백만 이상	626,517	6,127,400	659,733	6,456,165
1천2백만 이상	443,310	6,307,323	469,013	6,676,599
1천7백만 이상	173,518	3,196,067	185,349	3,413,078
2천만 이상	168,283	3,681,537	178,618	3,907,844
2천4백만 이상	165,601	4,420,063	173,133	4,621,835
3천만 이상	166,524	6,461,272	157,857	6,046,663
(내외국인)	7,380,691	43,872,705	7,558,913	45,193,743
내국인	7,088,605	41,776,956	7,244,834	42,798,437
외국인	292,086	2,095,749	314,079	2,395,306
(성별)	7,380,691	43,872,705	7,558,913	45,193,743
남자	4,082,886	31,372,163	4,117,499	31,491,244
여자	3,013,129	10,417,774	3,134,397	11,321,093
기타	284,676	2,082,768	307,017	2,381,406
(연령별)	7,380,691	43,872,705	7,558,913	42,193,743
20세 미만	522,209	818,595	516,644	796,394
20세 이상	1,888,572	6,269,443	1,833,509	3,149,173
30세 이상	1,329,011	8,647,656	1,287,159	8,312,233
40세 이상	1,634,522	13,143,810	1,659,004	13,238,283
50세 이상	1,098,866	9,220,427	1,221,635	10,070,633
60세 이상	622,835	3,690,006	733,945	4,245,620
기타	284,676	2,082,768	307,017	2,381,407

- 주 : 1)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인원으로 중복자를 제거한 집계임
 2) 총소득금액은 매분기 제출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의 합계액으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3) 총소득금액 분포는 연간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함
 4) 기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성별,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임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규모는 전체 사업자의 17.4% 수준으로, '06년(최초시행) 대비 12.5%p 상승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 사업자(천명)	4,891	5,006	5,235	5,702
제출 사업자	240	528	841	993
제출비율(%)	4.9	10.5	16.1	17.4

주 : 총 사업자 수는 각년도 12.31 현재 계속사업자 수 (국세통계연보 기준)

- － 사업자 유형 및 업태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구분	2008년 귀속분 일용근로소득		2009년 귀속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사업자	총 지급액	지급명세서 제출사업자	총 지급액
(정수의무자 유형별)	841,588	43,872,705	993,421	45,193,743
개인사업자	616,878	15,206,897	760,674	15,478,972
법인사업자	224,710	28,665,808	232,747	29,714,771
(업태별)	841,588	43,872,705	993,421	45,193,743
농·임·어업	7,084	399,140	8,443	542,216
광업	619	21,114	595	19,521
제조업	150,256	6,900,676	163,605	6,746,338
전기·가스·수도업	479	15,223	510	14,635
건설업	103,271	22,384,194	110,908	22,375,714
도·소매업	194,773	3,892,114	234,291	4,141,056
음식·숙박업	174,325	2,565,597	227,610	2,819,635
운수·창고·통신업	14,926	821,075	18,773	758,033
금융·보험업	4,174	135,220	4,992	145,011
부동산업	29,097	981,536	34,937	1,709,379
임대/사업서비스업	61,278	3,909,770	68,262	3,815,239
교육서비스업	16,602	278,771	20,430	311,521
보건업	28,277	309,206	31,115	385,083
기타	56,427	1,259,069	68,950	1,410,362

○ 일용근로자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에 따른 긍정적 효과

－ (1) 근로장려세제 조기 정착에 기여

- 2009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일용근로자 가구는 356천 가구로서 전체 수급가구의 60.2% 차지

총 수급가구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일용 + 상용	기타
591천(100%)	235천(39.8%)	267천(45.1%)	75천(12.7%)	14천(2.4%)

주 : 기타 14천가구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일용근로자 가구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가구는 97.6%로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가구는 2.4%
- 2010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일용근로자 가구는 359천 가구로서 전체 수급가구의 64.6% 차지

총 수급가구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일용 + 상용	기타
556천(100%)	197천(35.4%)	238천(42.8%)	107천(19.2%)	14천(2.5%)

주 : 기타 14천가구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일용근로자 가구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가구는 97.5%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가구는 2.5%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인원 중 근로장려금 수급현황

(단위: 천 명, 천 가구)

귀속 연도	일용지급명세서 수집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수급가구 비율 (②/①)
	인 원	가 구①	계 ②	일용	일용+상용	
2009	7,559	6,140	345	238	107	5.6%
2008	7,380	5,676	342	267	75	6.0%

- 상용근로자 수급현황 : '09년 1.9%(수집가구 10,271천 가구 대비 수급가구 197천가구) / '08년 2.2%(수집가구 10,661천가구 대비 수급가구 235천가구)

－ (2) 소득금액증명 발급으로 납세서비스 개선

- 2010년 7월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금액 증명서 조회 및 발급서비스 실시 소득금액증명 전산발급 업무 시작
- 2006년부터 저소득 일용근로자가 금융기관 대출신청, 장학금

신청, 장기 전세 등에 활용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일선세무서에 직접 방문할 경우에만 수동으로 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왔음

- 그러나, 일용근로소득 민원증명을 사실증명형태로 발급하여, 소득금액증명 기능이 충분하지 않아 금융대출 신청 등 실생활에서 소득입증용으로 사용에 한계
 - 친서민 생활공감정책 일환으로 '06년부터 수집·관리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활용, 소득금액증명 발급 검토
 - 일용근로자의 불편과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TIS(국세통합시스템)와 HTS(홈택스)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0.7.30부터 증명서 발급 시작
 - 전국 세무서에서 민원봉사실에서 전산 발급하고,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TS)로 발급 가능
 - 소득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 별도 번역·공증불편 해소
 - 누구나 민원증명 원본확인을 통해 위·변조 여부 조회
 - 저금리 대출('햇살론' 등) 및 대출연장, 장학금 신청 등 용도로 발급받고 있으며, 소득증명 발급에 대한 만족도 높음
 - 소득금액증명 발급 실적 역시 1개월 만에 종전 보다 2.6배 증가
 -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금액 증명을 이용한 저소득층의 실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증명서 발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검증업무를 지속 추진
- － (3) 건설업종 등의 인건비 비용공제 정상화 기여
- 금액과다 허위제출분 대부분은 건설업 종사자의 인건비로 향후 건설업종 과세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09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제출금액) 건설업종 점유비는 49.9%로 절반 수준

- 향후, 일용지급명세서 검증업무를 상시 추진하여 신뢰성 확보 및 부실업종 과세 정상화 유도
- (4) 자영업자 수입금액 양성화 기여
 - '09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사업자 중 개인사업자는 76만개(76.6%), 제출금액 15조(34.1%)로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해 지출비용이 노출되므로 자영업자 수입금액 양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보험료 수입증가 효과
 - 일용근로자를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시킬 경우, 사각지대의 해소와 보험재정 수입증가가 예상됨
 - 그러나, 근로장려금 확대 적용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한 일용근로자 추가 세부담은 거의 없지만 사업주는 국세청 DB 구축 및 사회보험공단 제공으로 인한 사회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므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 연계 추진 시에 이에 대한 전략적 고려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사회보험료는 사업자의 추가비용 발생, 근로자의 급여 수령액 감소로 이어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피현상에 따른 근로장려세제 운영 및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 연계 및 활용 개선방안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과정에서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이 새롭게 연계되기 시작하였으나, 주기적인 소득변동 사항에 대한 정보 연계가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연계되면서, 현행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복지대상자 자산조사에 있어 자영업자 사업소득과 더불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요구가 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과약 인프라 개선 및 자료 구축으로 인해 연계 및 활용 가능성이 높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영역임

- 현행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소득과약 인프라 개선 및 최근 일용근로소득금액증명서 발급 등의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일용근로소득 정보 연계대상 및 연계주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내에서 일선 지자체 제공주기 등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정보연계 대상 확대

－ 현행 연계 및 활용실태

- 신규 수급신청 시에 기 구축된 일용근로소득 정보를 연계 및 제공한 이후, 연간 1회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일용근로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매년 9월경)에서 전년도에 수집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보를 제한적으로 연계함
- 국세청이 구축하고 있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인원 756만명 및 순수 일용근로소득자 545만명(2009년도 귀속분 일용근로소득 기준) 중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전체 55만 가구, 일용근로자가 있는 가구의 비율이 35만 가구임을 고려할 경우, 그 동안 활용 가능한 일용근로소득 자료의 약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보를 연계 및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특히,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보충급여 체계에서 정확하게 일용근로소득을 파악할 필요성이 높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신청 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활용정도는 보다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개선방안

- 근로장려금의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인원 전체 및 2010년 7월 이후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일용근로소득금액증명서 발급서비스 제공 대상 일용근로소득자로 정보 연계대상 전면 확대

○ 정보연계 주기 및 시점

－ 현행 연계 및 활용실태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전년도 일용근로소득 정보 연계 및 제공
- 정기변동에 경우, 1년 주기로 연간 1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정시점과 연동하여 매년 9~10월경 연계 제공함

－ 개선방안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연계 가능한 가장 최근 시점 분기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정보 또는 일용근로소득금액증명서 내용을 연계하여 선정 시 활용 직전 분기
- 연계 시점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4~6개월 직전 시점의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월, 4월, 7월, 10월 연계 추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제출되는 주요 내용인 귀속 연도, 지급분기,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과세소득), 비과세소득 등의 정보를 연계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의 활용방안

－ 기초생활보장제도 유형의 선별적 제도

- 최소 시차(4~6개월 전) 내에 있는 일용근로소득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신규 신청조사 시 일용근로소득을 반영하고 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 자료의 변동에 따른 공적 자료를 제공하여 정기 확인조사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음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및 일용근로소득금액증명서 발급서비스로 인해 국세통합전산망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정보가 약 4~6개월의 시차를 가지고 분기 단위로 구축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분기 단위로 연계하여 제공 받을 경우 지급월, 근무월 및 근로일수, 일용근로소득 수준에 대한 정보를 최근 시점 근로활동 여부 확인 및 비정기적 근로활동 기록에 의거하여, 추정소득 부과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파악 및 취업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음

- 한편, 그 동안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해 소득 및 근로일수 등을 조사할 수 없거나 소득확인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소득확인이 곤란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정소득 산정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현행 추정소득 부과기준 관련 지침에 의하면,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하되 대상자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연계하여 조회성 자료로 제공할 경우 이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 또한, 공적 행정자료 상으로 확인되는 인접 시점의 실질적인 근로활동 기록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능력의 판정결과에 대한 확인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

－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보편적 제도

- 현재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사회보험 및 국세청에 의해 자료가 제공되는 상시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이외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음으로 인해 공적 소득자료가 연계 및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파악 및 주기적 변동, 급여자격 조정에 활용

－ 연계 확대 및 적용 추진일정

- 일용근로소득 관련 정보에 대한 국세청 자료 연계 가능성 및 구체적인 연계정보 및 주기 등에 대한 협의 진행
-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 협의 진행결과에 따라 2011년 7월 또는 10월부터 2010년 1~12월을 포함하여 2011년 1~3월 또는 4~6월 등 매 분기마다 4~6개월 시차 내에 확인 가능한 일용근로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신규 신청 및 분기 단위로 확인조사 항목에 포함하여 적극 활용

2. 자영업자 소득과약 개선을 위한 사업소득 및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연계 확대 및 활용방안

가. 국세청 사업소득 현황과 연계 확대 및 활용방안

□ 사업소득의 정의

○ 복지정책 운영을 위한 자산조사 항목 중에서 사업소득의 개념에는 농업소득, 어업소득, 임업소득, 그리고 기타 사업소득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함께 포함됨

- － 농업소득은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정의
- － 임업소득은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정의
- － 어업소득은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정의
- － 기타 사업소득인 자영업소득은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및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으로 정의

○ 그러나, 국세청 자료에 있어서 종합소득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근거한 소득으로, 독립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얻은 소득임

- － 사업소득은 업태 및 업종에 따라 구분되는데, 농림어업의 경우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제조업 등과 동일하게 사업소득의 하위 영역 중 하나로 분류됨
- － 사업소득의 개념은 총수입금액(매출)과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 사업소득금액으로 구분됨
 - 필요경비의 경우,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자료에 의한 필요경비,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로 구분됨

□ 사업소득의 특성 및 현행 지침 상 조사방법

- 농림어업 소득의 경우, 현행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각 영역별로 연계 및 제공되는 공적자료가 농지원부, 입목재산자료, 선박 보유 여부 등 자영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매우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공적자료가 존재할 경우 복지대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인하며, 기초보장 수급자의 경우 지출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함
 - 한편, 2009년 사업소득 신고결과 기준으로 농림어업 분야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소득자가 약 2만 1천명 존재함
 -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함
 - 상업 및 사업경영에 의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공 사업자,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로 구분
- 사업소득 및 사업자등록 관련 현행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활용의 문제점
- 현행 지침 상의 사업소득 조사원칙과 방법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복지대상자의 사업자등록 상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국세청 자료의 연계 및 이를 활용한 소득파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유형의 선별적 제도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원 등의 보편적 제도의 신규 신청 조사 및 확인조사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에서 연계 및 제공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여타 국세청 자료와 마찬가지로 시차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 또는 일용근로소득자와 달리 필요 경비를 제외한 이후의 사업소득금액 수준은 현실과의 괴리 속에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
 - 국세청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상의 소득금액 개념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적용하는 자산조사의 소득개념과 상이하며, 과도한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인건비 등 필요경비의 과다 계상 등으로 인해 사업소득금액이 매우 낮게 파악되고 있다는

- 인식과 사례가 존재하는 경향이 있어 일선 지자체에서 이러한 소득자료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출실태조사 등을 병행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반면, 공적 행정자료 우선 적용원칙에 의해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는 이러한 추가 조사 없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상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더욱 심각한 상황은 이와 같은 문제가 단순히 수급을 신청하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당사자 간 형평성 문제와 제도의 신뢰 수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임
- 예를 들어, 노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 의해서 기초 보장 수급여부가 결정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근로형태가 상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인지, 상대적으로 사업소득의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인지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 있어서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
- 한편, 현행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활용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에서 발생하는 시차 또는 자료 부재의 문제는, 사업소득 파악 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된 상황임
- 그러나, 여전히 현재의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보 연계내용 및 제공주기 등과 관련하여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영업 지속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소득을 파악하는데 있어 커다란 장애요인을 작용함
 - 따라서, 현재 누락되어 있는 휴업이나 폐업 등 사업자등록상태 및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거의 실시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관련 국세청 자료의 연계내용 및 주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일선 지자체의 활용과정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복지대상자의 직접 증명이 필요 없도록 수시로 연계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함

□ 국세청의 사업소득 및 사업자등록 관련 기초통계

○ 과세유형에 따른 사업자 유형별 분포

- 2009년 기준 총 사업자는 약 541만 9천명이며, 이 가운데 법인 사업자는 52만 9천명으로 약 9.8%이며, 나머지 489만명이 개인 사업자에 해당됨
- 개인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연간 매출액(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사업자가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54.4%를 차지하고 있으며,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사업자가 34.5%인 약 169만명을 차지함

○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서비스 주요내용

- 현재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매일 업데이트, 세무서 실제 정보와 1일 시차)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매주 월요일 업데이트, 세무서 실제 정보와 최대 1주 시차)를 통해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사업자등록 유무 및 기본정보 이외에도 사업자등록 상태(계속사업자 여부, 휴·폐업 여부), 과세유형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제공하고 있음
-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복지대상자가 필요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이용하여 확인 또는 입증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상태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조사 및 상담 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구 분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제공내용	·사업자등록상태 (계속사업자, 휴·폐업여부) ·과세유형 ·사업자등록 유무	·사업자등록상태 (계속사업자, 휴·폐업여부) ·과세유형
명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 (조회·계산 → 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
이용대상자	홈택스 가입자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
인증방식	공인인증서 필요	—
자료제공 시기	매일 업데이트 (세무서의 실제 자료와 1일간 사차발생)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 (세무서의 실제 자료와 최장 1주일간의 사차발생)

○ 2009년 귀속분 사업소득 확정신고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현황

- 2009년 종합소득 확정신고 결과를 기준으로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소득 확정신고 인원은 약 334만명에 이르며, 사업·임대소득이 전체 종합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함
- 특히, 앞서 사업소득 개념 및 수준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 총 수입금액은 약 628조 5,309억원인 반면, 필요경비를 제외할 경우 소득금액은 약 8.8% 수준인 약 55조원임
- 업태 및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업소득자 규모면에서 기타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 부동산업, 음식숙박업 순서로 나타남
 - 반면,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순으로 높게 나타남

구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인원(명)	금액(백만원)	인원(명)	금액(백만원)
전체 종합소득	3,570,816	669,595,349	3,570,816	87,560,340
사업·임대소득	3,338,472	628,530,936	3,338,472	55,006,917
농림어업	21,141	7,241,533	21,141	269,583
광업	435	187,540	435	25,749
제조업	268,234	121,193,632	268,234	7,207,656
전기가스수도업	665	75,466	665	163
건설업	209,727	40,696,859	209,727	1,932,543
도소매업	750,963	273,563,737	750,963	12,054,976
음식숙박업	399,877	50,519,363	399,877	3,800,063
운수·창고·통신업	185,508	17,388,814	185,508	1,485,100
금융 및 보험업	27,850	2,721,934	27,850	272,641
부동산업	725,058	24,541,888	725,058	9,683,41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22,131	18,505,893	122,131	2,770,025
교육서비스업	74,364	7,842,025	74,364	835,351
보건(의료업)	66,951	31,546,357	66,951	7,719,482
기타 서비스업	875,935	32,505,895	875,935	6,950,173

○ 국세청의 자영업자 사업소득 파악 관련 전망

-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국세청의 추진계획을 기초로 소득파악 인프라의 개선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의 연계 및 활용 수준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소득 파악 수준을 개선함과 동시에, 2014년 귀속분 소득부터 시행 예정인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기존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 제고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특수직고용자를 포함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및 소득자료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적용 준비를 위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 및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과 관련된 국세청 자료 연계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국세청 사업소득 및 사업자등록 자료 연계 및 활용 개선방안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제대로 연계되지 못해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던 사업자등록 정보 연계 및 활용이 개선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사업자등록 상태에 대한 확인 및 국세청의 사업소득금액만을 중심으로 한 공적자료 적용에 대한 정확성 및 형평성 문제는, 국세청 자료가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시차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현행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복지대상자 자산조사에 있어 일용근로소득과 더불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음

○ 이처럼 자영업사업자에 대한 소득과약의 문제는 비단 국세청의 형평과세 및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시행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육료 지원 등 소득과약을 통한 자산조사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는 모든 복지정책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음

－ 특히, 소득세 체계 내에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사업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기초보장수급자 등 각종 제도의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저소득층 내에서도 근로소득자(상시근로자 vs. 임시 및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사업자 간에 나타나는 소득자료 및 소득과약 수준의 차이와 이로 인한 선정 및 급여수준 형평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음

• 또한, 보육료 지원 등 복지정책이 점차 보편적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민원이 확산되고 있음

☞ 여기서는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과 관련된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활용 개선방안과 별도로, 사업소득 개념(소득금액) 및 수준, 공적자료 우선 적용원칙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사업자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사업자등록 정보 연계내용 및 주기 개선

－ 현행 연계 및 활용실태

- 현행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자영업자의 사업자등록증 관련 정보의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 자료를 수시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매분기 초 제공함
-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연계내용은 사업자명, 사업장 상호명 및 주소, 사업 시작일자, 업태 및 업종에 대한 정보임

－ 개선방안

- 사업자등록증 관련 자료에서의 시차 문제나 자료 부재는, 현재 지영사업 지속여부에 대한 확인 및 이를 근거로 사업소득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휴업이나 폐업 등 사업자등록상태 및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등을 거의 실시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의 연계 내용 및 주기를 개선해야 함
-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발생 및 변동에 대한 신고유도 및 파악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수시로 이루어지는 신규조사의 경우, 현행 사업자등록 유무 및 사업장 관련 기본정보 이외에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서비스에서 구축하고 있는 주요내용(사업자등록 상태와 관련하여 계속사업자 여부, 휴·폐업 여부 및 과세유형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사업자 vs. 일반과세사업자)으로 정보를 추가 연계하여 단축된 주기로 제공해야 함
- 사업자등록 상태의 변동 및 사업소득 변동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유무 및 사업장 관련 기본정보 이외에 사업자등록 상태(계속사업자 여부, 휴·폐업 여부), 과세유형(간이과세/일반과세) 등의 정보 제공주기를 매월로 단축방안 추진
- 또한, 일선 지자체의 사업자등록 정보 활용과정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복지대상자의 증빙 서류 제출 등 직접 증명이 필요 없도록 수시로 연계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함

- 한편, 사업자등록 정보에 비해 국세청의 제공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신청 및 상담, 확인조사 과정에서 종합소득 신고(전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매년 5월 실시) 이전에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조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장현황신고(매년 2.10일까지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 정보 신고) 관련 정보를 연계 및 활용하거나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세청 사업소득금액 정보의 시차 문제를 단축하고, 초기부터 자영업자로 하여금 사업소득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음

○ 사업소득 개념과 관련된 정보 연계내용 확대

－ 현행 연계 및 활용실태

- 국세청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상의 소득금액 개념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적용하는 자산조사의 소득개념과 상이하며, 과도한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인건비 등 필요경비의 과다 계상 등으로 인해 사업소득금액이 매우 낮게 파악되고 있다는 인식과 사례가 존재하는 경향이 있어 일선 지자체에서 이러한 소득자료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기초보장수급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정보가 존재하는 비율이 낮고 그 수준이 매우 낮으므로 대부분 이를 참고하여 사업소득 신고를 유도하고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반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등에 있어서는 제공되는 사업소득금액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별 사례마다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사업소득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

－ 개선방안

- 우선적으로, 현재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등급형태로 연계하고 있는 사업소득금액 외에 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자료를 연계 확대하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의 개선, 나아가 최근 추진 중인 빈곤정책 개선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함

- 매년 5월 전년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종합소득 신고에 기반하고 있는 사업소득의 경우, 현행 연계시점(10월) 및 주기(연간 1회)를 개선하여 시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세청 자료의 생산주기 및 속성 상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신청 및 확인조사 시점에서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바탕으로 성실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음

○ 연계 확대 및 적용 추진일정

-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관련 정보 연계 가능성 및 구체적 연계 정보 및 주기 등에 대한 협의를 우선 진행
- 또한, 2011년 10월(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 신고 결과)부터 사업소득에 대한 정보 연계내용을 기존의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 등 일련의 자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
-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소득자의 총수입금액 정보를 10월 이전에 확보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현황신고(매년 2월) 자료 연계 가능성을 추가로 논의

나. 국세청 공적자료 적용 시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소득금액 조정 및 보정계수 산출방안

□ 공적 행정자료 우선 적용원칙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적용 시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간 형평성 제고 필요성

- 공적 행정자료 우선적용 및 이를 통한 선정 및 급여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소득 관련 소득과약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 공적 행정자료 적용 시, 상시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료가 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현재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향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보의 연계가 확대될 경우 상시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사회보험 또는 국세청 자료가 반영될 것임
-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연계 및 제공되고 있는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은 향후에도 달라지거나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
-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세청의 과세에 있어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소득과익률 차이, 즉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 또는 건강보험보수월액과 국세청 사업소득금액의 개념 및 수준 차이로 인해, 향후 대부분의 복지정책, 특히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제도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선정 및 급여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문제는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대폭 확대 개편한 이후 소득세 과세와 마찬가지로 복지행정에 있어서도 근로소득자의 유리지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다양한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나아가 근본적으로 선정체계와 관련된 불신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의 연계 확대 및 활용과 관련하여 공적자료 우선 적용원칙에 따른 사업소득 적용 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
- 공적 행정자료 우선 적용원칙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적용 시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간 형평성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 **(1안) 국세청으로부터 연계되는 사업소득금액이나 필요경비 산정 방식 조정을 통해 새로운 사업소득 개념의 공적자료를 자체 생산하여 활용하는 방안**

- 총 수입금액을 추가로 연계하여 제공받은 후 국세청의 경비율(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결정 및 조정방식을 참고하여 보정률(현행 재산항목별 시가표준액에 대한 보정률 개념과 유사)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함으로써 사업소득금액 수준을 현실화시킴
 - 필요경비에 대한 자료까지 연계할 경우, 장부기장에 의하거나 국세청의 경비율에 따라 산출된 필요경비 중 일부만 인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 가장 현실적인 사업소득 보정방안(보정률)은 사업소득 파악률과 관련된 각종 거시경제 지표나 국세통계자료, 각종 폐널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방식을 도출할 수 있음
 - 그러나,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이유로 보정률을 활용하여 공적 자료 연계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또 다른 유형의 민원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수행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 체계에 의하여 파악된 자영업자 소득파악 결과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적용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 이처럼 사업소득금액을 보정하여 활용할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업 소득 총 수입금액(매출)을 연계하여 일선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참고하여 성실한 사업소득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청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을 신규로 연계하여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에 조회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대한 매출규모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신고를 유도하는데 활용하고, 향후 보정된 사업소득을 실제로 반영할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함
 - 궁극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국세청과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임
- (2안) 공적자료에 의해 파악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30%)를 적용하는 방안
- 2안에서 사업소득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을 대체하여 우회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필요경비 차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인정함

으로써 공적 행정자료에 의해서 파악되는 근로소득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이것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국세청 자료 등의 공적 행정자료에 의해 근로소득이 노출되어 투명하게 파악되고 있는 상시 근로소득자 또는 일용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세법 상 연말정산 과정에서 적용하는 사례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공제를 동일한 원리에 따라 도입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임
-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조사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소득 관련 자료에 의한 조사결과를 활용하되, 근로소득자에 대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방식의 적용을 검토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소득세 체계에서는 이미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 고려 및 근로유인 차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의 각종 복지제도에서는 수급대상 선정 및 급여 시에도 다양한 근로소득공제(earnings disregard)를 적용함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결과

구분	2009년 귀속분	
	인원(명)	금액(백만원)
급여총계	14,294,993	369,570,625
소득명세	14,250,112	362,559,549
과세대상근로소득	14,250,112	361,466,457
근로소득공제	14,248,434	121,600,195
근로소득금액	14,250,112	239,866,262
과세표준	8,541,168	121,318,165

- 2009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의 평균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살펴보면, 과세대상 근로소득과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이후 근로소득금액을 비교할 경우 근로소득 공제는 약 33.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금액에 다시 다양한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 이후 과세표준은 과세대상근로소득 대비 약 33.6%에 해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와 지출 부분에 대한 공제를 모두

포함한 전체 공제율은 약 66.4%라고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지출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과세표준액이 각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영업자의 2009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은 약 628조 5,309억원이며, 약 90%를 상회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제외할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의 약 8.8% 수준에 해당하는 약 55조원임

— 이와 같이, 공적자료에 의해서 파악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도입방안 관련 논의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초부터 설치 운영 중인 ‘빈곤정책제도개선 기획단’에서 근로능력 수급자에 대한 근로유인 제고 및 탈수급 촉진과 관련된 급여체계 개편 방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으로, 공적 행정자료 우선 적용원칙에 따른 국세청 자료 활용방안의 개선을 위해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소득공제 방식은 탈수급 등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편 등과 연계되어 논의가 필요하며, 각종 복지정책 급여체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중장기 검토사항임

□ 여기서는 공적 행정자료 우선 적용원칙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적용 시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간 형평성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연계되는 사업소득금액이나 필요경비 산정방식 조정을 통해 새로운 사업소득 개념의 공적자료를 자체 생산하여 활용하는 방안(1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정률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정책 모의분석 실시 결과를 제시함

— 먼저, 공적 행정자료 우선 적용원칙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적용 시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소득금액 조정방안별 보정률 및 산출근거⁵⁾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사업소득금액 조정방안별 보정률 및 산출근거 >

- (1-1안) 한국은행 국민계정¹⁾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²⁾ 거시지표 기준
소득과약률 53.4%(2009년도 귀속분 기준) 반영
=> 보정계수 0.534를 적용하여, 조정 전 공적 행정자료 사업소득을
0.534로 나눔
- (1-2안)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조세재정패널³⁾ 총수입금액(매출) 대비
사업소득금액 비율을 비교하여 산출된 각각의 보정계수로
공적 행정자료의 사업소득을
- (1-2-a 안) 전체 사업소득자 대상으로 산출된 0.331로 나눔
(1-2-b 안) 기준경비율 신고자 대상으로 산출된 0.568로 나눔
(1-2-c 안) 단순경비율 신고자 대상으로 산출된 0.831로 나눔
- (1-3안) 통계청 가계동향조사⁴⁾ 등 미시데이터를 분석한 선행연구에 기초한
소득탈루율 35.8% 반영
=> 소득과약률 64.2%로, 보정계수 0.642를 적용하여,
조정 전 공적 행정자료 사업소득을 0.642로 나눔

- 주: 1) 국민계정이란 일정 기간 국민경제의 모든 구성원이 이룩한 경제활동의 성과와 일정시점의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정리해 보여 준 것을 말한다. 기업의 재무제표에 비견되는 국가의 재무제표라 할 수 있다. 국민계정은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등 5대 국민경제 통계로 구성된다.
- 2) 국세통계는 국가의 납세실상을 알려 국세행정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세금에 관한 신고·경정·조사·징수 등 기본적인 전수자료를 정리·집계하여 통계법 18조에 따라 승인된 국가통계이며, 국세청에서는 이를 보고서 형태인 국세통계연보로 매년 발간하고 있다.
- 3) 조세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조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한 국조세연구원에서 조사된 패널데이터로 가구 단위의 조세·지출·복지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 4) 통계청에서 매월 전국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과 지출의 규모, 구조, 추이 등을 파악하여, 분기 및 연간자료의 형태로 국가통계포털등에 수록한다. 데이터는 국민의 소득과 소비수준변화의 측정 및 등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 5) 현행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도 일부 공적 행정자료를 기준으로 보정률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음. 부동산 일반재산가액의 경우 공적자료(시가표준액)에 의한 파악률을 90%로 보고 보정계수(0.9)를 적용하여 0.9로 나누고 있으며, 이것은 약 1.111...을 곱한 것과 동일함. 한편, 선박항공기의 경우에도 공적자료에 의한 파악률을 28.57%로 보고, 보정계수 3.5를 곱하며,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1억원일 경우 실거래가 3억5천만원으로 보정하여 적용함

□ 보정방안별 구체적 보정률 산출근거 및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1안) 한국은행 거시지표 및 국세청 통계자료 중심으로 보정률을 산출한 1-1안의 경우,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의미하는 ‘개인영업잉여’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매년 발표되는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금액 수준을 비교한 후에 소득과약률을 추정하는 방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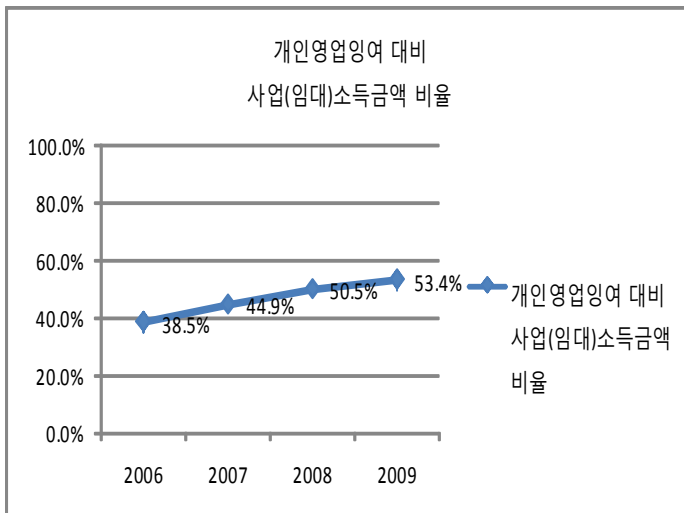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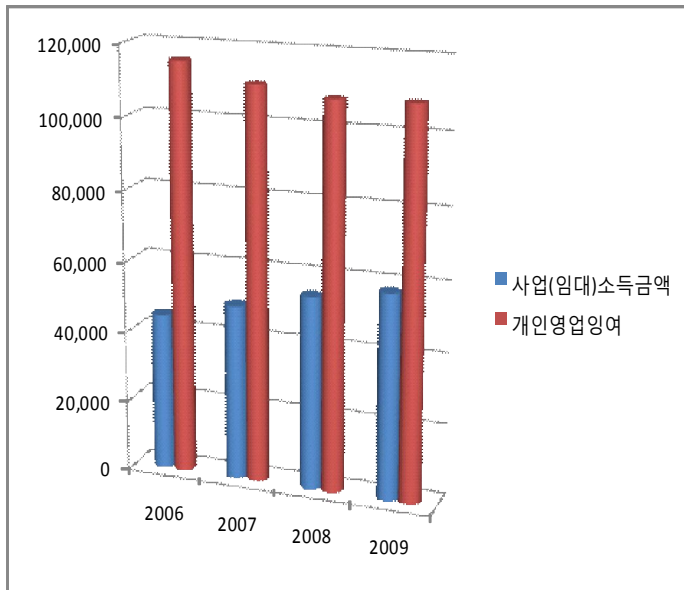
－ 이러한 지표는 각각의 산출근거가 매년 한국은행과 국세청으로부터 일관성 있게 산출되어 발표되고 있는 통계자료로, 안정적으로 각년도 보정계수를 산출하여 일관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음

- 일부 언론에서도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을 추정하기 위하여 산출한 후 보도한 사례가 있는 개념임
- 그러나, 개인영업잉여 대비 사업소득금액의 비율을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로 판단하는 조작적 정의의 한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보정률 적용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정책 모의분석에 적용할 보정계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2009년도 귀속분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영업잉여 대비 사업소득금액 비율 개념에 따라 소득과약률을 산출한 결과 53.4%로 나타났으며 매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모의분석에서는 보정계수 0.534를 적용하여 나누는데, 이것은 국세청 행정자료 상 사업소득금액을 1.873배하는 것과 동일함

구분	2006	2007	2008	2009
사업(임대)소득금액 총액 (십억원)	44,488	49,572	54,568	57,920
개인영업잉여 총액 (십억원)	115,487	110,455	108,097	108,528
개인영업잉여 대비 사업(임대)소득금액 비율	38.5%	44.9%	50.5%	53.4%



- (1-2안)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발표되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매출) 대비 사업소득금액 비율이 몇 %인지를 산출한 후, 설문조사 방식에 의해 구축된 패널데이터로부터 산출된 사업소득자의 총매출액 대비 실제 사업소득의 비율과 비교하여 공적 행정 자료의 사업소득금액을 조정하는데 적용할 보정률을 추정함

- 국세청 행정 통계자료인 국세통계연보로부터 산출된 비율과 패널 조사에서 자영업자가 응답한 결과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비율을 비교하여 보정계수를 산출하는 방식
 - 자영업자의 응답이 실제 사업소득 수준에 가까운 값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산출한 것이라는 한계를 지님
 - 또한, 한국복지패널, 한국노동패널, 조세재정패널 등 각종 국책 연구기관의 패널자료마다 이와 같은 비율이 상이하게 산출되며, 자영업자 전체 또는 일부 집단별로도 이러한 비율의 편차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제 적용하는데 한계를 지님
 - 요약하면, 패널조사에서 자영업자가 응답한 총수입금액(매출) 대비 사업소득의 비율이 실제 복지대상자 선정 시에 파악하고 있는 사업소득과 근접한 개념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제 보정률 산출 및 적용과정에서 각종 패널조사마다 다양한 결과가 산출될 수 있음
 - 특히, 자영업자 전체의 평균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매출이나 소득금액 구간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산출할 것인지 또는 장부기장 유형 등에 따라 상이한 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매우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보정률 적용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정책 모의분석에 적용할 보정계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책연구기관 패널자료 중에서 국세청 자료의 개념이나 정의와 가장 일관성을 나타내며 소득세 등 조세 분야가 가장 정확하게 조사된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조세재정패널로부터 이러한 비율을 산출하였음
 - 조세재정패널의 자영자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4.22%이고, 자영업자 연간 총수입금액(매출) 평균은 8,588만원이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은 2,286만원으로 총수입금액 대비 실제 사업소득으로 응답한 금액의 비율은 26.6%로 산출됨

• 조세재정패널 자영업자 매출 및 사업소득 구간별 분포

매출액 구간(만원)	가구(%)	사업소득 구간(만원)	가구(%)
0초과 2,400이하	37.06	0초과 1,20이하	41.06
2,400초과 4,800이하	25.49	1,200초과 2,400이하	26.24
4,800초과 6,000이하	11.87	2,400초과 3,600이하	17.30
6,000초과 7,500이하	3.76	3,600초과 4,800이하	5.91
7,500초과 10,000이하	8.67	4,800초과 6,000이하	5.05
10,000초과 15,000이하	5.31	6,000초과 8,400이하	2.16
15,000초과	7.84	8,400초과	2.29

— 다음으로, 국세통계연보에서 자영업자 총수입금액(매출) 대비 사업소득금액의 비율은 전체 평균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 8.8%로 나타났는데, 정책 모의분석을 위한 조정방안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전체 자영업자(1-2-a안)에 대한 비율과 함께, 장부기장과 달리 별도의 방식으로 필요경비를 적용하는 기준경비를 신고자(1-2-b안) 및 단순경비율 신고자(1-2-c안) 집단의 총수입금액(매출) 대비 사업소득금액의 비율을 산출하여 보정계수를 산출한 후 이를 모의분석에 활용함

- 기준경비율(13.8%)신고자와 단순경비율(26.8%)신고자는, 외부 조정(24.5%)신고자 및 간편장부(31.4%)신고자와 더불어 자영업자 중에 인원 구성비가 높은 반면에, 평균 총수입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은 가장 낮은 집단으로 복지대상자 중 사업소득 파악이 어려운 계층과 가장 유사하다는 점에서 별도로 고려함
- 조세재정패널 기준 자영업자의 총매출액 대비 실제 사업소득 비율이 26.6%를 고려할 때, 국세청 공적 행정자료상 사업소득 금액으로부터 이를 추정할 경우 각 방안별로 적용되는 보정률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서 전체 사업소득자의 총수입금액 대비 사업소득금액의 비율은 8.8%로, 실제 패널조사에서 응답했던 결과인 26.6%와 비교할 때 33.1%에 해당하므로 보정계수의 적용 시 0.331로 나누며, 이는 3.023배와 동일함(1-2-a안)

구분	2009년 합계	외부조정 신고자	자기조정 신고자	성실납세 방식신고자	간편장부 신고자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총수입금액 (백만원)	188	551	206	386	86
소득금액 (백만원)	16	42	15	12	7
인원 구성비	100.0%	24.5%	3.5%	0.1%	31.4%
금액 구성비	100.0%	71.8%	3.8%	0.1%	14.3%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 비율	8.8%	7.6%	7.2%	3.1%	8.4%

구분	2009년 합계	기준경비율 신고자	단순경비율 신고자
	평균	평균	평균
총수입금액 (백만원)	188	79	30
소득금액 (백만원)	16	12	7
인원 구성비	100.0%	13.8%	26.8%
금액 구성비	100.0%	5.8%	4.2%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 비율	8.8%	15.1%	22.1%

- 다음으로, 주요 경비에 대해서 증빙을 필요로 하는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총수입금액 대비 사업소득금액의 비율은 15.1%로 26.6%와 비교할 경우 56.8%에 해당하므로 보정계수 적용 시 0.568로 나누며, 이는 1.762를 곱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임
- 마지막으로, 주요 경비에 대해서도 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경비율 신고자의 총수입금액 대비 사업소득금액 비율은 22.1%로 26.6%와 비교할 경우 83.1%에 해당하므로 보정계수 적용 시 0.831로 나누며, 이는 1.204배와 동일함

○ (1-3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 각종 미시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득
탈루를 분석연구 결과 기준으로 보정계수를 산출하는 방식

－ 분석자료 및 개별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따라 편차가 크게 존재하
므로, 복지대상자 선정과정에 적용하는데 있어 일관성 있는 보정
계수 산출 및 활용에 한계가 있음

- 자영업자 소득 추정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의 보고된 소득이 소득 탈루 후 소득이라는 가정 하에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전 소득을 추정한 후, 보고된 소득과 추정
소득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때 소득 추정은
소비함수 추정방법, 소득함수 추정방법, 앵겔곡선 이용법, 수요
방정식 체계를 이용한 추정방법 등이 사용됨
- 전승훈·신영임(2009)의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망라하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소득탈루율을 정리하였음

연구	자료/방법 (단위 %)	00	01	02	03	04	05	06
성명재(2008)	가계조사, 소득함수				17	18	19	19
김봉근 외(2008)	노동패널, 앵겔곡선	42	21	50	24	25	32	
김형준·박명호(2006)	가계조사, 앵겔곡선					3-7		
노영훈·김현숙(2005)	가계조사, 소득함수				50			
전병목·안종석(2005)	가계조사, 수요방정식				22-36			

연구	자료, 방법	94	95	96	97	98	00
강석훈·박찬용(2003)	도시가계, 소비함수			39			
현진권·김용대(2003)	도시가계, 소비함수			20			17
성명재(1999)	도시가계, 소득함수	48	49	52	46	48	
이철인(1998)	대우패널, 소비함수	52	45				
유일호(1994)	도시가계, 소비함수	1987: 10-11 1988: 9-10					

자료: 전승훈, 신영임(2009),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 위의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03~2008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를 이용하여 소득함수 추정방법을 활용한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

을 추정하였는데, 분석기간 동안 평균적인 소득탈루율의 변화는 26.1%~35.8%로 나타났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중산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구 분 (단위: 천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보고소득(A)	16,548 (17,535)	16,541 (17,549)	16,580 (17,636)	16,582 (17,662)	16,426 (17,605)	16,696 (17,987)
추정소득(B)	22,404 (23,391)	23,001 (24,009)	23,078 (24,135)	23,935 (25,015)	25,033 (26,211)	26,012 (27,302)
보고소득 기준 소득세액(C)	1,797	1,780	1,735	1,785	1,744	1,719
추정소득 기준 소득세액(D)	2,429	2,501	2,330	2,520	2,686	2,672
소득탈루율(1-A/B)	26.14	28.09	28.16	30.72	34.38	35.81
소득세탈루율(1-C/D)	26.01	28.81	25.54	29.17	35.06	35.66
관측수	3,391	3,307	4,293	3,968	3,495	3,453

— 본 연구에서는 보정률 적용의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정책 모의분석에 적용할 보정계수를, 전승훈·신영임(2009)의 분석결과 중 가장 최근 시점인 2008년도 가계동향조사를 기초로 산출된 소득탈루율 35.8%를 반영하여 1-3안으로 설정하였음

- 이에 따라, 미시적 통계자료에 의한 자영자 소득탈루율 추정에 의한 조정방안(1-3안)의 보정계수는, 연구결과의 소득탈루율이 35.8%임을 반영한 소득과약률 64.2%를 적용하여 0.642로 결정하여 이 값으로 공적자료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을 나누었으며, 이것은 1.558을 곱한 결과와 동일한 의미를 지님

다. 국세청 사업소득금액 조정방안별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변동 관련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결과

□ 여기서는 국세청 공적자료 적용 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소득금액 조정방안별 보정계수의 적용이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결과를 살펴봄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세청으로부터 연계되는 사업소득금액 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소득 개념의 공적 행정자료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방안(1안)’을 중심으로 사업소득금액 조정방안별 다양한 보정률 산출근거에 따라 설정된 5가지 보정계수(1-1안 / 1-2-a~1-2-c안 / 1-3안)에 대한 정책 모의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

<p>(1-1안) 한국은행 국민계정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거시지표 기준 소득과약률 53.4%(2009년도 귀속분 기준) 반영 => <u>보정계수 0.534</u>를 적용하여, 조정 전 공적 행정자료 사업소득을 0.534로 나눔</p> <p>(1-2안)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조세재정패널 총수입금액(매출) 대비 사업소득금액 비율을 비교하여 산출된 각각의 보정계수로 공적 행정자료의 사업소득을</p> <p>(1-2-a 안) 전체 사업소득자 대상으로 산출된 <u>0.331</u>로 나눔</p> <p>(1-2-b 안) 기준경비율 신고자 대상으로 산출된 <u>0.568</u>로 나눔</p> <p>(1-2-c 안) 단순경비율 신고자 대상으로 산출된 <u>0.831</u>로 나눔</p> <p>(1-3안)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 미시데이터를 분석한 선행연구에 기초한 소득탈루율 35.8% 반영 => 소득과약률 64.2%로, 보정계수 0.642를 적용하여, 조정 전 공적 행정자료 사업소득을 0.642로 나눔</p>
--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로 가장 엄격한 자산조사 및 확인조사가 적용되는 선별적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초노령연금과 더불어 가장 보편적 대상으로 확대된 복지정책 중에 하나인 보육료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국세청 공적 행정자료 중 사업소득금액 조정방안별 보정계수 적용 시 변화에 대한 정책 모의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소득 보정계수 적용에

의한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

- 우선, 사업소득금액 상향 조정을 전제로 하여 국세청 공적자료를 중심으로 자산조사 시 활용하게 될 경우, 현행 사업소득 파악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유형(공적 행정자료, 신고자료, 확인자료)별 활용빈도가 어떻게 변화되며, 파악된 사업소득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모의분석 결과를 살펴봄
- 다음으로, 개별 복지대상자의 선정 및 급여 시 국세청 공적 행정자료인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보정 및 소득인정액 반영 시,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보육료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가구를 대상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의 변동여부 및 규모에 대한 정책 모의분석 결과를 제시함
 -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국세청 사업소득금액을 보정계수에 의해 상향 조정함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이 높아지고 그 결과 수급자격 상실 및 급여수준 감소가 나타날 수 있음
 - 반면,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의 경우, 현행 보육료 지원제도가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전액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국세청 사업소득금액을 보정계수에 의해 상향 조정함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이 높아질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수급자격 변동이 나타나게 됨

□ 국세청 사업소득금액 조정모형별 보정계수 적용 시 예상되는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한 공적 행정자료 활용정도와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변동 관련 정책 모의분석 결과

- 2011년 8월1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가구원 대상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추출한 자료를 기초로 분석을 실시하였음

- 전체 약 86만 가구 중에서 해당 소득항목이 존재하는 가구는 약 1/4에 해당하는 213,152가구였으며, 이러한 소득을 보유한 가구원은 231,073명, 그리고 이들이 보유한 소득자료 건수는 257,962건임
 - 이 가운데 모의분석 대상인 사업소득을 보유한 가구원의 사업 소득자료 건수는 약 1/4에 해당하는 64,119건(수급가구 기준 57,521가구)으로, 이를 대상으로 공적 행정자료 적용 현황 및 보정계수 적용에 대한 모의분석이 이루어짐
-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선정 시 사업소득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공적 행정자료 활용실태 (사업소득자료 건수 기준)

(단위: 건, %)

변경전 자료 현재 반영된 자료	공적	신고	확인	계
공적	4,048 (6.31)	3 (0.00)	200 (0.31)	4,251 (6.63)
신고	305 (0.48)	5,473 (8.54)	34 (0.05)	5,812 (9.06)
확인	5,355 (8.35)	12 (0.02)	48,689 (75.94)	54,056 (84.31)
계	9,708 (15.14)	5,488 (8.56)	48,923 (76.30)	64,119 (100.0)

- 현행 수급가구 중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된 개별 소득자료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산조사 과정을 통해 변경하기 이전의 상태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선 지자체의 확인에 의해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 사업소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반영하는 사례가 약 3/4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공적자료가 존재한 경우는 약 15.1%에 불과하였으며, 신고자료가 존재한 경우 역시 10%에도 미치지 못했음
- 그러나, 실제 조사과정에서 증빙 등으로 인해 변경되어 추출된 자료의 소득인정액에 현재 반영되어 있는 자료의 유형을 기준

으로 살펴보면, 변경 전에 공적자료가 존재하였으며 그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경우는 전체 사업소득 건수의 약 6%에 불과하였으며, 신고 및 확인된 자료에서 공적 자료로 변경된 경우는 1%에도 미치지 못함

- 신고자료의 활용정도 역시 미세하게 증가하여 약 9%를 차지하였으며, 확인에 의해 반영된 것은 약 84.3%로 더욱 높아짐
- 사업소득 조사과정에서 반영된 자료 유형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소득 금액 변동 및 평균 변화액 (변경 전 자료기준)

(단위: 천, %, 원)

변경전 자료 금액변동		공적	신고	확인	계
감소	빈도	5,140 (8.02)	8 (0.01)	88 (0.14)	5,236 (8.17)
	차이	-283,907	-198,958	-325,170	-284,471
	변경전	286,423	416,250	474,989	289,791
	변경후	2,516	217,292	149,819	5,320
변동 없음	빈도	4,086 (6.37)	5,473 (8.54)	48,656 (75.89)	58,215 (90.79)
	차이	0	0	0	0
	변경전	61,148	254,747	157,039	159,495
	변경후	61,148	254,747	157,039	159,495
증가	빈도	482 (0.75)	7 (0.01)	177 (0.28)	666 (1.04)
	차이	451,244	144,943	425,936	441,299
	변경전	169,484	344,737	33,593	135,212
	변경후	620,739	489,680	459,530	576,511
계	빈도	9,708 (15.14)	5,488 (8.56)	48,921 (76.3)	64,117 (100)
	차이	-127,913	-105	956	-18,646
	변경전	185,801	157,165	255,098	169,883
	변경후	57,888	158,121	254,993	151,236

- 변경 전 자료 유형을 기준으로 현재 반영된 자료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 금액 변동 및 그 수준을 살펴보면, 변경 전 공적자료의 경우 금액이 감소한 경우가 약 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감소한 금액은 약 28만원이었으며, 증가한 경우 약 45만원이 높아졌으나 이러한 사례는 1%에도 미치지 않음

- 신고 및 확인 자료의 경우 거의 금액 수준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결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한 사업소득 파악과 관련하여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직접적인 확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등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 공적 행정 자료의 부재로 인한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 사업소득 조사과정에서 반영된 자료 유형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 소득 금액 변동 및 평균 변화액 (변경 전 공적자료 기준)

(단위: 건, %, 원)

변경전→현재		금액변동	감소	변동없음	증가	계
공적→공적	빈도		0 (0.00)	4,048 (41.7)	0 (0.00)	4,048
	차이		-	0	-	0
	변경전		-	60,995	-	60,995
	변경후		-	60,995	-	60,995
공적→신고	빈도		196 (2.02)	8 (0.08)	101 (1.04)	305
	차이		-268,855	0	458,501	20,941
	변경전		288,308	90,625	228,135	263,197
	변경후		19,452	90,625	686,637	242,256
공적→확인	빈도		4,944 (50.93)	30 (0.31)	381 (3.92)	5,355
	차이		-284,505	0	449,321	230,700
	변경전		286,349	73,889	153,937	275,737
	변경후		1,844	73,889	603,258	45,037

주: 비율은 변경 전 공적자료를 이용한 9,708case를 대상으로 산출함.

- 변경 전 사업소득 자료가 공적 행정자료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공적 자료에서 확인 자료로 변경되어 반영된 사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이 경우 약 28만 5천원이 낮아졌음
- 공적 자료에서 확인 자료로 변경되면서 증가한 경우는 3.9%로 이 때 약 45만원 정도 높아졌으며, 공적 자료에서 신고 자료로

변경된 경우에도 이러한 금액 변화는 비슷하게 나타남

- 다음으로, 위와 같은 사업소득 자료의 유형별 반영 실태를 기초로 가구 단위로 재구성하여 앞서 제시한 5가지 사업소득 조정 모형별 보정계수를 모의 적용할 경우,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변동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선정 시 사업소득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공적 행정자료 활용실태 (사업소득 보유가구 기준)

(단위: 가구, %)

변경전자료 현재 반영된자료	공적	신고	확인	계
공적	3,240 (5.63)	10 (0.02)	138 (0.24)	3,388 (5.89)
신고	432 (0.75)	4,866 (8.46)	45 (0.08)	5,343 (9.29)
확인	4,294 (7.47)	314 (0.55)	44,182 (76.81)	48,790 (84.82)
계	7,966 (13.85)	5,190 (9.02)	44,365 (77.13)	57,521 (100)

- － 사업소득 조정모형별 보정계수를 모의 적용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사업소득 변동에 대한 분석결과
 - 5가지 조정모형별로 큰 차이 없이 사업소득을 보유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약 11% 내외가 사업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에 미치지 않는 일부 가구의 경우 공적 자료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업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가구의 사업소득 증가수준은 보정계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보정계수가 가장 큰 1-2-c안에서 최소 23만 6천원 부터 보정계수가 가장 작은 1-2-a안의 경우 최대 33만 2천원 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한국은행과 국세청의 거시지표 및 통계를 바탕으로 가장 안정적인 보정계수를 산출할 수 있는 1-1안의 경우, 약 27만원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가구(%), 원, 백만원)

구 분		1-1	1-2-a	1-2-b	1-2-c	1-3
감 소	빈도	431 (0.75)	321 (0.56)	439 (0.76)	486 (0.85)	459 (0.80)
	금액 평균	-374,772	-365,060	-382,131	-421,226	-391,981
	금액 합계	-162	-117	-168	-205	-180
변 동 없 음	빈도	50,503 (87.81)	50,503 (87.81)	50,503 (87.81)	50,503 (87.81)	50,503 (87.81)
	금액	0	0	0	0	0
증 가	빈도	6,587 (11.45)	6,697 (11.64)	6,579 (11.44)	6,532 (11.36)	6,559 (11.40)
	금액 평균	270,098	332,067	264,230	236,186	253,900
	금액 합계	1,780	2,220	1,740	1,540	1,670
계	빈도	57,512 (100)	57,512 (100)	57,512 (100)	57,512 (100)	57,512 (100)
	금액 평균	28,122	36,624	27,305	23,262	25,824
	금액 합계	1,618	2,103	1,572	1,335	1,490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87.81%는 사업소득 금액 조정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동이 생긴 가구들 중 사업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각 안별로 0.56~0.8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사업소득이 증가한 비율은 11.36~11.64%로 나타남
- 사업소득 조정모형별 보정계수 모의 적용 시 현재 반영된 자료의 유형별 평균 사업소득금액

(단위: 원)

구분	변경전자료	현재반영 자료 (보정전)	보정후				
			1-1	1-2-a	1-2-b	1-2-c	1-3
공적	430,243	445,014	520,159	611,488	511,245	466,937	495,108
신고	541,648	538,777	564,371	581,662	562,708	554,466	559,724
확인	407,208	408,236	433,370	435,158	433,208	432,420	432,909

- 사업소득 조정모형별 보정계수 모의 적용 시 현재 반영된 자료 유형별 평균 사업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보정 전을 기준으로 신고자료가 약 53만 8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적 자료(44만 5천원), 확인자료(40만 8천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정계수 적용에 따라 역전되는 경향을 나타냄
 - 보정계수가 가장 작은 1-2-a안의 경우 공적 행정자료에 의한 사업소득 수준이 가장 높이 상승하여 신고자료보다도 오히려 높게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행과 국세청의 거시 지표 및 통계를 바탕으로 가장 안정적인 보정계수를 산출할 수 있는 1-1안을 포함한 나머지 모형에서는 앞서 나타난 순위가 변동되지 않고 ‘신고>공적>확인’ 순서로 유지되며 자료 유형별 평균 수준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됨
- 사업소득 조정모형별 보정계수 모의 적용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탈락 및 급여변동 가구규모 및 비율 (사업소득 보유가구 기준)

(단위: 가구(%), 백만원)

구분		1-1	1-2-a	1-2-b	1-2-c	1-3
수급 탈락	가구	1,300 (2.26)	1,570 (2.73)	1,270 (2.21)	1,111 (1.93)	1,217 (2.12)
	급여 감소 합계	232	331	222	187	209
변동 없음	가구	50,503 (87.81)	50,503 (87.81)	50,503 (87.81)	50,503 (87.81)	50,503 (87.81)
급여 감소	가구	5,287 (9.19)	5,127 (8.91)	5,309 (9.23)	5,421 (9.43)	5,342 (9.29)
	급여 감소 합계	622	672	613	538	589
급여 증가	가구	431 (0.75)	321 (0.56)	439 (0.76)	486 (0.85)	459 (0.80)
	급여 증가 합계	162	117	168	205	180

- 마지막으로, 사업소득 상향 조정을 위한 보정계수 적용 가능성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석결과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에 분석자료 상 사업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약 5만 7천 가구 가운데, 약 87.8%는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에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국세청 공적 자료에 의한 사업소득 자료 보유, 연계 및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사업소득 보정에 따른 영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사업소득을 보유한 가구 중 나머지 12% 내외의 가구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수급에서 탈락할 가구는 각각의 보정모형별로 최소 1.93~2.73%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급여감소 총액은 1개월 기준 최소 1억 8,700만원 ~ 최대 3억 3,100만원으로 나타남
- 한편, 수급자격은 유지하지만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가 약 9% 내외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구의 1개월 기준 급여감소 총액은 최소 5억 3,800만원 ~ 최대 6억 7,200만원으로 나타남
- 한편, 급여가 증가하는 가구도 약 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일부 나타나는데, 급여증가 총액은 최소 1억 1,700만원 ~ 최대 2억 5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 국세청 사업소득금액 조정모형별 보정계수 적용 시 예상되는 현행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에 대한 공적 행정자료 활용도와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변동 관련 정책 모의분석 결과

- 2011년 8월1일 기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 및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추출한

자료를 기초로 분석을 실시하였음

- 전체 약 90만 가구 중에서 해당 소득항목이 존재하는 가구는 90%를 상회하는 833,813가구였으며, 이러한 소득을 보유한 가구원은 1,105,669명, 그리고 이들이 보유한 소득자료 건수는 1,303,955건임
- 이 가운데 모의분석 대상인 사업소득을 보유한 가구원의 사업 소득자료 건수는 약 15.5%에 해당하는 202,071건(수급가구 기준 150,207가구)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공적 행정자료 적용 현황 및 보정계수 적용에 대한 모의분석이 이루어짐

－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 선정 시 사업소득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공적 행정자료 활용실태 (사업소득자료 건수 기준)

(단위: 건, %)

변경전 자료 현재 반영된 자료	공적	신고	확인	계
공적	94,278 (46.66)	337 (0.17)	6,889 (3.41)	101,504 (50.23)
신고	556 (0.28)	19,861 (9.83)	94 (0.05)	20,511 (10.15)
확인	22,834 (11.30)	22 (0.01)	57,200 (28.31)	80,056 (39.62)
계	117,668 (58.23)	20,220 (10.01)	64,183 (31.76)	202,071 (100)

- 현행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 중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된 개별 소득자료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산조사 과정을 통해 변경하기 이전의 상태 기준으로 살펴보면, 앞서 제시했던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냄
- 보편적 지향성을 지니고 최근 크게 확대되었으며 자산조사의 엄격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보육료 지원제도의 경우, 확인

- 조사에 의해 반영되는 사례는 약 30(변경 전 자료기준)~40% (현재 반영된 자료 기준)로 나타난 반면, 국세청 공적 행정자료에 의해 반영되는 경우가 약 50% 내외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반면, 신고 자료의 경우 약 10%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한편, 실제 조사과정에서 변경되어 소득인정액에 현재 반영된 자료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변경 전 공적 자료가 존재하였으며 그것이 그대로 반영된 경우는 전체 사업소득 건수의 약 47%로 가장 높았으며, 공적 자료에서 확인 및 증빙 과정을 거쳐 확인자료로 변경 적용된 경우도 약 11%로 높았음
 - 이러한 결과는, 보육료 지원제도와 같이 선정기준이 높고 지원 대상이 확대된 제도의 경우 자산조사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과 더불어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와 같이 공적 행정자료 반영 비중과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 사업소득 조사과정에서 반영된 자료 유형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소득 금액 변동 및 평균 변화수준 (변경 전 자료기준)

(단위: 건, %, 원)

변경전자료 금액변동		공적	신고	확인	계
감소	빈도	16,376 (8.10)	299 (0.15)	3,748 (1.85)	20,423 (10.11)
	차이	-539,080	-1,046,235	-952,617	-622,396
	변동전	556,354	1,438,578	1,348,286	714,604
	변동후	17,274	392,343	395,668	92,207
변동 없음	빈도	94,471 (46.75)	19,845 (9.82)	57,007 (28.21)	171,323 (84.78)
	차이	0	0	0	0
	변동전	390,341	1,140,589	925,699	655,398
	변동후	390,341	1,140,589	925,699	655,398
증가	빈도	6,821 (3.38)	76 (0.04)	3,428 (1.70)	10,325 (5.17)
	차이	1,066,793	445,014	447,168	856,494
	변동전	408,025	572,572	135,153	318,640
	변동후	1,474,818	1,017,587	582,321	1,175,135
계	빈도	117,668 (58.23)	20,220 (10.01)	64,183 (31.76)	202,071 (100)
	차이	-13,184	-13,798	-31,745	-19,141
	변동전	414,492	908,153	1,142,861	644,174
	변동후	401,307	876,408	1,129,063	625,033

- 변경 전 자료 유형을 기준으로 현재 반영된 자료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 금액 변동 및 그 수준을 살펴보면, 변경 전 공적자료의 경우 금액이 감소한 경우가 약 8%로 변화가 나타난 사례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감소한 금액은 약 54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28만원)에 비해 2배 정도 높았음
 - 증가한 경우는 약 3.4%였으며, 증가한 수준은 약 107만원으로 매우 높았음
- 사업소득 조사과정에서 반영된 자료 유형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 소득 금액 변동 및 평균 변화액 (변경 전 공적자료 기준)

(단위: 건, %, 원)

변경전 → 현재		금액변동	감소	변동없음	증가	계
공적 → 공적	빈도		0 (0.00)	94,276 (80.12)	2 (0.00)	94,278
	차이		-	0	125,000	3
	변경전		-	390,341	0	390,335
	변경후		-	390,341	125,000	390,332
공적 → 신고	빈도		260 (0.22)	14 (0.01)	282 (0.24)	556
	차이		-821,271	0	979,386	112,691
	변경전		917,403	926,190	421,897	666,307
	변경후		96,132	926,190	1,401,283	778,998
공적 → 확인	빈도		16,116 (13.70)	181 (0.15)	6,537 (5.56)	22,834
	차이		-534,527	0	1,070,851	-70,696
	변경전		550,528	363,029	407,552	508,110
	변경후		16,001	363,029	1,478,403	437,414

주: 비율은 변경전 공적자료를 이용한 117,668case를 대상으로 산출함.

- 변경 전 사업소득 자료가 공적 행정자료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변경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80%를 차지하였으며, 공적 자료에서 변경된 사례 중에서는 확인 자료로 변경되어 반영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감소한 경우가 약 13.7%로 이 경우 약 53만 5천원 낮아졌고, 반면에 증가한 경우는 약 5.6%로 이 경우 약 107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 위와 같은 사업소득 자료의 유형별 반영 실태를 기초로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를 가구 단위로 재구성하여 앞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해 모의 적용한 5가지 사업소득 조정모형별 보장계수 반영 시 보육료 지원 수급자격 변동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봄
-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 선정 시 사업소득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공적 행정자료 활용실태 (사업소득 보유가구 기준)

(단위: 건, %)

변경전자료 현재 반영된자료	공적	신고	확인	계
공적	68,532 (45.63)	774 (0.52)	4,662 (3.10)	73,968 (49.24)
신고	2,736 (1.82)	17,708 (11.79)	388 (0.26)	20,832 (13.87)
확인	13,969 (9.30)	994 (0.66)	40,444 (26.93)	55,407 (36.89)
계	85,237 (56.75)	19,476 (12.97)	45,494 (30.29)	150,207 (100)

— 사업소득 조정모형별 보정계수를 모의 적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의 사업소득 변동에 대한 분석결과

(단위: 가구, 원, 백만원)

구 분		1-1	1-2-a	1-2-b	1-2-c	1-3
감 소	빈도	4,898 (3.26)	3,723 (2.48)	5,014 (3.34)	5,745 (3.82)	5,298 (3.35)
	금액 평균	-1,037,391	-954,304	-1,055,169	-1,146,234	-1,077,619
	금액 합계	-5,080	-3,550	-5,290	-6,590	-5,710
변 동 없 음	빈도	64,581 (42.99)	64,581 (42.99)	64,581 (42.99)	64,581 (42.99)	64,581 (42.99)
	금액	-	-	-	-	-
증 가	빈도	80,728 (53.74)	81,903 (54.53)	80,612 (53.67)	79,881 (53.18)	80,328 (53.48)
	금액 평균	555,855	1,139,913	498,905	217,104	396,001
	금액 합계	44,900	93,400	40,200	17,300	31,800
계	빈도	150,207 (100)	150,207 (100)	150,207 (100)	150,207 (100)	150,207 (100)
	금액 평균	264,914	597,904	232,527	71,617	173,765
	금액 합계	39,800	89,800	34,900	10,800	26,100

- 먼저, 사업소득 조정모형별 보정계수를 적용할지라도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의 사업소득에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 가구가 약

43%로 나타났음

- 한편, 5가지 조정모형별로 큰 차이 없이 사업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 중 약 53~54%로 절반 이상의 가구에서 사업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소득 금액의 변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가구의 사업소득 증가수준은 보정계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보정계수가 가장 큰 1-2-C안에서 최소 21만 7천 원 증가한 반면, 보정계수가 가장 작은 1-2-A안의 경우 최대 114만원 정도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은행과 국세청의 거시지표 및 통계를 바탕으로 가장 안정적인 보정계수를 산출할 수 있는 1-1안의 경우, 약 56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약 3% 내외의 가구에서는 공적 자료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업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 폭은 모든 모형에서 100만원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 사업소득 조정모형별 보정계수 모의 적용 시 현재 반영된 자료의 유형별 평균 사업소득금액

(단위: 원)

구분	변경전자료	현재반영 자료 (보정전)	보정후				
			1-1	1-2-a	1-2-b	1-2-c	1-3
공적	2,112,869	2,112,869	2,540,430	3,102,438	2,485,577	2,212,907	2,386,263
신고	2,353,779	2,353,779	2,538,347	2,793,125	2,513,734	2,391,156	2,468,881
확인	2,267,841	2,267,841	2,345,831	2,402,490	2,340,513	2,314,390	2,330,659

- 사업소득 조정모형별 보정계수 모의 적용 시 현재 반영된 자료 유형별 평균 사업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신고 자료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적 자료, 확인자료 순서로 나타난 반면, 보육료 지원 수

급가구의 경우 보정 전 기준으로 신고 자료가 약 235만 4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확인 자료가 226만 8천원으로 공적 자료(211만 3천원)에 비해 다소 높았음

-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업소득 조정모형별 보정계수 적용에 따라 보정계수가 가장 큰 1-2-c안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1-2-b와 1-3안에서는 공적 자료에 의한 사업소득 평균이 확인 자료보다 높아지며, 보정계수가 약간 낮은 나머지 모형에서는 공적 자료에 의한 사업소득 수준이 확인 자료뿐만 아니라 신고자료 보다도 다소 높게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한국은행과 국세청의 거시지표 및 통계를 바탕으로 가장 안정적인 보정계수를 산출할 수 있는 1-1안의 경우에는 순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신고 자료에 의한 수준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으며, 보정계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사업소득의 보정에 의한 증가폭이 가장 완만한 1-2-c안의 경우에는 ‘신고>확인>공적’ 순서가 유지되면서 세 가지 자료 유형별 평균 사업소득 수준이 가장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사업소득 조정모형별 보정계수 모의 적용 시 보육료지원 수급탈락 가구규모 및 비율 (사업소득 보유가구 기준)

구분	1-1	1-2-a	1-2-b	1-2-c	1-3
가구	8,564	16,173	7,806	4,015	6,388
비율	5.70%	10.77%	5.20%	2.67%	4.25%

- 마지막으로, 사업소득 상향 조정을 위한 보정계수 적용 가능성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석결과인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의 수급자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과 달리 급여수준의 변동은 없이 수급자격의 변동만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앞서 사업소득 보정에 따른 사업소득 상향 조정 가구가 53%

내외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보육료 지원 수급탈락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최대 10% 이내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 중에 분석자료 상 사업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약 15만 가구 가운데, 사업소득 조정모형 별로 약 90~95%는 수급자격에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보육료 지원수준이 100% 전액지원이기 때문임
 -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사업소득 보정에 따른 영향은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의 경우 사업소득과액에 있어서 국세청 공적 자료를 보유한 가구의 비중은 높고 이로 인해 보정계수 적용 시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 가구가 53% 내외를 차지하지만, 실제 사업소득을 보유한 가구 중 5~10%만이 수급에서 탈락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
 - 각각의 보정모형별로 살펴보면, 보정계수가 가장 큰 1-2-c안에서는 현행 수급가구의 2.67%가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보정계수가 가장 낮은 1-2-a안에서는 약 10.8%의 가구가 탈락할 것으로 나타나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한편, 한국은행과 국세청의 거시지표 및 통계를 바탕으로 가장 안정적인 보정계수를 산출할 수 있는 1-1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약 5.7%(약 8,600여 가구)가 보육료 지원에서 탈락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요컨대, 기초생활보장 및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 소득 보정계수 적용 시 변동에 대한 사전 모의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에 분석자료 상 사업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약 5만 7천 가구 중에서, 약 87.8%는 수급 자격 및 급여수준에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경우에 국세청 공적 자료에 의한 사업 소득 자료 보유, 연계 및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임

- 따라서, 현 상황에서 사업소득 보정에 따른 영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사업소득을 보유한 가구 중 나머지 12% 이외의 가구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이 가운데 수급에서 탈락할 가구는 각각의 보정모형별로 최소 1.93~2.73%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급여감소 총액은 1개월 기준 최소 1억 8,700만원 ~ 최대 3억 3,100만원으로 나타남
 - 한편, 수급자격은 유지하지만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가 약 9% 내외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구의 1개월 기준 급여감소 총액은 최소 5억 3,800만원 ~ 최대 6억 7,200만원으로 나타남
-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 중 약 53~54%로 절반 이상의 가구에서 사업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소득 금액 변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현 상황에서 사업소득 보정에 따른 보육료 지원 수급 가구에 대한 영향은,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의 경우 사업소득 파악에 있어서 국세청 공적 자료를 보유한 가구의 비중은 높고 이로 인해 보정계수 적용 시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 가구가 약 53% 내외를 차지 하지만, 실제 사업소득을 보유한 가구 중 5~10%만이 수급에서 탈락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
- 한편, 보정계수 산출 근거 및 안정성 측면에서는 1-1안을, 현행 수급 가구의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변동 폭과 관련해서는 1-2-c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한다면 1-1안을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음
 - 1-1안의 경우, 보정계수 산출근거 자료의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고, 보정 후 자료 유형(공적, 신고, 확인)별 평균 사업소득 수준의 차이, 그리고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수급변동의 규모와 비율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사업소득을 보유한 가구 중에

수급탈락 2.26%, 급여감소 9.19%, 그리고 급여증가는 0.75%로 나타남

- 보육료 지원의 경우, 사업소득을 보유한 가구 중에 수급탈락 비율은 5.70%로 나타남

3. 부양의무자 관계 및 지출실태 확인을 위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 연계 확대 및 활용방안

□ 부양의무자 관계 확인을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연계 필요성

○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구성하는 주요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 및 급여수준 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적 요소를 안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제도에서는 이를 폐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부양의무자 자산조사는 지난 10년 동안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한 바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조사 기준은 지나치게 복잡하며, 기존의 새행정시스템 하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대한 확인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이었음

- 특히, 부양의무자여부의 확인 뿐만 아니라 행정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은 직접 부양의무자와의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고 요청해야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협조를 받아 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부양의무자로부터 제공받은 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만큼 자산조사 업무에 대한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음

- 따라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전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가졌던 딜레마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조사 정도와 자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였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인하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조사 업무수행체계는 획기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한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업무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앞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나 부양의무자 자산조사체계 효율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당시 사전에 연계 구축된 공적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약 300만명 정도의 신규 신청자에 대한 자산조사를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공적 행정자료 연계 확대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촉발시켰다고 할 수 있음

- 이처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 및 공적 행정자료의 연계범위 확대 등으로 부양의무자 자산조사 업무수행체계의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양의무자 자산조사 결과의 적용과 관련하여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가족관계 유지 또는 단절여부 확인 및 이로 인한 실질적인 부양여부에 대한 판단임

- 그러므로, 실질적인 부양관계를 입증할 수 있거나 부양관계를 활용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부분을 공적 행정자료로서 확인 또는 증빙이 가능할 경우, 이와 같은 판단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따라, 국세청 자료의 연계 및 활용 개선방안 중 하나로 그 동안 고려되지 않았던 상시 근로소득자 또는 일부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의 연말정산 결과 중에 인적공제, 특히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정보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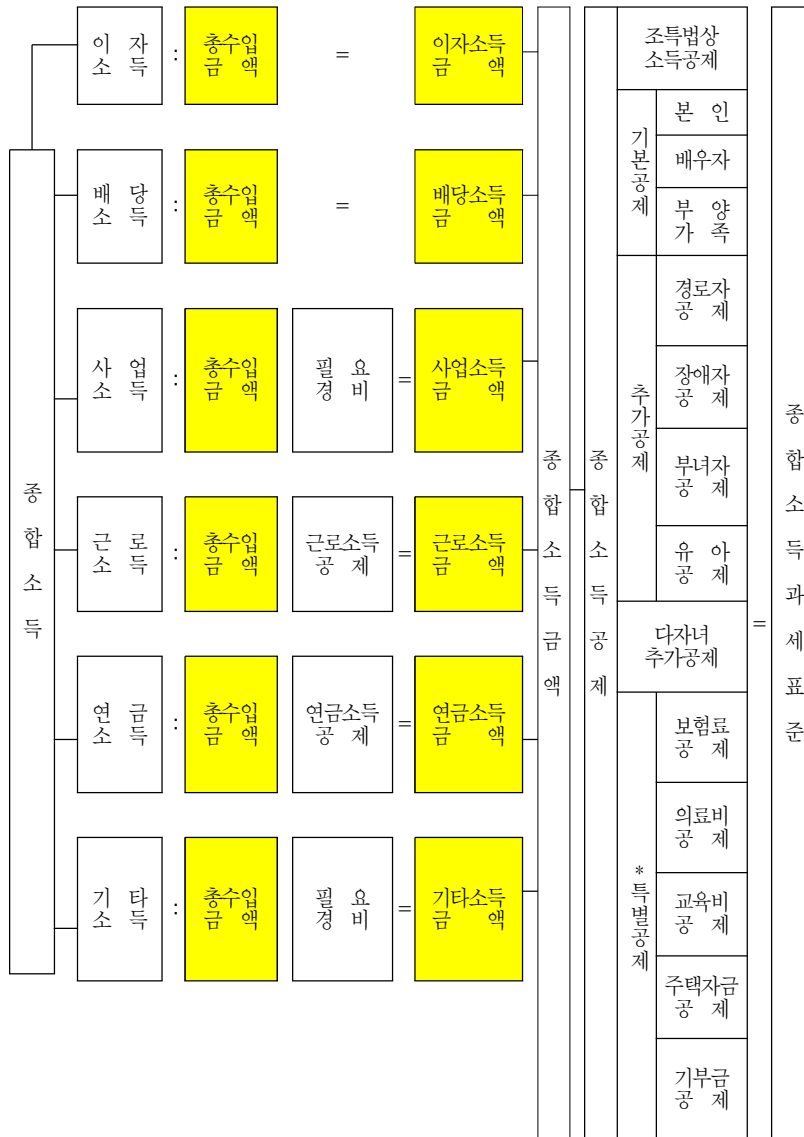
- 지출실태 확인을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연계 필요성

- 한편, 공적 행정자료가 미비했던 기존 자산조사체계에서 조사원칙은

실태조사였다고 할 수 있으며, 공적 행정자료의 연계범위가 확장되고 이를 중심으로 자산조사를 수행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에도 이러한 지출실태조사 및 확인 필요성은 공적 행정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을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유형의 선별적 제도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시에는 상대적으로 공적자료에 의해 소득과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용근로소득, 농림어업소득, 사업소득, 추정소득 부과 등에 있어 지출실태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재산가액 산정 시 이미 산정되었던 재산을 처분(증여, 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에는 처분한 재산가액으로부터 타 재산의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으로 구분하여 본인재산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 때 본인 소비분의 경우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교육비, 위자료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등을 증빙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운영 중인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 상에 취합되는 각종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 또는 연말정산 결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주요 비목별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 수준 등의 정보를 연계할 경우, 이러한 지출실태 확인 및 증빙과 관련하여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공적 행정자료를 보완하여 상담 및 조사를 수행하면서 필요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자료의 연계범위 확대가 필요함

□ 국세청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결과 관련 기초통계
○ 종합소득 구성 및 과세체계 상 각종 소득공제



○ 연말정산 관련 세부 공제항목 및 요건

－ 인적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부녀자 (부양기혼) 출생·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다자녀 추가 공제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 5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 2) × 100만원]

－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연금 보험료	국민·기타 연금보험료	전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퇴직연금	연간 300만원	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주택 및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그 밖의 소득 공제	연금저축	연 3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01.1.1 이후 가입) ※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신용카드	Min [300만원, 총급여 20%]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25%*)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 20%, 직불카드 : 25% 공제
	주택마련 저축	연 300만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장기주식형 저축	분기 300만원 납입	1년차 납입액 20%, 2년차 납입액 10%, 3년차 납입액 5% 공제
	소기업·소 상공인공제	연 300만원 한도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 지출에 대한 특별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특별공제	보험료	건강·고용	전액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전용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의료비	㉠ 본인 등	전액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	
	교육비	취학전아동	1명 300만원 한도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연 300만원 한도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 월세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주택 월세	연 300만원 한도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 1,000만원 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 공제 ※ 상환기간 30년 이상은 공제한도 : 1,500만원
	기부금	정치자금/법정	소득금액 100%	기부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공제 ※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와 비종교단체를 합하여 20% 한도
		특례	소득금액 50%	
		지정(종교)	소득금액 10%	
		지정(비종교)	소득금액 20%	

○ 근로소득자의 인적공제 현황

－ 2009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기준으로 인적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본인공제를 받은 전체 약 1,425만명 중에 위에서 제시한 공제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약 482만명에 이르며, 과세대상자와 면세점 이하의 과세미달자가 367만명과 115만명을 차지함
- 또한, 부양 관계 확인의 주요대상인 70세 이상인 노인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은 경우 역시 약 157만명에 이름

구분	기본공제 합계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계	
	인원(명)	금액 (백만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		(2)		(3)		(4=5+6+7+8+9)	
전체	14,246,964	38,730,574	14,246,957	18,530,433	3,316,026	4,913,648	4,821,479	15,225,483
과세 대상자	8,539,213	28,479,072	8,539,211	12,807,496	2,430,550	3,645,593	3,674,458	12,025,983
과세 미달자	5,707,751	10,251,503	5,707,746	5,782,938	885,476	1,268,055	1,147,021	3,200,510

구분	1인 공제		2인 공제		3인 공제		4인 공제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5)		(6)		(7)		(8)	
전체	1,667,467	2,406,007	1,699,133	5,028,607	812,763	3,644,327	482,858	2,888,819
과세 대상자	1,216,513	1,824,685	1,267,398	3,802,042	659,521	2,967,833	400,152	2,400,906
과세 미달자	450,954	581,321	431,735	1,226,564	153,242	676,494	82,706	492,913

구분	5인 이상 공제		추가공제 계		경로 공제		장애인 공제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9)		(10)		(11)		(12)	
전체	159,258	1,253,734	4,346,354	6,983,841	1,573,707	2,005,100	881,064	1,924,187
과세 대상자	130,874	1,030,517	3,375,222	5,531,691	1,345,910	1,735,616	709,251	1,537,229
과세 미달자	28,384	223,217	971,132	1,452,150	227,797	269,484	171,813	356,959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결과

구분	2008년 귀속분		2009년 귀속분	
	인원(명)	금액(백만원)	인원(명)	금액(백만원)
급여총계	14,045,580	361,878,914	14,294,993	369,570,625
소득명세	13,957,784	353,504,946	14,250,112	362,559,549
급여	13,944,558	293,251,492	14,236,270	300,807,468
상여	7,373,984	59,475,818	7,436,893	60,479,658
인정상여	251,248	411,396	253,618	421,273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2,299	366,240	6,544	688,336
우리사주조합인출금	-	-	48,019	162,814
비과세소득	4,684,670	9,283,777	3,947,535	8,108,905
연구활동비	299,167	371,936	359,401	425,687
국외근로수당	77,487	708,899	82,942	903,178
야간근로수당	927,589	1,164,473	817,867	974,266
출산보육수당	286,237	135,365	368,649	181,465
외국인근로자	155,741	909,809	195,066	1,097,830
그밖의비과세	3,426,282	5,993,295	2,535,902	4,526,480
과세대상근로소득	13,957,784	352,638,103	14,250,112	361,466,457
근로소득공제	13,956,715	131,411,236	14,248,434	121,600,195
근로소득금액	11,381,569	221,226,867	14,250,112	239,866,262
소득공제	11,380,525	103,178,953	14,248,601	118,548,097
인적공제	11,379,701	35,193,731	14,246,969	46,995,515
기본공제	11,379,683	25,018,448	14,246,964	38,730,574
추가공제	4,593,860	8,851,856	4,346,354	6,983,841
다자녀추가공제	2,132,149	1,323,427	2,065,701	1,281,099
국민연금보험료	8,046,419	8,616,588	8,465,521	8,930,288
연금보험료공제	1,538,578	3,166,546	1,489,198	3,134,844
퇴직연금소득공제	11,943	18,866	15,844	24,521
특별공제	7,024,947	34,475,871	7,261,627	37,047,796
보험료	7,021,270	14,453,075	7,258,555	15,304,534
의료비	2,444,387	5,056,255	2,651,207	5,502,348
교육비	2,855,178	8,323,489	2,823,965	9,500,586
주택임차차입금	40,518	36,361	56,699	61,20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744,492	2,189,429	782,156	2,041,899
기부금	3,634,599	4,274,666	3,931,704	4,637,220
혼인·이사·장례비	132,201	142,596	-	-
표준공제	2,948,815	2,485,443	3,216,446	2,776,694
조특법상 소득공제	6,401,470	19,221,908	6,614,561	19,638,439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574,452	281,324	503,283	239,651
연금저축소득공제	1,518,064	3,236,059	1,698,839	3,655,487
소기업소상공인공제	2,228	4,080	4,390	8,454
주택마련저축	1,397,029	1,542,492	1,367,559	1,548,634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1,369	5,181	967	3,841
신용카드소득공제	6,072,779	13,952,687	6,253,955	13,839,775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61,264	189,717	71,406	224,442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49,285	10,368	250,050	112,998
과세표준	7,981,000	118,047,914	8,541,168	121,318,165

□ 국세청 연말정산 결과 연계 확대 및 활용방안

○ 정보연계 대상 확대

－ 현행 연계 및 활용실태

- 현행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국세청 자료 중 연말정산 결과 자료를 전혀 연계하지 않고 있음
- 앞서 언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시 부양 관계 및 부양여부 확인, 지출실태 및 재산 처분 후 소비 지출 등의 확인에 있어서 연말정산 자료를 전혀 활용하지 않음

－ 개선방안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대상의 전년도 기준 연말정산 결과 중, 부양가족공제 명단을 연계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관계 단절여부와 실질적 부양여부, 나아가 부양관계를 통한 공제혜택 수혜여부 등을 공적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함
- 권리와 의무라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소득세 납부(부양가족공제 혜택으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감소)와 복지급여의 대상선정(부양관계 단절로 부양의무자 기준 회피)에 있어 발생하는 이중적 혜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조세정책과 복지정책 간 일관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연말정산 결과 중, 교육비 공제, 월세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전년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이므로 시차와 관련된 한계가 있으나 일선에서 지출실태 확인조사 수행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 활용 가능함

○ 정보연계 주기 및 시점

－ 현행 연계 및 활용실태

- 현행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국세청 자료 중 연말정산 결과 자료를 전혀 연계하지 않고 있으나, 기존 종합소득 자료 연계 시점과 연동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개선방안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연계 가능한 인접 시점(전년도)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연계하여 조회성 자료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제공함으로써 상담 및 조사 시 활용 가능하도록 함
- 정기변동 및 이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 1년 주기로 연간 1회 연계 및 제공하되 5월 종합소득 신고 이후 해당 자료가 확정 연계되는 2011년 10월 시점부터 연말정산 결과 역시 연계하여 최초로 활용할 수 있음
- 시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매년 2~3월 중에 연말정산 및 환급을 완료하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결과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제공 가능한 시점에서 연계하는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과정에서 추진해 볼 수 있음

○ 연말정산 결과의 활용방안

－ 기초생활보장제도 유형의 선별적 제도

- 인적공제 중에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노인, 장애인) 항목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판정 시 실질적 부양관계 단절 여부의 검증 자료로 활용함
- 지출 관련 공제항목의 경우 공적 행정자료에 의한 소득과약이 곤란한 대상에 대한 지출실태조사 참고자료로 제공 및 활용
- 처분한 재산 등에 대한 본인 소비분 입증 시에도 참고 가능
- 2010년부터 도입된 국세청의 월세 소득공제는 임대소득 정보 주거비 지출정보를 확인하는 의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활용 가능

－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보편적 제도

- 보육료 지원제도에서 적용되고 있는 맞벌이가구 대상 근로소득 공제에 의한 선정기준 확대 적용 시에 세법 상 배우자의 소득 금액(100만원 이하) 수준에 따른 별도 연말정산 여부를 기준으로 맞벌이가구 여부 판정에 활용 가능

4.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및 탈 수급 촉진을 위한 근로장려금 산정 및 지급 관련 정보 연계 및 활용방안

□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및 탈 수급 촉진을 위한 정책패키지로서 근로장려금 산정 및 지급액 관련 정보 연계의 필요성 및 전망

○ 근로장려세제(EITC)

-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동시에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면세점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소득보장제도
-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인 성격의 조세제도’ 또는 ‘조세체계를 활용한 소득보장제도’로 표현
- 전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을 기초로 연간 1회 급여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며, 국세청이 직접 운영함

○ 근로장려세제 시행으로 인해 구축된 일용근로소득 자료는 근로장려세제 조기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연계되어 당초 근로장려세제 도입 시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던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근로유인 제고와 더불어 조세행정 및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4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근로장려세제 자영업자 확대 적용은 일용근로소득에 이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자료 구축 및 연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근로장려세제의 정책적 속성으로 인해 급여체계 및 대상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축되는 국세청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data matching 시스템은 향후 국가행정체계 전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부정수급 등 부적정 급여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강화로 제도의 신뢰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임

○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체계 확대 개편, 근로장려세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방안,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계방안, 근로장려세제와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제도사업 간의 연계방안 마련 등 근로빈곤층 근로유인과 탈 수급 촉진을 위한 정책 패키지로서 개별 복지수급자에 대한 급여이력 관리 및 사례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연계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중심의 정보를 타 부처 복지사업과 함께 급여이력 관리 및 사례관리, 더 나아가 향후 근로장려금 대상선정을 위한 국세청 자료와 연계하여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정보 연계 및 활용 개선방안

－ 현행 연계 및 활용실태

- 전년도 귀속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최종 결정 이후에 매년 9월 또는 10월에 연간 1회 연계 및 활용 중임
- 예를 들어, 2011년 3월의 경우 2009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해 2010년 8월말 결정된 최종 근로장려금 정보가 연계되며, 2011년 9월 이후부터 2010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해 2011년 8월말 결정된 최종 근로장려금 지급액 정보 연계 및 제공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용근로자 소득과액 측면에서 제한적 이지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개선방안

- 향후 근로장려금은 근로유인 제공이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각종 복지정책 및 타 부처 사업의 복지대상자 선정 시에 소득 또는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도록 유의함으로써 정책 일관성 및 정합성을 제공해야 함
- 특히, 현행과 동일 주기로 근로장려금 산정에 반영된 근로활동 및 근로소득 등 대상선정에 반영된 정보와 최종적으로 결정된 지급액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및

탈 빈곤 지원을 위한 정책패키지의 하나로 근로활동 및 급여
이력 관리, 종합적인 사례관리에 활용

- 향후, 근로장려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등 소득보장체계와 연계
방안 시행 시, 근로장려금 지급수준에 대한 정보 연계내용을
최초 근로장려금 결정액, 체납세액 징수액, 사회보험료 미납분
징수액(근로장려금을 활용한 사회보험료 납부연계 추진), 이를
제외한 최종 근로장려금 지급액으로 세분화하여 연계해야 함

5. 공적 행정자료 적용원칙 정립을 통한 국세청 자료 활용방안

: 공적 행정자료 적용 vs. 수급자 신청 및 변동신고 의무 강화 vs.
부적정 급여 사후관리 체계 구축

□ 앞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 전후 공적 행정자료에 대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식과 활용실태와 관련된 FGI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건
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소득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상시근로소득과 달리
현재 공적자료에 의하여 연계되는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관련 자
료는 국세청 자료 중심으로 연계 및 활용되거나 기초보장수급자의 경우
추가 조사를 병행하고 있음

○ 그러나, 국세청 자료의 개념 및 속성 상 발생하는 시차 문제가 항상
존재하며, 사업소득 개념이 과세를 목적으로 한 사업소득금액이므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상에 연계 및 제공되는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
수준에 대한 인식과 실제 적용 측면에서 모두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국세청 소득자료의 경우, 국가마다 공통적으로 소득신고 및 정보
제공 시점에서 시차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산조사
당시 적시적절하게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적으로 공적
자료에만 의존하여 자산조사 수행하고, 그 결과 자격 및 급여를
결정(조정)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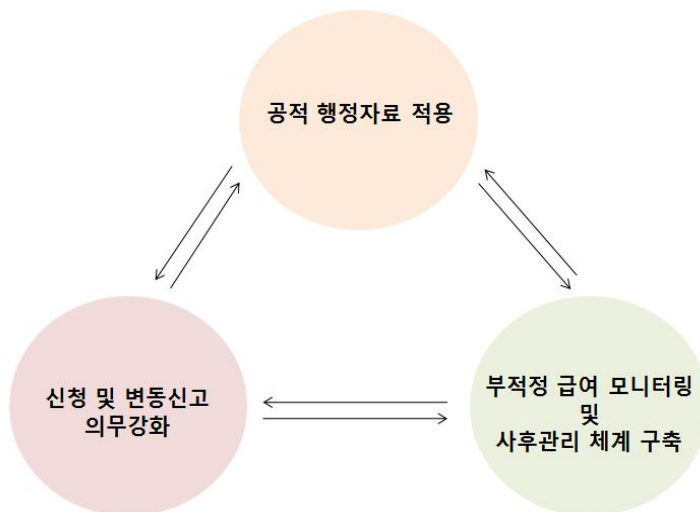
- 현재 상시근로소득의 파악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건강보험자료(매년 4월 이후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와 국민연금자료(매년 6월 이후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 적용)의 경우에도 신규조사나 자격취득·상실에 따른 변동사항 적용에 있어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사업장으로부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시근로자 소득수준 변동 신고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대부분의 상시근로소득자는 국세청 자료보다 시차를 5~7개월 단축하여 전년도 소득자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국세청 자료가 지닌 속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 자료 우선 적용원칙과의 괴리는 소득과약의 점진적 개선 및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국세청 자료의 개념 및 속성에 기반을 두고 각종 복지정책의 선별성 및 보편성 정도와 수급대상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자산조사를 위한 공적 자료로서 국세청 자료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한 원칙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전년도 소득자료를 현 시점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전년도 소득자료 기준 변동사항에 대한 수급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거나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내용을 반영한 이후 사후적으로 확정된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를 정산(호주)하거나 사후관리 전담조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다양한 적용원칙을 설정하여 연계 및 활용하고 있음
- 특히, 시차 문제가 존재하는 국세청 자료의 경우 공적 자료가 연계된 시점에서 제공할 경우,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신고 또는 확인을 유도하는데 활용하거나, 부정정 급여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보로 최근 data matching 방식의 연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부정수급 및 오류를 예방 및 조사하기 복지부와 국세청의 공동 대응을 강조(영국)하고 있음

- 요컨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구축된 각종 인적정보, 소득 및 재산정보를 분류하여 공적 행정자료 변동사항의 주기적인 적용이 가능한 영역과 국세청 자료와 같이 시차 문제를 개선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이를 주어진 조건으로 인정하면서 신규 신청조사 및 변동사항에 대한 소득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반영하고 사후적으로 확인 및 조정을 통해 부적정 급여를 관리해야 하는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특히, 후자의 경우, 최근 강조되고 있는 권리구제 및 부적정 급여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사후관리 전담조직의 확대 운영이 중요하며, 국세청 자료는 향후 이러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주요 자료로 집중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남
- 한편,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자산조사 원칙 하에서 이러한 공적 행정자료의 정확성은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복지정책의 신뢰성과 복지재정 집행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핵심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 그러나, 공적자료의 정확성 문제는 비단 이러한 자료를 구축하고 복지정책 집행에 활용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자료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정부부처 및 각종 공공기관 공동의 문제임
 - － 따라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지라도 원자료의 정확성 및 공적 행정자료 간 정합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복지정책의 특성 및 운영 상황에 적합하게 공적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국세청 자료와 같이 공적 행정자료 우선 적용원칙을 무조건 적용하기에 다소 한계를 안고 있는 소득과 재산항목별 원자료의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연계된 공적자료를 어떤 수준까지 활용할 것인지, 신청조사와 확인조사, 그리고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또는 급여정산 및 보장비용 징수 등의 환수조치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더 나아가 공적 행정자료의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적시에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어디까지 부여하고 그 결과를 어떤 범위까지 인정하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얼마나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의 재정립 문제로 귀착됨

- 이와 관련해서 공적 행정자료 우선 적용원칙과 최초 신청자 및 수급자의 성실한 (변동)신고의무의 조화, 그리고 이에 대한 신뢰 및 적용수준의 결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시행원칙 간 균형과 적절한 역할분담, 선 순환 구조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공적 행정자료 적용 vs. 신청 및 변동신고 의무 강화 vs. 부적정 급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체계의 순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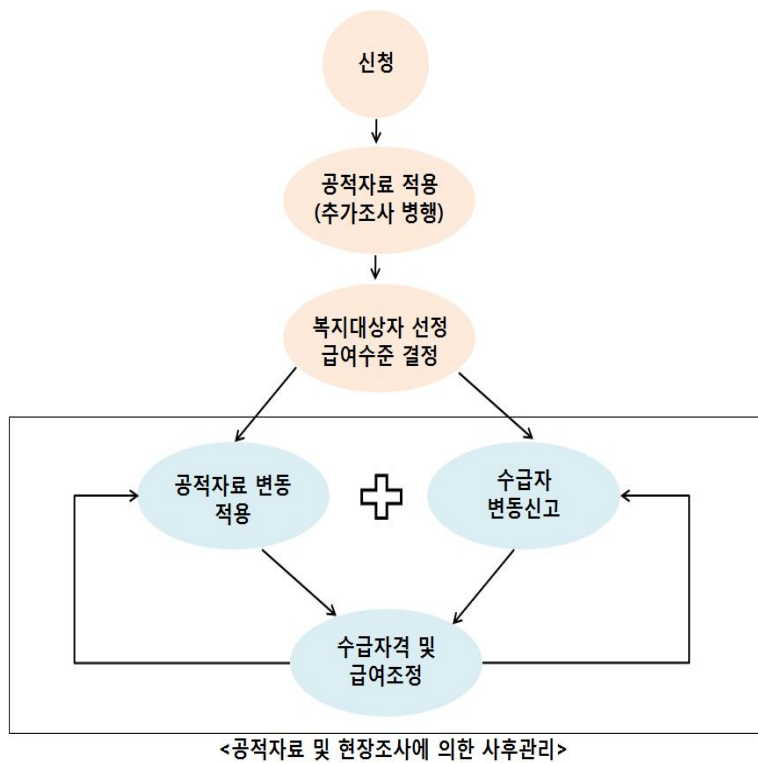


- 특히, ‘신청조사 - 확인조사 - 사후관리(모니터링)’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경계의 설정, 역할 분담,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전담할 조직 및 인력구성과 관련하여 현행 전달체계 상의 통합조사 및 통합관리 조직과 복지급여 권리구제 및 부적정 급여 관리

조직 간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필요함

-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허브 기능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복지정책 대상자의 선정 과정에서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한 적절한 반영 및 사후관리에 대한 요구 및 책임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과정에서 복지급여 모니터링 전담조직의 체계적인 운영 및 구체적 사후관리 수행 프로세스에 대한 확립이 필수적이며, 공적 행정자료 적용원칙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을 통해 국세청 자료의 연계 및 활용방안은 더욱 확대될 것임

〈복지대상자의 신청 - 조사 - 선정 - 변동관리 - 조정 프로세스 상의 공적 행정자료 적용 및 사후관리〉



참 고 문 헌

- 고경환·김보영·강지원(2010).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2007). 『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민연금공단(2009). 『자격업무처리총람』, 2009년 개정판.
- 국민연금공단(2010). 『2010년 하반기 직무실무교재』.
- 국민연금공단(2011). 『국민연금 사업통계(안)』, 2011.1월.
- 국세청(2010). 『근로자와 세금』.
- 국세청(2010). 『근로장려세제 교육자료』.
- 김용득(2007).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조와 질 관리 체계", 『보건복지포럼』, 2007년 3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재진(2005). "근로빈곤층을 위한 선진국의 조세제도", 『재정포럼』, 2005년 12월호, 한국조세연구원.
- 박정수(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 신형준, 김경하, 이동현 외(2008). 『건강보험 보험료부과 형평성 개선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여유진 외(2009).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용하(2010). "자영자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실화 방향", 한국연금학회 제1차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이현주 외(2003).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승훈, 신영임(2009). "자영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Dan Finn, (2009), 「영국의 활성화 정책」, 국제노동브리프 2009년 10 ·
11 · 12월호

DWP, (2009), Impact Assessment for Universal Credit.

DWP, (2009), Single Fraud investigation Services, Impact Assessment.

DWP, (2010), 21th Century welfare.

DWP, (2010), Universal Credit: welfare that works.

Dorn, Stan, (2010), Reconciling House and Senate Health Reform
Proposals: Eligibility, Enrollment, and Retention policies that Will
maximize Health Coverage among the Low-income uninsured.

HM Revenue & Customs, (2010). Child and Working Tax Credits
Error and Fraud Statistics 2008-09.

HM Treasury, (2010), Budget 2010.

HM Treasury, (2010), Spending Review 2010.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

<http://www.hm-treasury.gov.uk>

<http://www.nhs.uk>

NHS, (2010), Personal Social Services Expenditure and Unit costs
England 2008-09.

Stuart Adam · Mike Brewer · Andrew Shephar, (2006), Financial Work
Incentives In Britain.